



# 제주, 세계 평화의 섬 10년, 워크숍

동북아, 한반도 그리고 제주의 10년,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남을 것인가

---

**2015. 1. 27. 화**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

**주최** 4·9통일평화재단, 비무장평화의섬 제주를 만드는사람들, 사월혁명회, 육지사는제주사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가나다순)

**주관**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제주, 세계 평화의 섬 10년, 워크숍

동북아, 한반도 그리고 제주의 10년,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남을 것인가

2015. 1. 27. 화 오후 2시 -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

**초청강연** <동아시아의 질서와 평화> 14:00

-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워크숍** <제주, 세계 평화의 섬 10년을 말한다.> 15:30

사회: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제: 제주 세계 평화의 섬 10년 평가와 과제

- 고창훈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
- 김정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
- 김평선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실장
- 김소연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 제주, 세계 평화의 섬 10년, 워크숍

동북아, 한반도 그리고 제주의 10년,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남을 것인가

<동아시아의 질서와 평화>

이 삼 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동아시아의 질서와 평화

질곡의 인식과 희망의 탐색

2015년 1월 27일

‘평화의 섬’ 제주에서

이삼성 (翰林大)



## 질서란 무엇인가

세 가지 차원의 개념화

1. 질서의 중심부의 성격
2. 질서의 중심과 주변의 관계양식
3. 질서 안에 존재하는 대립과 긴장의 축이 무엇인가

## 동아시아의 질서 2200년

천하체제: 진한(秦漢) 이래 2천 년의 전통시대

\* 과도기: 19세기 중엽~19세기 말: 천하체제와 제국체제의 공존

제국체제: 청일전쟁 이후~1945년

\* 전환기: 1945-1949: 중국 내전 기간

대분단체제: 1) 그 원형의 성립: 1949년 말-1950년 초

2) 한국전쟁의 발발: 대분단체제의 공고화



## 21세기 동아시아

그 고유성을 이해하는 실마리:

20세기 세계에서  
동아시아는 유럽과 무엇이 달랐는가?

20세기 전반기  
전쟁의 야만과 폭력으로 인한 역사적 상처

### • 유럽

#### • 제1차 세계대전:

- 전사: 1,000만
- 부상자 2,000만.
- 민간인 700만 사망.

#### • 제2차 세계대전:

- 전사: 2,873 만
- 포로 및 민간인 학살(democide): 2,100만

### • 동아시아:

#### • 일본 제국 군대에 의한 폭력과 희생

- 포로 및 민간인 학살: 596 만

- 그 중 중국인 300만 희생

\* R.J. Rummel, *Death by Government*, 1994.

그러나 그 역사적 상처가 전후 유럽질서에서는 해소되고, 동아시아에서는 응결(凝結)되고 온존(溫存)된다.

왜 그런 차이가?

역사심리적 문제가

다른 두 차원, 즉 지정학적 긴장 &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긴장과 어떻게 결합했느냐

###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고유성:

- \* 냉전/탈냉전 개념으로 포착할 수 없다
  - 냉전/탈냉전을 넘어서는 연속성이 강하다: 유럽과의 뚜렷한 차이
- \* 그 연속성의 역사적 기원:
  - 전후 동아시아 질서를 결정한 것: 美蘇 관계가 아니다.  
(유럽은 미소관계가 직접 투영된 질서)
  - 전후 동아시아 질서를 결정한 것은 中美관계 (대륙 vs 미일 해양세력)
    - \* 1945-49년의 내전과 신중국의 성립
    - \* 신중국과 미국의 관계의 향방 → 동아시아 질서의 결정
- 소연방의 해체 → 유럽 냉전질서의 해체로 직결
- 동아시아 질서는 중국의 견제와 부상 → 단절이 아닌 연속성
- 이 고유성의 개념화 필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



## 제국체제가 전후 동아시아 질서에 남긴 유산

-지정학적 차원: 러시아 견제와 거대 중국의 경영을 위한 미일 연합의 전통

\* 두 개의 강렬한 이미지: 진주만폭격 & 원폭투하  
→ 내밀한 미일연합의 역사를 지워버림.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차원: '문명과 야만', '문명과 미개', '선진과 후진'의  
문명론적 이분법과 타자화(他者化)의 전통

-역사심리적 차원: 식민주의, 침략전쟁, 전쟁범죄 → 역사적 상처의 전후 계승

##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그 역사적 구성

1. 1949년 말 1950년 초: 대분단체제의 원형(Proto-Grand Division of East Asia)
2. 대분단의 원형 + 한국의 소분단상황 → 파괴적 결합 → 한국전쟁
3. 한국전쟁 → 대분단체제의 고착화, 그 완성

##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왜 “체제” 인가

1. 대분단 기축(美日同盟/中國)과 소분단들: 상호유지적 상호작용
  2. 긴장의 삼차원 간의 상승작용
    - 지정학적 긴장
    -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긴장
    - 역사심리적 간극의 긴장
- 전후에 유럽질서와 동아시아질서의 차이의 본질:  
세 가지 차원들이 어떻게 결합했느냐가 결정.

## 전후 유럽의 냉전체제: 전전 역사적 유산의 치유 장치

독일민족공동체의 통일성 해체, 내면의 정치적/歷史意識 연속성의 해체

그 전제하, 분단 양독: 각각 다른 超國的 이념공동체에 통합

- NATO: 서독과 서방의 이념/安保/經濟的 공동체 통합의 장치

- Warsaw Pact: 동독과 공산권의 이념/安保/經濟的 공동체 통합의 장치

독일 전체와 유럽의 나머지 사이: 지정학적, 이념적, 역사심리적 긴장 해소

→ 역사적 유산의 해체 & 치유

독일 내부 & 동서 국제사회 전반: 역사 담론이 아닌 이념 담론이 지배



## 전후 일본

- 1) 민족공동체의 통일성 & 내면의 역사적 연속성 유지
- 2) 미국 주도 이념공동체에서 일본의 위상:

-Liberal International Oder & Democratic Capitalism의 East Asian Model House  
- 그 지정학적 초석(cornerstone)이자 가장 중요한 보루

- 미일관계, 일본 내부, 대만, 한국: 지배담론 → 반공 담론, not History
- 동아시아 사회들이 일본에 기대하는 전 사회적 역사 반성을 구현할 외교적, 국내정치적, 교육적 계기가 불가능
- 일본의 전후 세대 대부분은 다른 동아시아 사회들과 소통할 역사적 소양을 갖출 기회 자체가 봉쇄됨.
- 그 결과, 제국체제의 역사적 상처: 동아시아에서는 해소가 아니라 응결 혹은 동결(Freeze):
- 제국체제의 역사적 유산의 전후 계승: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근본 인자

## 1990년대 이래 대분단체제의 변화와 지속

- (1) 지정학적 긴장의 변화와 연속성: Europe 상황과 정반대

- 유럽: 소련의 일방적 붕괴 → 동구 공산권 해체 → 냉전체제 해체 →  
European Union

(\* 전후 유럽질서는 미소관계의 직접 투영이었기에)

- 동아시아: 미국 Hegemonic Decline + 중국의 변신·活力·浮上 →  
지정학적 긴장 재충전

(\* 전후 동아시아 질서는 처음부터 중국 변수, 그 향방이 결정적이었기에)

## (2)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긴장: 해체 가 아닌 치환

중국의 개혁/개방, 공산주의 이념의 쇠퇴 → 공산주의/資本主義 긴장 약화

동아시아 민주화 vs. 1989.6 천안문 사태 →  
정치적 권위주의 vs. 민주주의: 긴장의 대체

- 1990년대: 미국 發 文明충돌론

- 2000년대: 중국 發 文明국가론/天下 담론:

- 미국, 일본, 한국: “value diplomacy,” “value-based alliance” 주창

- What is 진정한 民主?: 정치문명의 진정한 표준을 둘러싼  
文明론적 긴장의 대두

## (3) 역사심리적 간극: 역사 담론의 활성화

- 사회적 담론의 중심 무대: 이념 퇴장, 역사 복귀

- 중국(& 한국)의 자아정체성 확대 → “역사적 정의”의 추구

- 일본의 정치와 사회: 돌연 활성화된 동아시아 역사 담론에 준비되어 있지 않음 → 당혹과 자기방어





동아시아 대분단선(大分断線),  
그리고 그 현재

- South China Sea(1990년대 이후: 1975년 이전의 인도차이나 17도선에서 이동)
- Taiwan Straits
- Okinawa Islands (센카쿠/다오위다오 주변 해역 포함)
- Yellow Sea & DMZ on the Korean Peninsula
- 미일동맹의 기존 동아태 해상패권 vs. 중국의 자아 정체성 확장 →  
대분단선의 긴장 누적 & 역학관계 변동에 따른 대분단선의 심리적 이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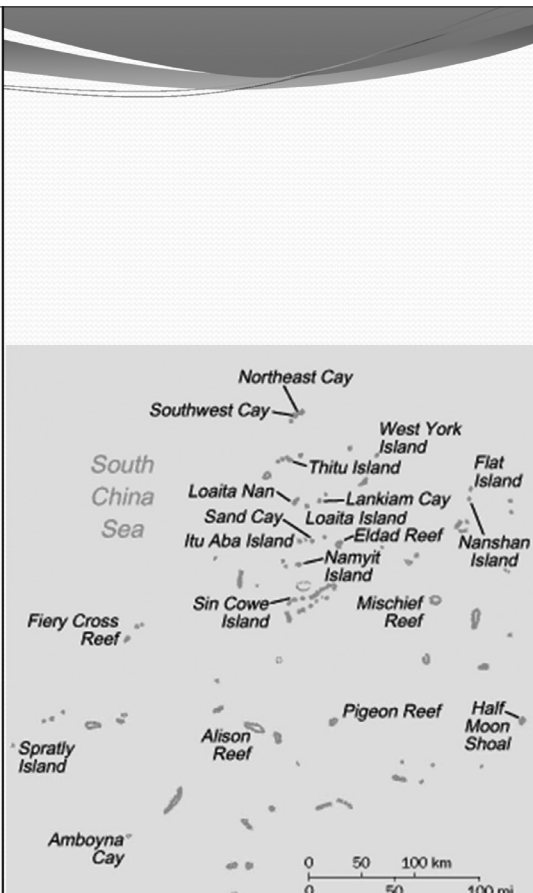
### Konfliktherd Südchinesisches Meer

Von China als Territorialgewässer beansprucht



Grafik: APA, Quelle: APA/Spiegel

APA





한반도-

이미 제1열도선에  
포함된 점 유의

핵심이익(주권영역)  
과 '주권영역'(근대  
일본의 이익선 개념과  
유사)의 중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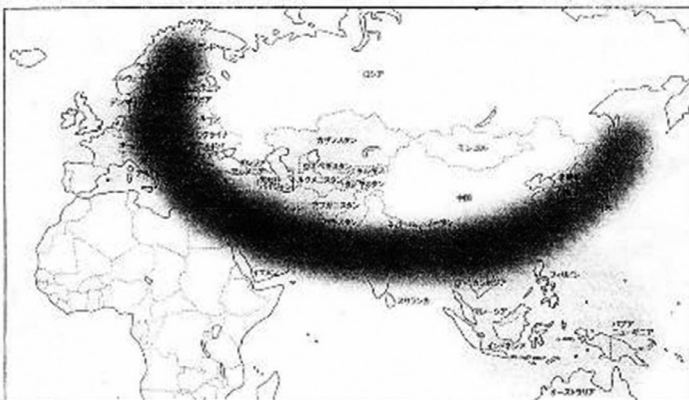


Speech by Mr. Taro Aso,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n the Occasion of the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Seminar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Japan's Expanding Diplomatic Horizons"**

November 30, 2006

附圖：自由與繁榮之弧(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Aso Taro says: .....  
there are the successfully  
budding democracies that  
line the outer rim of the  
Eurasian continent,  
forming an arc. Here Japan  
wants to design an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value diplomacy”

麻生太郎：自由與繁榮之弧



## 2000년대 Taiwan

Taiwan 馬英九 총통: 2008.4 집권  
- 兩岸關係 급진전--경제통합 가속화

- 2008.10: Taiwan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 급증: 65억 달러
- 2010: 64억 달러
- 2011: 58억 달러
- Taiwan 군사력 현대화 본격화 (MD 포함)

### • 경제적 상호의존과 폭력적 갈등 위험의 공존: 왜?

1. 비경제적 긴장 요인들의 중첩: 대분단체제

2. 시장(및 국제무역)을 매개로 한 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

- 1) 사회들 사이의 불균등성장(uneven growth) 촉진: 권력균형 변동→질서의 불안정 요인 (제1차 세계대전의 배경)
- 2) 시장 자체의 불가예측성: 시장의 오작동/붕괴→ 국제질서 파괴 요인 (제2차 대전의 배경)

3. 경제적 상호의존은 그 자체 안에 질서의 불안정 요인을 담고 있으면서도

평화 지속에 대한 착시(錯視)초래 →  
갈등 폭력화 예방을 위한 제도적 투자에 소극적이 됨.

경제적 상호의존 + 양극화된 적대적 동맹체제 →

국제질서에서 가장 불안정한 조합일 수도

1) 경제적 상호의존 + 양극화된 적대적 동맹체제 + 시장의 작동

→ 사회들 사이의 불균등 성장 심화 → 질서 불안정  
제1차 세계대전

2) 경제적 상호의존 + 부정형적 다극질서 + 시장의 오작동/붕괴

→ 국제적 협력의 경제적 토대 붕괴 → 질서 불안정  
제2차 세계대전

남중국해, 대만해협, 오키나와 해역 포함한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서해상

→ 중국의 영토의식 확장 & 재구성 vs. 미일동맹 해상 기득권 사이 긴장 발전.

중국의 입장에서 현재와 미래의 동아시아에서 대전략적 핵심 지역 →

1) 남중국해; 2) 대만; 3) 한반도; 4) 대러시아 관계

\* 남중국해: 아세안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서,

\* 대만: 경제통합을 통한 장기적 통일전략을 통해서,

\* 러시아: SCO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한 유라시아대륙연합의 구성을 통해서  
관리.

\* 한반도: 중국에게 가장 난해한 요소이면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



중국에게 한반도 → 중국의 심장부에 대한 비수, 아니면 최선의 보호막

- 대만 → 중국의 동아태 해양진출 여부의 열쇠
- 한반도 → 중국대륙의 심장부로 직결되는 관문

중국의 국력 팽창 → 영토적 자기의식, 자아정체성의 확장  
그 결과, 한반도의 전략적 의의는 중국에게 더 구체화

북한을 완충지대로 보는 것: 20세기 말까지의 중국의 한반도 의식

오늘의 중국의 한반도 의식

→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 전략으로 진화, 확장 과정

중국의 자아정체성의 확장 →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체성의 재구성에 대한 중국의 기대치 상승.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중국 안보의 파트너를 북한을 단위로 보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시야에 넣고 사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단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통일된 한반도를 포용할 수 있다는 자세로의 전환을 내포한다.

그것은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한국인들에게 한편으로 심각한 도전인 동시에, 깊이 고려해야 할 하나의 기회이다.

## 장차 중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형태의 한미동맹

→ 중국-미국 간 전략적 불균형(strategic imbalance)을 악화시키는 한미동맹의 역할

1) 중국의 전략핵(DF-21[MRBM], DF-5[ICBM])을 완전 무력화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망(THAAD 등)의 핵심기지로 한반도가 기능할 때.

2)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의 제주해군기지

##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장기적 입장: “포용적 불용”?

중단기적으로 포용하되, 원칙적 및 장기적으로 절대 불용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사유의 변화 →  
한국을 자신의 영향권 혹은 적어도 중립지대로 전환

경제 등, 비군사적 영역에서 중국의 능력 확대 자신감 내포

##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는 향후 수십 년간 둘 사이에서 요동 예상:

1) 중국대륙과 미일동맹 사이에 평화공존의 양극화 질서(polarized but relatively peaceful bipolar regional system)

2) 현재와 같은 적대적 양극화 질서(confrontational polarized regional system)

\* 후자, 협력보다는 갈등의 질서에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이런 구조에서 중국에게 최악의 요소 → 한반도가 미일동맹의 군사적 전초기지로 지속되는 상황

그럴수록 중국의 군사안보의 대전략에서 향후 최주요 요소의 하나 →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체성의 중립지대화에 두어질 수밖에 없을 것



##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출구**는 없는가?

대분단체제의 날카로운 대치선들의 회색지대화 모색

회색지대의 확장 & 심화를 위한 상상 →

공동안보를 위한 어젠다의 창출과 지속적인 구체화 노력

## 1. 지정학적/군사적 긴장을 넘어서

동아시아 대분단의 현재적/잠재적 발칸들의 평화지대화

### 1) 평화지대화:

- 그 지대에 속한 땅에 대한 주권을 이웃나라 혹은 추상적 공동체에 헌납하는 것이 아님.

- 그 지대에 속한 땅과 영해와 영공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제한하는 공동안보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지역의 탈군사화를 추구하는 것.

- 남중국해역 (주체: 중국, 타이완, 아세안)

- 타이완해협의 양안과 센카쿠/다오위다오 포함한 오키나와 열도 (주체: 타이완해협은 중국이 주도, 오키나와 열도는 미일동맹이 주도)

- 제주도 남방해역을 포함한 동중국해 (주체: 한중일 삼국, 제주도가 주요 역할)

- 한반도 서해상: 중국과 한국의 심장부들의 전략적 접점 (주체: 한국과 중국)

## 2) 6자회담: 동아시아 공동안보 구축의 제도적 자원

1단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지원 (남북한, 미국 및 중국 간 4자협정)

- 한반도 평화협정 내용에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노력 약속 필요:  
이것은 6자회담 구성원들의 협력 필요.

2단계: 동북아 비핵무기금지대 구성: 동북아 공동안보체제의 출발점

3단계: 6자회담의 제도화 → 5자회담 체제: 동북아공동안보 +  
아세안의 공동노력: 남중국해 평화지대화 노력

## 2.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 민주주의 문명의 진정한 표준이 무엇이어서 하는가에 대한 정치사상의 긴장

中國에 대해 지켜볼 점:

- 선거 민주주의/경쟁적 다당제에 대한 비판:  
‘민정한 민주’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의 복지’ 극대화라는 논리

그런데,

- 1)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는 brutal capitalism이란 비판에 직면
- 2) 서양적 근대가 이룩한 민주주의의 본질 →  
표현과 언론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어떤 집단주의적 주체로 환원될 수 없는, 국가권력에 대한 개개 인간의 '자유'

민주주의를 향한 “중국적 경로”는 논할 수 있으나, ‘중국적 민주주의’는 또 다른 “근대 초극”의 논리로 흐를 위험성.



다른 한편,

중국의 20세기, 어떻게 볼 것인가: 오리엔탈리즘적 문명론에 대한 경계

-중국과 미국, 중국과 동아시아의 다른 사회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체제의 차이를  
‘고정된 문명적 차원의 이질성’으로 규정하는 시각

→ “문명적 타자화”의 위험

-20세기 중국의 역사는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를 향한 역동적인 역사적 실천의 과정.

-20세기 중국사: 어떤 사회보다도 역동적이고 심오한 사회정치적 변동의 기록 → 공화주의 혁명(1911), 공산주의 혁명(1949), 자본주의 경제혁명(1980-90년대), & 미완의 자유주의 혁명(1989).

\* 20세기 중국인 → 혁명의 전문가: 마오가 말한 ‘영구혁명’의 비(非)마오적인 구현

\* 특정한 역사적 시대 안에서 중국과 나머지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차이를 “문명적 차이”로 규정하는 것: ‘문명의 형이상학’

### 3. 역사심리적 간극을 넘어서

Dilemma 1: “반성하지 않는 일본,” 그 기원의 이중성

- 1) 좁게는 한 사회의 자기성찰의 미숙
- 2) 큰 맥락에서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구조적 속성: 동아시아 질서 자체의 문제

Dilemma 2: 역사 반성 촉구의 필수성과 그 방식의 역기능

- 1) 반성거부의 일본 → 대분단체제 지속의 보장 장치
- 2) 불가능한 것의 “강요” → 대분단체제의 역사심리적 간극의 해소가 아닌, 지속과 심화의 장치로 역기능:

이것이 “동아시아 역사반성 딜레마”의 요체 →

동아시아 대분단체제가 내장(內藏)하고 있는 정신적 폐쇄회로의 핵심.

동아시아 역사 문제 딜레마 해소의 관건:  
역사의 반성과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의 역사 대화의 길은 없는가?

역사 대화 방식의 제도적 전환에 대한 사유 필요

출발점:

- 1) 책임의 인정과 보상의 요구는 반드시 동아시아 사회들 간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가해 사회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대화 방식
- 2) 가해자 사회와 국가가 진심과 자발성을 갖고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기까지 정치외교적 압박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
  - 역사 대화와 반성의 문제를 각 사회의 국가권력이 주도하는 상태는 문제.
  - 역사 담론이 국가권력의 정치적/민족주의적 동원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역사 대화 추구.
- 3)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의 진실 규명과 화해를 모색하는 방법에 관한 보편적인 담론의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

<역사의 반성과 화해를 위한 동아시아 진실연구위원회>

<역사의 반성과 화해를 위한 동아시아 정부간 협의회 >



“권고하되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

반성과 화해는 자발성이 절대 긴요한 요건.

- 그 자발성을 촉진함이 진정한 화해, 그리고 대분단체제의 정신적 기반 해체에 필요한 길.

이로써 추구하는 역사 대화의 의미:

- 1) 역사의 반성 문제를 국가권력들 간의 직접적인 정치적 대립의 문제로 부터 한 걸음 분리시킨다.
- 2)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의 문제에 관련하여, 동아시아 사회들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그 역사와 미래지향적 규범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지역 차원의 공동체적 접근의 한 모델을 구축.

## 이 모든 노력의 전제이자 중심 →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

1. 군사동맹 의존과 군비경쟁 노선 → 철저히 실패한 정책 :북한 핵개발 촉진  
대안은 한반도 평화협정 → 한국의 국가안보

2.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안보

북한의 정치·사회에 대한 절망, 그리고 희망의 끈:

- 1) 모든 역사의 동태성;
- 2) 위기의 20년이 계기가 된 변화의 시작:  
역압 사다리의 바닥에 있던 서민/여성이 주도하는 사적 경제  
(풀뿌리 자본주의)의 성장

→ 전체주의적 국가의 경제사회적 기반: 근본적 변화 시작

남북한의 변화를 통한 만남 → 그 평화적 촉진에 희망

3.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초석.





##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출구의 모색<sup>1)</sup>

이 삼 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사회와철학연구회 2014년 12월 학술심포지엄  
(2014년 12월 27일)  
송실대학교 진리관 516호

### 1. 20세기 동아시아: 제국체제의 유산과 대분단체제의 형성

전후 유럽은 냉전에도 불구하고 존 루이스 개디스의 말대로 “긴 평화”(long peace)의 시대였다.<sup>2)</sup> 반면에 동아시아의 전후(戰後)는 중국 내전,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을 포함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로 점철된 열전과 냉전의 범벅이었다.

제국체제 안에서 발전한 파시즘과 전쟁이 수반한 야만과 폭력은 동아시아에서보다 유럽에서 더 체계적이고 광범하게 자행되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전후 질서에서 남긴 역사적 유산은 유럽이 아닌 동아시아에서 더 심각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는 여전하다. 유럽은 경제와 외교안보에서 모두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에게 ‘공동체’는 여전히 신기루와 같다.

전후 동아시아 질서는 유럽질서와 달리 냉전·탈냉전을 넘어 고유한 연속성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전후 세계에 대한 국제정치학의 지배적 개념들은 ‘냉전·탈냉전’ 담론이다. 이것으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본질을 포착하기 어렵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은 냉전·탈냉전의 이분법을 넘어 전후에서 오늘까지 지속되는 이 질서의 연속성에 관한 개념화한 시도이다.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동아시아 질서는 물론 크게 다르다.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통합된 후 경제적 상호의존은 심화되었고, 지역내 국제제도적 변화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대분단선’을 따라 존재하는 긴장은 여전히 뿌리 깊다.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 주축의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쇠퇴하기는커녕 갱신되고 재활성화 되어왔다. 2000년대 들어서 가시

---

1) 이 글은 2014년 11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한겨레-부산시 주최 ‘부산 한중일 평화포럼’에서 발표된 필자의 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출구 모색의 방향」(Exploring Exits from the East Asian System of Grand Division)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을 대부분 생략하여 압축하고 일부 다듬은 내용임을 밝힙니다.

2) John Lewis Gaddis,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화된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질서의 지정학적 긴장을 더욱 촉진했다. 1990년대 탈냉전과 더불어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역사논쟁도 활성화되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 그 구조를 부각하여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질서 전체와 그 일부인 한반도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 상호작용은 어떤 지속적 패턴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통합과 상호의존의 외관 뒤에 도사린 동아시아적 갈등의 함정에 한반도는 가장 취약하다. 그만큼 치열한 체계적 인식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라는 개념은 이 물음에 나름의 답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진한(秦漢) 이래 전통시대 2천년은 ‘천하체제’로 개념화할 수 있다. 황하문명 너머의 내륙아시아와 동남방의 사회들이 중국 중심 질서에 통합되어 동아시아 세계 전체에 일정한 질서가 구축된 것은 진한 이래 2천 년의 시기에 속한다. 그 장구한 시기 중국인과 다른 동아시아인들은 ‘천하’라는 개념으로 그 질서를 표상했다.

아편전쟁이 벌어져 중국이 반(半)식민지로 된 19세기 중엽에서 19세기 말 청일전쟁까지의 시기는 중국 중심의 천하체제와 서양 중심의 질서가 공존하던 과도기였다. 청일전쟁 이래 동아시아는 명실상부하게 ‘제국체제’로 전환된다. 중국은 더 이상 속방(屬邦)을 거느린 천하의 중심이 아니었다. 질서의 중심은 서양 제국주의와 일본의 연합으로 구성된 해양 제국체제로 이동한다. 특히 청일전쟁의 말미에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과 만주 점령 사태가 벌어진 세기의 전환점에서 1940년 전후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질서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아태지역의 두 제국이 한편 갈등하면서도 다른 한편 ‘러시아 견제’와 누구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 중국의 경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연합했다. 두 나라는 권력정치적 흥정과 협상에 기초하여 상호적응하며 협력하는 ‘미일 콘도미니엄’의 체제를 운영했다.

1940년을 전후하여 일본은 ‘중국에 대한 공동경영’이라는 ‘미일 콘도미니엄의 대전제(大前提)’를 파기하고, 중국 대륙 전체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위를 추구한 대륙주의의 길을 결정적으로 선택했다. 그것을 본질로 한 ‘대동아공영권’ 추구는 1941년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귀결된다. 그렇게 시작된 동아태 패권전쟁은 원폭 투하와 함께 막을 내린다. 진주만 폭격과 원폭 투하라는 두 건의 충격적인 이미지 때문에 19세기 말 이래 존재한 미일 간의 내밀한 지정학적 연합의 역사에 대한 기억은 거의 지워져서 간과되곤 한다. 미일 콘도미니엄의 내적 갈등의 기억만 남고 상호적응과 공생의 역사는 탈색된 것이다.

미국은 애당초 중국 경영을 위해 일본을 개항시킨 장본인이었다.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지정학적 전략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그 기축이었다. 역외(域外)의 해양 세력인 미국이 19세기 말 이래 동아시아의 준(準)대륙세력으로 발돋움한 일본과의 연합을 통해서 아시아대륙을 경영하기 위해 구성하고 유지한 일본과의 지정학적 연대는 태평양전쟁 시기를 제외한 지난 1세기의 대부분에 걸쳐 있는 유서 깊은 것이다. 이 연합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과 뒤이은 난징대학살 사태에도 불구하고 1940년 전후까지 지속되었다. 일본에게 대륙침략과 전쟁 수행에 불가결했던 폐철과 항공폭탄을 1938년까지, 전투기와 폭격기에 긴요한 항공유는 1940년 중엽까지 계속 공급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역시 결정적 전략물자인 석유의 대일본수출도 1941년 7월까지 지속했다.<sup>3)</sup> 그러럼 20세기의 전반의 약 반세기에 걸친 동아시아 질서를 ‘제국체제’라고 부

3) The China White Paper (Originally issued as *United States Relations with Chin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riod 1944-49*,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3573, Far Eastern Series 30, August 1949),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7, pp.24-25;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근대 동아시아와 말기조선의 시대구분과 역사인식』, 한길사, 2009, pp.502-503.

르는 한 가지 이유는 그 시기의 ‘문명’과 ‘질서’가 동아시아인들에겐 주로 일본이 주도한 ‘제국’의 개념으로 표상되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제국체제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끝이 난다. 전후 유럽엔 미소 양극질서를 직접 투영하는 동서 냉전체제가 자리 잡는다. 동아시아 질서의 행방은 그보다 좀 더 기다려야 했다. 중국에서 1949년까지 지속된 내전과 그 결과가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본질을 결정했다. 이후 동아시아는 유럽과 다른 길을 걷는다. 그 길을 필자는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라고 부르고 있다.<sup>4)</sup>

‘냉전’ 혹은 ‘냉전체제’라는 개념은 그 안에 많은 요소들을 포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후 미소(美蘇) 관계가 다른 모든 요소들을 지배하고 결정지었다는 관념이 그 핵심을 이루는 개념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냉전은 탈냉전과 마찬가지로 미소관계가 개념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가운데 다른 모든 인과관계에 열쇠 역할을 해온 개념이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은 전후 동아시아질서를 해명함에 있어서, 미소관계와 냉전·탈냉전 개념이 헤게모니적 위치를 장악해온 그 간의 담론체계를 일정하게 극복하고자 한 시도였다.<sup>5)</sup>

## 2. 왜 ‘대분단체제’인가

국제정치학에서 오늘날 핵심 주류로 통하는 구조 현실주의 시각은 국제질서의 성격을 판단할 때 주요 강대국의 수를 뜻하는 극성(polarity)을 중시한다. 물론 그것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저마다 국가와 사회는 역사적으로 확인되어 온 지정학적 전통과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sup>6)</sup>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 특히 지역 질서에서는 국가들 간에 갈등과 연합의 구조가 일정한 지속성을 띠 수 있다. 그 갈등과 연합의 구조는 특히 지역 질서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세계질서 전반에서는 초강대국의 숫자

4) 이삼성,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과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구조와 그 함의」, 2004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대전 호텔 스파피아, 2004년 6월 24-25일. 자료집 VIII, 196-236면; 이삼성,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에 관한 일고: '대분단체제'로 본 동아시아」,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4호(2006년 겨울, pp.41~83); Lee, Samsung, "The Structure of Great Divide: Conceptualizing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Democracy, Empires and Geopolitics," organized by Academia Sinica, Taipei, December 10-12, 2011; Lee, Samsung, "Beyond the East Asian Grand Division: Imagining an East Asian Peace Belt of Jeju-Okinawa-Taiwan Islands," Nam-Kook Kim, ed., *Globaliz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and Asia*, Farnham, England: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9, pp.161~179.

5) 2000년대 초 이래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을 제기했을 때, 그것은 처음부터 전후 동아시아질서를 전후 유럽에 대한 인식과 사실상 다름없이 미소냉전체제의 투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비판이었다. 중국 내전과 그 안에서 중국사회의 선택으로 재구성된 신중국과 전후 미국 점령 체제하에서 사실상 일체화 되고 한국전쟁 발발 후 1년 만에 동맹으로 공식화되는 미일간의 연합 사이의 다차원적 긴장을 기축으로 하는, 냉전체제라는 다분히 미소관계 중심의 일반 개념으로 포괄하거나 환원될 수 없는 동아시아 질서의 독자성을 주목한 것이었다. 제국체제에서의 일본의 역사적 유산이 전후 미일연합에 고스란히 계승됨으로써 대분단 기축관계가 역사심리적 간극의 차원을 짊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질서의 기축은 단순히 미소관계의 투영도 아닐 뿐 아니라 미중관계로 환원될 수도 없다. 이 점들은 2004년에 한국정치학회에서 발표된 후 2006년의 논문에서도 명확히 하였다(이삼성[2006],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에 관한 일고: '대분단체제'로 본 동아시아」).

6)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지정학적 구조’는 “주요 정치체들의 지리적 배치 + 주요 정치체의 갈등·연합의 패턴 (이데올로기 요소 포함)”을 가리킨다. 어떤 사회 혹은 국가의 ‘지정학적 정체성’이란 “그 사회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 구조 + 그 사회(국가)의 지정학적 대전략 (갈등과 연합에 관한 사유 및 선택의 장기적 패턴)”을 말한다.

와 그들 사이의 관계양식이 결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질서의 경우는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세계 수준의 권력분포에서 보면 '이류 국가들' 혹은 '차상위 강대국들'이 지역질서의 차원에서는 세계적 초강대국보다 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질서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차상위 강대국들이 초강대국들과 함께 어떻게 갈등하고 연합하면서 지역질서를 규정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전후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미소 간 냉전의 구조와 결합하면서 지역질서를 규정해온 방식이 특히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sup>7)</sup> 전후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은 냉전시기에는 차상위 강대국들이었다. 탈냉전 시기를 넘어 2010년대의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면 일본과 러시아는 차상위 강대국들이라 말할 수 있다.

둘째, 어떤 지역의 국가 사회들의 상호관계의 역사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역사의식은 그 지역 국제질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1990년대 이래 '구성주의'라는 이름 아래 국제정치 이론에서 유행해진 논의이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 자체는 결코 구성주의 학자들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 지역 사회들 사이의 관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 지역 미래 국제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은, 국가들 사이의 권력분포가 국제질서를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이라는 현실주의 인식만큼이나 인류의 세계인식에서 오래된 유서 깊은 관점이다. 어쨌든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은 역사와 역사의식이 미래의 전망과 그 미래 속에서 사람들의 행위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셋째,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이미 심화되고 있던 1990년대 말 이후의 시점에서 동아시아 질서에 존재하는 냉전·탈냉전을 넘어선 통시적 연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였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 여부는 지역질서에 물론 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 교류협력과 상호침투의 심화에 의해서도 결코 해소되지 않는 긴장 지속의 구조가 있다고 보고, 그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개념화이다. 초국경적 교류 확대와 경제적 상호의존이 반드시 안보와 같은 다른 영역의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아님은 멀리는 1세기 전의 제1차 세계대전, 가장 최근에는 지난 10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웅변해준다.

동아시아 대분단의 구조를 '질서'가 아닌 '체제'로 개념화한 것은, 질서라는 개념은 그것을 구성하는 인자들과 그 인자들 사이에 지속성 있게 존재하는 상호작용 패턴을 강조하는 성격이 약하기 때문이다. '체제'는 그것을 구성하는 인자들 사이의 뚜렷하고 체계적으로 존재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더 주목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질서를 '체제'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해진다. 먼저 체제의 전체를 구성하는 인자들을 명확히 해야 하고, 이에 바탕하여 그 인자들 사이의 지속성 있는 상호작용 패턴의 존재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7) 전후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상위 강대국에 불과하면서도 지역질서에서 결정적 변수가 된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지정학적 차원이다. 아시아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일 중국의 영토적·인구적 광대함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 경제력과 군사력에서의 단순비교로 재단할 수 없는 차원이 있다. 둘째, 역사의식의 차원이다. 일본은 패전 후 미국에 점령당한 사회로서 미국의 하위 동맹파트너로 전락했지만, 그 이전의 제국체제 시기에 일본이 질서 중심부로서 존재한 사실과 바로 그 시기에 전통시대 문명의 중심으로서의 중국에 일본이 가한 역사적 심리적 상처의 깊이, 그리고 그것이 전후 동아시아 전반의 사이키(psyche)에 갖는 의미의 심중함에서 그러하다.



### 3.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구성: 분단의 중층성과 그 역사적 형성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첫 번째의 구성적인 특징은 분단 구조의 중층성이다.

#### (1) 대분단의 기축과 소분단체제

대분단체제는 분단의 이중구조를 내포한다. 먼저 중국대륙을 한편으로 하고, 미국과 일본 사이의 해양동맹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대립구조가 있다. 이것이 대분단의 기축관계이다. 이 기축관계와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전후에 적어도 세 지역에서 형성된 소분단들이 있다. 이것은 국지적 분단체제, 또는 민족분단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반도, 타이완해협, 인도차이나(~1975)에서의 분단들이 그것이다.

#### (2) 동아시아 대분단 기축의 본질과 제국체제와의 연속성

전후 유럽질서는 미소의 전 지구적인 냉전적 대립구조를 그대로 투영했다. 독일이 미국과 소련의 영역으로 분열되고, 각각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동맹과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 동맹에 나뉘어 소속되었다. 전전(戰前)의 유럽내 분열은 전후(戰後)의 미소간 분열로 완전하게 대체되었다. 이 질서는 미소간의 대립을 기축관계로 하고, 독일의 분열과 동서 유럽의 분열이 그 기축관계에 완벽하게 조응했다. 제국 시대 유럽의 균열구조는 미소 냉전의 균열 구조로 완전하게 대체되었다.

전후 동아시아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제국체제의 균열구조가 미소 냉전구조로 대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었다. 대분단의 기축관계의 한 축을 구성한 미일동맹(美日同盟)은 제국체제에서의 미일 콘도미니엄의 부활을 내포했다. 제국체제에서처럼 러시아를 견제하고 중국의 위협을 관리한다는, 기실 과거와 근본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과거의 두 제국은 '미일연합'을 부활시킨 것이었다. 전후 소련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중국 공산화의 위협이 커지자, 패전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점령정책은 미일연합에 의한 아시아 대륙 통제(이번에는 봉쇄)라는 유서 깊은 지정학적 전통으로 복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 (3) 전전의 미일연합과 전후의 미일동맹의 차이

다만 전전과 전후의 미일연합은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었다. 첫째, 미일연합이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했던 중국의 위협에 차이가 있었다. 전전에 제국체제의 안정과 이익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구성하는 것은 반식민지 중국의 혼란 그 자체, 그리고 혼란 속에서 내연하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전후에 중국이 제기한 위협은 통일된 거대 중국의 힘, 그리고 그 힘의 기반인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적대적 이념체계였다. 둘째, 전전의 미일연합은 비공식적인 무형의 연합이었다. 반면 전후의 미일연합은 점령국으로서의 미국, 피점령국으로서 일본 사이에 공식화된 주종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미일연합이 보다 완벽한 내면적 일체화를 이룬 것이었다.

#### (4) 전후 대분단 기축의 원형 성립: 신중국의 등장과 미중관계의 폐쇄

동아시아 대분단의 원형은 1949년 10월을 전후한 시기에서 1950년 초에 걸친 시기에 구성되었다. 중국 공산주의 운동은 전후 4년에 걸친 내전을 거쳐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신중국을 성립시켰다. 이것 자체가 동아시아 대분단의 원형을 성립시킨 것은 아니다. 이로부터 수개월 사이에 중국의 대미 인식과 정책, 그리고 신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이 우호적 관계는 아니라도 최소한 상호 외교적 인정을 통해서 평화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느냐 여부가 결정되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틀은 미소관계가 아닌 미중관계가 그 궁극적인 결정자였다는 뜻이다. 미소냉전은 물론 전후 질서 형성에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의 내면적 투쟁과 선택이라는 계기에 의해서만 동아시아 질서에 투영될 수 있었다. 중국 내적 투쟁은 1920년대 이래의 중국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오랜 역사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특히 1945년 이후 4년에 걸친 중국 내전이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기축을 결정했다. 소련은 중국 공산당의 정신적 기원이자 후원자였다. 그러나 궁극적인 선택은 중국 사회의 몫이었다.

그렇게 성립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은 평화적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길을 일찍 중단했다. 그 결정적 시기가 1949년 말에서 1950년 초반에 이르는 시기인 것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논점이자 논쟁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논의가 ‘코언-터커 명제’(Cohen-Tucker Thesis)이다.<sup>8)</sup> 이와 관련한 논의는 1980년대에 특히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 토마스 크리스텐슨은 그 논의의 결론을 “미중 사이에 우호관계의 기회는 없었지만, 평화적 관계(peaceful relations)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는 말로 요약했다.<sup>9)</sup> 다만 신중국의 성립을 전후한 시기에 미국과 중국의 평화적 공존의 길을 폐쇄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낸시 터커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해리 트루만 대통령과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과 스탈린의 관계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1950년 11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신중국과 무역 및 외교 관계를 모색할 것을 희망했다. 결국 터커의 관점에서는 한국전쟁 모의에 대한 중국의 참여가 미중관계 파탄의 원인이었다는 뜻이 된다.<sup>10)</sup>

토마스 패터슨은 정 반대의 관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1949년의 시점에서 중국공산당은 미국과 적어도 두 차례의 관계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공산당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다른 나라들의 대중국 외교관계 모색을 방해했다. 트루만 행정부는 장개석정권에 대한 외교승인 철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마오쩌둥의 중국과 최소한의 잠정 관계(modus vivendi)를 모색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무역 관계나 또는 재건지원을 위한 협의를 제안하지도 않았다. 영국, 노르웨이, 인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곧 마오쩌둥의 중국을 외교 승인했지만, 미국은 끝내 거부했다. 호주, 캐나다, 프랑

8) Warren I. Cohen, "Rethinking the Lost Chance in China: Was there a 'Lost Chance' in China?" *Diplomatic History*, Vol.21, No.1 (Winter 1997), p.71; Warren I. Cohen, "Acheson, His Advisers, and China, 1949-1950," Dorothy Borg and Waldo Heinrichs, eds., *Uncertain Years: Chinese-American Relations, 1947-1950*, New York, 1980, pp.13-52; Nancy Bernkopf Tucker, *Patterns in the Dust: Chinese-American Relations and the Recognition Controversy, 1949-1950*, New York, 1983. Cohen, 1997, pp.72-73.

9) Thomas J. Christensen, "A 'Lost Chance' for What? Rethinking the Origins of the U.S.-PRC Confrontation,"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4 (Fall 1995), pp.249-278; Cohen, 1997, p.74.

10) Tucker, 2013, pp.31-32.

스 등 여러 나라들은 신중국에 대한 외교승인을 원했지만 미국의 요구에 따라 승인을 포기했다.<sup>11)</sup>

결국 신중국 성립 후 미중관계 초기에 어느 한쪽 혹은 양측 모두가 평화공존을 거부함에 따라, 대분단체제의 원형이 구성된 것이다.

#### (5) 대분단체제의 공고화 및 공식화: 한국전쟁과 그 결과

한국전쟁은 그 형성기 대분단체제의 산물이었다. 한국전쟁은 미중 사이에 형성된 대분단 기축의 원형과 한반도에 이미 미소 냉전의 결과로 형성되어 있었던 소분단체제가 파괴적인 결합 반응을 일으킨 결과로 발발하게 된다. 한반도 내부의 무력통일 추구세력이 전쟁을 기획하였고, 신중국이 성립한 후인 1950년 1월에서 5월에 걸친 시기에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 삼자 사이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위한 다자간 모의가 이루어진다. 기획자는 김일성이었지만, 최종승인자는 스탈린이었다. 그리고 스탈린의 최종승인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중국 내전의 승리자인 마오쩌둥의 대북한 지원 약속이었다.

중국 내전의 결과가 한국전쟁의 결정적인 국제적 환경이 된 이유는 적어도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스탈린이 1949년 가을까지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반대하다가 1950년 1월 이후 동의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아나톨리 토르쿠노프 등의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소련의 원폭 실험 성공으로 미국의 핵무기 독점을 무너뜨린 점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내전 승리를 꼽는다.<sup>12)</sup>

둘째, 1950년 1월 9일 주평양 소련 대사 시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은 “유사시 중국의 한반도 개입의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스탈린이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sup>13)</sup> 스탈린은 1950년 1월 말 김일성 남침 계획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기 전에 그 전제조건으로 중국의 개입 의지를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스탈린의 김일성 남침 동의를 전제 조건은 소련의 직접 참전 배제와 유사시 중국의 한반도 군사 개입 약속이었다. 중국 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1950년 5월 14일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에서, 스탈린은 전쟁의 최종 결정은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공동 결정임을 분명하게 밝힌다.<sup>14)</sup> 요컨대 스탈린은 마지막 결정적인 시점에서 김일성의 남침에 대한 승인 문제를 중국에 떠넘긴 것이었다. 그 다음날인 5월 15일 마오쩌둥은 김일성을 위한 만찬을 열었고, 이 회담에서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수용한다. 5월 16일 주중국 소련대사 로시친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은 “마오쩌둥은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진 스탈린과 북한 간의 ‘해방계획’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15)</sup>

스탈린이 중국의 지원을 결정적 전제조건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사실은 바로 그 날 5월 16일 전쟁 발발 이전에 중국과 북한 사이의 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 체결을 적극 독려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스탈린은 그 날 로시친에 보낸 전문에서 “한반도에서 해방이라는 대사

11) Thomas G. Paterson, "Containing Communism in China," Thomas G. Paterson and Robert J. McMahon, eds., *The Origins of the Cold War*, Lexington: D.C. Heath and Company, 1991, p.302.

12) Anatoly Torkunov *The War in Korea 1950-1953: Its Origin, Bloodshed and Conclusion* (Tokyo: ICF Publishers, 2000); 아나톨리 토르쿠노프 지음, 구종서 옮김,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김일성-스탈린-마오쩌둥 기밀문서』, 에디터, 2003.

13) 토르쿠노프, 2003, pp.122-123.

14) 토르쿠노프, 2003, p.125.

15) 토르쿠노프, 2003, pp.131-132.

업이 성취되려면 조약(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이 즉시 조인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북한 동지들의 성공을 보다 굳건히 하여 한반도 문제에 다른 나라가 개입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sup>16)</sup>

넷째, 선즈화(沈志華)의 해석에 따르면 스탈린이 김일성의 한반도 무력 통일 계획을 지지하게 된 이유는 1950년 1-2월 중소우호동맹 체결이 결정됨으로써 소련이 과거에 장개석정권과 맺은 협정으로 획득했던 다렌과 뤼순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략적 해군기지를 한반도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sup>17)</sup> 이 같은 선즈화의 관점 역시 중국 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는 스탈린의 한반도 전쟁 지지에 결정적인 변수임을 전제한다. 스탈린이 국민당 장제스와의 협정으로 얻었던 뤼순과 다렌에 대한 소련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한반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중국 공산당의 내전 승리였기 때문이다.<sup>18)</sup>

이처럼 중국 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를 결정적 배경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은 역으로 대분단체제의 기축을 결정화(結晶化)하고, 국지적 소분단들을 고착시킨다. 따라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일차적 계기는 중국 사회의 선택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었으며, 한국전쟁은 그 이차적 계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대분단체제와 한국전쟁은 상호 견인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 (6) 한국전쟁 이후 대분단 기축의 공식화, 그리고 소분단체제들

전전에 존재한 무형의 미일연합은 전후 6년에 걸친 점령체제 하의 미일일체(美日一體)의 상태를 거쳐서 1951년 9월 일본에게 주권을 회복시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Treaty of San Francisco)과 ‘미일안보조약’(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이 동시에 서명됨으로써 공식적인 미일동맹 체제로 부활한 것이었다. 이 두 조약은 존 다워가 말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다.<sup>19)</sup> 이 체제는 물론 신중국의 강력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결국 1949년 그 원형이 성립하고 한국전쟁으로 공고해진 동아시아 대분단 기축의 공식화에 다름 아니었다.

한반도의 소분단은 1945년 미소 양국의 군사적 분할 점령과 두 강대국 사이의 냉전이 발전함에 따라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 소분단체제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만든 것은 역시 한국전쟁이었다. 그러므로 미소냉전과 중국 공산화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반도 소분단체제는 고착되었다.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 내적 분단은 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라는 조건과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방패 역할에 기초해 성립했다. 중국 국민당 세력과 미국의 관계라는 제국체제의 유산은 타이완 정권으로 수렴되고, 소련 공산주의를 배경으로 한 중국의 자기결정은 대륙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서 타이완해협 양안의 소분단체제가 구성된 것이다.

인도차이나의 분단 또한 제국체제의 유산과 깊은 관계가 있다. 2차 대전 종결 후 약 10년

16) 토르쿠노프, 2003, p.132.

17) Shen Zhihua, *Mao, Stalin and the Korean War: Trilateral Communist Relations in the 1950s*, London: Routledge, 2012, pp.116-118.

18)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그간 국내외 학계의 논의의 전반적 성격은 다음 줄고에서 논의하였다. 「한국전쟁과 내전: 세 가지 내전 개념의 구분」, 『한국정치학회보』제47집 제1호(2013), pp.297-320.

19) John W. Dower, “The San Francisco System: Past, Present, Future in U.S.-Japan-China Relations,” *The Asia-Pacific Journal*, Vol.12, Issue 8, No.2 (February 24, 2014).



에 걸쳐 전개된 베트남 소분단체제의 형성 과정은 제국체제에 저항하며 성장한 베트남 사회 내부의 자생적인 혁명적 민족주의를 한편으로 하고, 제국질서의 복권을 노린 구식민주의 세력(프랑스)과 미국 냉전주의의 결탁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대립구조가 그 핵심이었다. 20)

이렇게 해서 전후 동아시아질서는 중국대륙과 미일동맹을 기축관계로 하고, 한반도, 타이완 해협, 그리고 인도차이나에서 저마다 과거 제국체제의 유산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형성된 소분단들이라는 중층적 분단의 구조로 구성되었다.

#### 4.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긴장의 다차원성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두 번째의 구성상의 특징은 특히 대분단의 기축에 내재하는 긴장 요소들의 다차원성이다.

##### (1) 지정학적 긴장<sup>21)</sup>

전후 유럽질서는 독일과 주변국들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을 해체하고 봉쇄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독일은 분할되었고, 각각 서방과 공산진영의 동맹체제에 종속적으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제국시대의 지정학적 긴장을 해체하고 동서간 이념대결로 완벽하게 대체했다. 반면에 전후 동아시아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견제, 그리고 중국에 대한 통제라는 공동의 지정학적 이익을 공유한 미일 연합이 부활한다. 중국 대륙은 러시아와 연합한 형태로 적대세력으로 부상하였다. 대분단의 기축관계는 사실상 제국체제의 지정학적 대립구조의 재현이었다.

##### (2)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긴장

냉전기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정치체제는 권위주의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녔다. 그 점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다. 북한과 중국이 스탈린주의적 권위주의 내지는 마오주의적 권위주의였다면, 이른바 “자유세계”에 속한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개발독재’(developmental dictatorships)였거나, 혁명도 개발도 없는 약탈적 과두정(predatory oligarchy)에 불과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집권 1965-1986)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집권 1965-1998)는 각각 21년과 33년간 장기집권한 독재자들이었다. 냉전기를 통털어 한국의 민주주의는 건국 후 12년간의 이승만 독재와 25년간의 군사독재 사이에 낀 단 1년에 불과했다. 1945년부터 1988년까지 타이완은 안드레이 란코프의 지적과 같이 “북한과 다소 비슷한 세습적 일당 독재(a one-party hereditary dictatorship)”였다.<sup>22)</sup> 냉전기에 동아시아의 공산 진

20) Fredrik Logevall, *Embers of War: The Fall of an Empire and the Making of America's Vietnam*, New York: Random House, 2012, pp.100-104.

21) 지정학적 긴장(geopolitical tension, geopolitical rivalry)은 복수의 국가들이 동일한 지리적 공간에 대해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거나 확대하려는 경쟁을 함으로써 초래되는 긴장을 말한다.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위한 경쟁은 직접적인 영토적 지배를 확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해당 지역의 다른 사회나 국가들을 자신의 동맹체제에 포섭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한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의 궁극적인 목표가 경제적 지배력의 확대일 수도 있고, 경제적 지배는 부차적인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개념 안에는 복수의 강대국들 사이의 패권 경쟁(hegemonic competition)이 포함된다.

22) Andrei Lankov, *The Real North Korea: Life and Politics in the Failed Stalinist Utopia*,

영과 반공 진영이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에서 보인 이질성은 미국의 냉전주의자들의 허구적인 주장처럼 “공산주의적 노예사회와 자유세계”의 균열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통제경제와 국가주의적 자본주의 사이의 이질성이 그 핵심이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물론 냉전기에서부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차이 외에도 정치체제와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긴장이 물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타이완과 한국,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독재정권들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정치적 권위주의는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정치적 권위주의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이념적 긴장을 겪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결국 1980년대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기 전까지에 있어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사회적 체제의 차이가 핵심이었다. 미국인들이 추구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사유재산과 자유기업의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치와 문화의 영역에까지 깊은 연관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치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는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미국의 권력투쟁과 동맹의 정치에는 별 상관이 없었다는 뜻이다.

### (3) 역사심리적 간극 (제국체제의 역사적 상처의 응결)

청일전쟁 이후 일본제국주의는 서양 열강과 함께 중국을 반식민지화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이어서 일본은 1930년대 이후 중국대륙에 대한 일본의 침탈과 제노사이드 차원의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이 역사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내밀한 심리적 기반이다. 2차 대전 기간 유럽에서도 침략국인 독일에 의하여 가공할 전쟁범죄가 범해졌다. 그러나 그 대상은 유대인이라는 유럽 공동의 타자(the common Other)에 대한 폭력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 전쟁기간 서방은 전체가 놀라울 정도로 침묵을 지켰다. 미국인들은 근본적으로 “홀로코스트에 대한 방관자들”이었다.<sup>23)</sup> 이 현상은 유대인들이 당시까지만 해도 서양사회들 전반에서 고립된 인종적 섬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고유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유럽에서 자행된 전시 제노사이드의 주된 피해자가 유럽 대부분의 사회에서 주변자적 존재였다면, 일본이 범한 전시 반인류적 범죄는 수천 년에 걸친 동아시아 전통 문명의 중심을 자처하는 사회의 한 가운데에서 벌어졌다. 이 사실은 향후 동아시아질서의 심리적 근저에 심오한 충격을 던지는 것이었고, 그것이 동아시아의 전후 질서에 미친 충격의 정치적 성격은 더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었다.

전후 유럽과 동아시아 질서의 차이는 침략국이자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과정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전후 유럽에서는 독일 지배세력에 대한 강력한 해체 작업 속에서 전혀 다른 독일, 말하자면 ‘반성한 독일’이 등장했다. 그것은 전후 유럽통합과정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전후 아시아질서에서 일본은 미국의 냉전전략에 따라 반성하지 않은 지배엘리트가 복권된다. 군국주의 일본의 지배엘리트가 전후 일본의 재건을 지도했다. 이렇게 형성된 전후 동아시아 질서 안에서는 일본이 대륙에 남긴 전쟁범죄의 상처는 미국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였다. 일본과의 굳건한 해상동맹의 재구성을 통해서 아시아의 붉은 대륙을 봉쇄하려는 미국 냉전전략의 내밀한 심리적 기반이 되어 주었다.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110.

23) Thomas G. Paterson and J. Garry Clifford, *America Ascendant: U.S. Foreign Relations Since 1939*, Lexington, M.A.: D.C. Heath and Company, 1995, pp.29-33.

## 5.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체제'적 성격: 상호유지적 상호작용의 구조

이 대분단의 질서를 하나의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인자들이 긴장의 상쇄가 아닌 긴장의 상호 보완과 상호 재충전의 방향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긴장의 다차원적 요소들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긴장과 갈등의 상승요인이 된다. 또한 대분단의 기축과 소분단체제들이 서로 긴장 상태를 보완하거나 가중시키고, 재충전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1) 다차원적 긴장의 상호작용

제국체제가 전후 동아시아 질서에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은 제국의 폭력에서 연유한 역사심리적 간극이다. 총력전으로 불린 두 차례의 대전에서 상호 파괴와 살상, 그리고 전대미문의 반인류적 범죄들은 동아시아보다 유럽에서 더 웅장한 스케일로 벌어졌다. 우선 주로 유럽에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은 1천만 명의 사망자와 2천만 명의 부상자, 그리고 5백만 명의 미망인을 낳았다.<sup>24)</sup> R.J. 럼멜 교수가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의 전사자 수는 2,873만여 명이며, 이와 별도로 나찌스에 의한 민간인(포로 포함) 학살 희생자는 유대인 530만 명을 포함하여 약 2,100만 명에 달한다.<sup>25)</sup> 한편 동아태 지역에서 1937년 7월에서 1945년까지 일본군이 전투 중이 아닌 상황에서 포로나 민간인을 학살한 숫자는 596만여 명이었다. 이 중 중국인 희생자는 비무장 민간인 260만 명을 포함한 약 395만 명이었다. 럼멜은 난징학살의 희생자 수를 20만 명으로 파악했다.<sup>26)</sup>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제국이 자행한 야만과 폭력의 규모는 어디라 할 것 없이 엄청난 것이었지만, 유럽이 훨씬 더 심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야만의 역사가 전후 질서에 남긴 심리적 유산은 유럽이 아닌 동아시아에 더 깊게 각인된다. 그러한 차이는 역사심리적 간극이라는 요인이 전후 질서의 다른 두 가지 구성 인자들인 지정학적 질서와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이라는 차원들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지정학적 긴장,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 그리고 역사심리적 간극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인자들이 서로 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방식으로 결합하는가, 아니면 상호 지탱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전후 질서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구축되었던 것이다.

전후 유럽에 자리잡은 냉전체제는 질서의 지정학적 차원과 정치사회적 체제의 이념의 차원이 역사심리적 간극을 메꾸고 해소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를테면 유럽의 냉전체제는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장치였다. 서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949년 4월~현재)를 통해서 다른 서방국가들과 연합하고 화해한다. 동독은 바르샤바협정(Warsaw Pact, 1955-1991) 체제를 통해서 소련과 폴란드 등 공산권 세계와 동맹하여 화해했다. 독일 전체와 나머지 세계

24) Ian F. W. Beckett, "Total War," in Arthur Marwick, Clive Emsley, and Wendy Simpson, eds., *Total War and Historical Change: Europe 1914-1955*,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2001, p.30).

25) R.J. Rummel, *Death by Government*,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4, pp.111-112.

26) Rummel, 1994, p.146, p.148. 가사하라 토쿠시(笠原十九司) 역시 난징학살의 희생자 수를 20만 안팎으로 추정한다(笠原十九司著, 『南京事件』, 東京: 岩波書店, 1997, pp.227-8).

사이의 화해가 제도화된 것이다. 그 화해의 전제는 소련과 영국, 프랑스 등 전쟁의 피해자들이 전후 독일 재건의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독일의 철저한 역사반성을 강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에서 전후사의 구조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전후 동아시아에서는 질서의 지정학적 재구성과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갈등이 역사심리적 간극을 동결하고 심화하는 방식으로 결합하였다. 미일 간 전쟁의 상처는 재빨리 구축된 안보동맹에 의해 해소된다. 그러나 제국체제의 최대 피해자였던 중국은 전후 일본의 재건 방식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없었다. 대분단 체제는 역사적 상처를 해소하기는커녕 동결하고 응결시켰다. 미국 단독 점령체제 하에서 일본은 천황제에 면책권을 부여받았고, 소수의 A급 전범만 제외하고 지배층이 그대로 전후 일본을 지도했다. 역사반성을 강제하는 시스템은 없었다.

오늘날 역사 관련 망언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이 속한 일본의 전후 세대는 다른 동아시아 사회들과의 역사화해를 위한 반성적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 역사반성 문제에서 독일과 일본의 차이를 '민족성'의 문제로 돌릴 수 없는 이유이다. 전후 동아시아에서는 제국체제의 지정학적 구조가 스스로를 재구성할 뿐 아니라, 역사심리적 분단을 응결시키고 온존시키는 방식으로 부활하였고, 여기에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이라는 또 하나의 칼이 그 분단의 골을 더욱 깊게 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개념화해보면, 민족공동체와 초국적 이념공동체라는 두 유형의 공동체 사이의 결합방식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전후 유럽에서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의 주된 가해자였던 사회의 민족공동체는 승전국들에 의해 이중적 분할의 대상이 되었다. 나라 자체가 분할되어 동과 서의 이질적인 초국적 이념공동체에 소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범죄를 주도한 사회 내부의 파시즘 세력의 도덕적 정통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책임 집단에 속한 모든 개인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규범화했다. 가해 사회 내면의 역사적 연속성이 제거된 것이다.

반면에 동아시아에서 가해자 사회의 민족공동체는 그 역사의식의 통일성과 도덕적 권위가 보호받았다. 이중적 의미에서 민족공동체의 연속성이 보장된 것이다. 일본에 대한 유일한 점령자의 지위를 확보한 미국은 일본의 민족공동체적 통일성을 보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범죄의 주체 세력에 대한 단죄를 최소한에 한정함으로써 일본 정치사회 내면과 그 의식의 연속성이 보장되었다. 일본의 역사적 정통성과 연속성, 그리고 공동체성의 표상으로서의 천황제가 상징적 형태로 존속한 것이 그 모든 것을 함축했다. 전후 동아시아에서 민족공동체의 분열을 겪은 것은 유럽에서와는 정반대로 동아시아 제국체제의 주요 피해자 사회였던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인도차이나였다. 피해자로서의 역사인식을 공유한 민족공동체들은 모두 분열된 채로 각각 이질적인 초국적 이념공동체에 편입되었다.

이 상황이 전후 동아시아 질서에 미친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해자의 민족공동체의 통일된 역사의식은 그것이 새롭게 속한 초국적 이념공동체에 의해 보호받았다. 반면에 대분단체제 기축관계의 다른 한 축을 구성한 중국대륙은 다른 이념공동체에 속했다. 이로써 전후 동아시아에서 기축관계 사회들에게 이념적 타자(他者)와 역사인식의 타자는 일치했다.

둘째, 피해자 민족공동체들의 이념적 분열로 인해, 이들 사회에서 과거 제국체제의 역사 문제는 정치적·외교적 투쟁과 지적 담론의 무대에서 부차화되었다. 이것은 역사문제의 해소가 아닌 '응결된 지속'을 뜻했다. 이념적 타자화가 모든 정치적, 지적 담론을 우선적으로 지배했기 때문에 다만 억제되어 있었을 뿐이다.

셋째, 동아시아에서 역사인식의 타자화 문제는 냉전기의 담론에서 부차화되었을 뿐, 이념적



타자화와 일치하였고, 대륙과 미일동맹 사이의 지정학적 타자화와도 또한 일치하였다. 이렇게 삼중(三重)으로 결합된 타자화 사이의 상호유지적 상호작용이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본질적 특징을 이루게 되었다.

전후 동아시아 질서를 대분단의 ‘체제’이게 만든 것은 이처럼 중층성과 다차원성 모두에서 작동하는 상호작용성이다. 이와 같이 중층적 분단, 다차원적 긴장 요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긴밀한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소분단체제와 대분단의 기축관계에서 모두 군사적 대치와 군비경쟁이 유지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양측 사이에 존재하는 전략적 접점의 어딘가에서 긴장의 폭발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긴장의 폭발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은 센가쿠·다오위다오와 같은 대분단의 기축관계의 전략적 접점일 수도 있고, 대분단의 기축과 연계된 소분단체제들에 내재한 갈등지점일 수도 있다. 이 상태는 적대관계(adversarial relationship)가 현재적·잠재적으로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대분단체제의 구조이다.

전후 미소 냉전의 구축과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의 정립은 유럽과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지구에 새로운 세계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지정학적 전통과 정체성,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 그리고 역사인식의 문제가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는 패턴은 지역에 따라 달랐다. 바로 그러한 차이가 전후 유럽질서와 동아시아질서의 동일성과 함께 차별성의 원인이 된다. 탈냉전과 세계화가 찾아온 1990년대 이후의 세계에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질서는 중대한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전후 지역질서에서 지정학적 구조와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 그리고 역사인식의 존재방식이 결합하고 상호작용했던 방식에 근본 뿌리를 둔 것이었다.

## (2) 중층적(重層的) 분단 사이의 상호작용성

동아시아 대분단의 기축을 이루는 미일동맹과 중국 대륙 사이의 긴장은 소분단체제들과 상호작용한다. 그 상호작용은 대체로 서로를 유지시키는 성격을 띤다. 기축관계는 소분단들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고, 소분단체제에서의 긴장은 대분단의 기축관계에서 때로 이완되는 긴장을 재충전시키곤 한다.

1949년 신중국의 성립과 함께 구성되기 시작한 대분단 기축관계의 원형은 당시 한국에 이미 성립해 있던 소분단체제와 결합하면서 한국전쟁을 낳는다. 한국전쟁은 이후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미국의 개입주의를 강화시킨다. 그 결과 타이완과 인도차이나에서 소분단체제들이 고착된다. 워싱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에 개입함과 동시에 타이완해협에 제7함대를 파견하여 이 해협을 봉쇄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장개석에게 대륙에 대한 공격 행위를 승인하기까지 했다. 타이완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으며, 타이완에 군대도 주둔시켰다.<sup>27)</sup> 타이완해협에 이렇게 해서 구성된 소분단체제는 중국이 갈등의 한 축으로서 직접 관련된 만큼, 이 소분단의 긴장은 미중 간 기축관계의 직접적인 바로미터로 작동했다.

한반도의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은 직접 격돌했다. 그것은 타이완해협에 소분단을 구성했을 뿐 아니라, 인도차이나에서도 미국이 개입한 소분단체제가 형성되게 했다. 한국전쟁 이후 베트남에서 식민주의 질서를 복원하려던 프랑스의 전쟁 노력은 미국의 지원에 의지해 지탱될 수 있었다.<sup>28)</sup> 1954년 디엔비엔푸(Điện Biên Phủ) 전투에서 프랑스가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제네

27) Nancy Bernkopf Tucker, “The Evolution of U.S.-China Relations,” in David Shambaugh, ed., *Tangled Titan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13, pp.32-33.



바협정에 의해 프랑스가 퇴장하지만, 대신 미국이 개입하여 남베트남을 지탱한다. 이로써 인도차이나 소분단체제가 성립했다.

이후 대분단의 기축관계인 미일동맹과 중국의 관계는 세 지역의 소분단체제들과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유지시키고 재활성화시키는 패턴을 보였다. 1970년대 초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중소 갈등을 유리하게 이용하고, 베트남전쟁에서 명예로운 후퇴를 위해서 미국은 중국과 관계개선을 도모했다. 1972년 미중 대탕트는 남북관계에 처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72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에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후 3개월 만에 한국의 박정희정부가 이른바 ‘10월 유신’이라는 이름의 장기독재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악화된다. 인도차이나의 공산화는 남한 정부의 안보 불안감을 유발하여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사회 전반에 반공적 보수주의를 재활성화시켰다.

1970년대 말은 인도차이나 뿐 아니라 이란과 니카라과에서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국에 적대적인 세력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이 보수화되었다. 그 결과 미소관계가 신냉전에 돌입한다. 이로써 한편으로는 미중관계 개선이 촉진되었지만, 미국의 반공주의 전반 또한 강화되었다. 1979년 미국이 중국과 관계정상화를 단행하면서도 타이완에 사실상의 안보공약을 제공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은 1970년대에 이룩된 미중 관계개선의 양면성과 한계를 상징한다. 타이완의 소분단체제는 한반도의 소분단과 함께 동아시아 대분단 기축관계의 변화를 제약하는 중요한 장치였다.

1990년대에도 대분단의 기축에서 긴장 완화가 추구되지만 한반도 핵문제, 그리고 타이완해협의 미사일위기가 미중관계를 긴장시켰다. 2008년 타이완 마잉주 정권의 등장은 양안관계에 훈풍을 몰고 온다. 하지만 남중국해와 센카쿠·다오위다오의 문제로 미일동맹과 대륙 사이의 기축 관계가 긴장했다. 그 여파로 타이완의 미국 첨단무기 구매는 오히려 증가한다. 2010년 초 천안함 침몰이라는 한반도 내적 사건도 이 시기 대분단 구조 전반에 긴장을 보냈다. 모두 대분단의 기축과 소분단체제들 사이에 작동하는 상호유지 패턴을 말해준다.

## 6. 냉전기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내면적 변화와 그 성격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지속성과 함께 변화를 내포한다.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물론 차이가 있지만, 냉전기 안에서도 대분단체제의 성격은 내면적 차이가 있다. 냉전기 대분단체제는 크게 두 시기, 즉 비타협적 국면과 타협적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차이는 대분단체제에서 타이완과 오키나와의 위상 변화, 그리고 인도차이나의 상황에 압축되어 있다.

---

28) 전후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주의 전쟁을 위한 미국의 군사원조는 1946년 1월에 시작되었다. 1947년 5월에 미국은 인도차이나에 대한 프랑스의 주권을 공식 인정했다. 1950-54년 기간에 미국이 프랑스에 제공한 군사원조는 36억 달러였는데, 그 대부분은 인도차이나 전쟁에 투입되었다. Marvin E. Gettleman, Jane Franklin, Marilyn Young, and H. Bruce Franklin, eds., *Vietnam and America: A Documented History*, New York: Grove Press, 1985, p.50.

## (1) 비타협적 대분단체제에서 타이완, 오키나와, 그리고 인도차이나

신중국 성립 이후 약 20년(1949-1960년대)의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비타협적 국면이었다. 비타협적 시기의 특징은 미중관계에서 타이완이 차지하는 위상이 보여준다. 이 기간에 타이완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의 전초기지였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에게 타이완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였다. 한국전쟁 이래 20년 동안 ‘미중관계’란 곧 ‘미국-타이완 관계’를 의미했으며, 오늘날 미국을 괴롭히는 ‘타이완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미국의 중국 문제는 ‘레드 차이나 문제’(a Red China problem)였다.<sup>29)</sup>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은 오키나와의 위상에서도 표현되었다. 오키나와 역시 미국의 대중국 봉쇄의 전초기지였고, 형식적 주권도 미국에 속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군사동맹 네트워크에서 미국의 압도적 주도성을 표상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오키나와는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식민지였다. 미국 식민지로서의 오키나와는 베트남 전쟁 기간 미국 전폭기의 주요 발진기지였다. 제국체제 시기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타이완이 중일전쟁에서 일본의 중국 침략 군사 발진기지 역할을 했던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인도차이나는 비타협적 대분단체제에서 미중간 긴장의 가장 첨예한 전역(戰域)이었다. 중국은 1950년 초부터 북베트남에 무기를 공급했다. 미국의 인도차이나 군사 개입을 우려해서 중국의 무기 공급은 제한적이었지만, 1953년에는 중화력 무기도 공급했다.<sup>30)</sup>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프랑스군을 호지민의 군대가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제공한 대포들의 역할이 컸다. 1968년까지 미국 존슨행정부의 정책은 베트남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는 중국이라는 인식에 근거해 있었다. 헨리 키신저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에서 존슨행정부의 전쟁 전략을 제약한 최대의 요인은 중국의 군사 개입에 대한 경계심이었다.<sup>31)</sup>

## (2) 타협적 국면의 냉전기 대분단체제에서 타이완, 오키나와, 베트남, 그리고 한반도

1970년대의 시작과 함께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타협적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은 타이완의 위상 변화였다. 미중관계와 중일관계에서 대탕트가 성립하면서 미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 개념을 수용한다. 타이완의 형식상 주권이 중국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실질적으로는 타이완을 자신의 군사정치적 영향권 안에 유지하는 정책을 취한다. 결국 타이완에 대한 명목상 주권은 중국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적 영향권의 일부이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미국 해양 패권의 중대한 바로미터의 하나로 남았다. 그런 의미에서 타이완은 이 시기 이후 현대판 (중국과 미국 양국에 대한) 양속체제(兩屬體制) 현상을 보이게 된다.

타협적 국면의 대분단체제에서도 타이완은 미국의 동아태 해상패권 영역의 불가결한 일부로

29) Shelly Rigger, “Taiwan in U.S.-China Relations,” in David Shambaugh, ed., *Tangled Titans*, op.cit., 2013, p.294.

30) Gabriel Kolko, *Anatomy of a War: Vietnam, the United States, and the Modern Historical Experience*, New York: Pantheon Books, 1985, pp.62-65.

31) 키신저는 존슨행정부가 중국의 개입을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베트남에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추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는 우를 범했다면, 베트남전쟁에서는 그와 반대로 중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오쩌둥의 강력한 언질을 무시하는 바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적극적 전략을 거부하였다고 키신저는 주장한다. Henry Kissinger, *Ending the Vietnam War: A History of America's Involvement and Extrication from the Vietnam War*, New York: Simon & Schuster, 2003, pp.39-40.

가능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타이완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그것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타이완의 독립성과 안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자임했다. 이 양면성을 미국은 스스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란 개념으로 설명해왔다.<sup>32)</sup>

한편에는 1972년 이래 미국이 중국과 세 차례 합의한 공동성명이 있다. 1982년 8월에 발표된 제3차 미중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타이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근본 정책으로 천명한 대신, 미국은 장기적으로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며, 점차로 그 규모를 줄여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른 한편에는 1979년 미 의회를 통과한 「타이완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이 있다. 이 법의 제2조와 3조는 타이완에 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무기판매 공약을 담았다. 미국은 타이완이 충분한 자위 능력(a sufficient self-defense capability)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미국의 방어 무기와 용역(U.S. defense articles and services)의 판매를 공약했다. 타이완이 자위를 위해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에는 미 의회의 참여를 보장했다. 이처럼 세 개의 미중 공동성명과 타이완관계법 사이의 균형에 의지하는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기조는 1990년대까지 유효했던 것으로 간주된다.<sup>33)</sup>

미국 국내법상 타이완의 정치적 지위를 규정한 「타이완관계법」의 제2조는 “미국이 중국(PRC)과 외교관계를 맺는 것은 타이완의 미래가 평화적 수단으로 결정된다는 기대를 전제로 함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제4조는 또한 “이 법의 어떤 내용도 국제금융기구나 그 어떤 국제기구로부터 타이완을 배제하거나 추방할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국가적 독립성(statehood)을 지지하는 근거로 될 수 있었다. 그 결과 「타이완관계법」은 미국이 타이완과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예컨대 미국이 1992년에 중국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150대의 F-16 전투기를 판매한 것은 미중 공동성명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지만 타이완관계법에 의거하면 정당화될 수 있었다.<sup>34)</sup>

한편 오키나와의 위상에도 변화가 있었다. 오키나와의 주권은 1972년 일본에 복귀한다. 그러나 동시에 오키나와는 여전히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전초기지였다. 오키나와 운명의 실질적 결정자는 미국인 채로 남았다. 오키나와에 대한 주권의 일본 귀속은 일본의 경제성장 등이 역할을 했지만,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정한 타협을 이루게 되면서 아시아 방위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닉슨독트린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고, 또한 미일동맹에서 일본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오키나와는 미일 군사동맹체제의 중대한 물적 토대의 하나로 남았다. 또 미국의 동아태 해양·군사패권 체제의 핵심적인 기지로 남았다. 그런 의미에서 오키나와 역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타협적 국면을 반영하면서 (일본과 미국 양국에 대한) 양속체제의 성격을 띤다.

인도차이나는 1970년대 초 이후 전개되는 대분단체제의 타협적 국면의 원인이자 결과를 반영한다. 우선 베트남전쟁이 미국에게 초래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위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평화공세를 펼친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과거 한국전쟁은 전후 미국의 재무장을 위한 국내정치적 조건과 함께 국제적 동맹네트워크를 성립시켰다. 이것은 미국의 전 지구적인 패권체제의 주요한 계기의 하나로 작용했다. 반면에 베트남전쟁은 미국 패권의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도덕적 및 국내정치적인 기초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닉슨대통령과 키신저가 이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추구한 선택이 소련 및 중국과의 대탕트였다 그 중요한 목적의

32) Kerry Dumbaugh, “Taiwan’s Political Status: Historical Background and Ongoing Implic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Library of Congress, February 23, 2006, p.4.

33) Dumbaugh, 2006, p.5.

34) Dumbaugh, 2006, p.5.

하나가 소련과 중국의 협력을 얻어 북베트남을 평화협상에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인도차이나로부터의 명예로운 퇴장을 모색한 것이다.

1969년 7월 25일 리처드 닉슨은 캄에서 '베트남전쟁의 베트남화'와 '아시아 안보의 아시아화'를 선언한 닉슨독트린을 발표했다. 그 결과 1973년 1월 파리에서 「베트남전쟁 종결을 위한 협정」(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이 체결된다. 미국은 철군하고, 베트남은 1975년 4월 공산주의로 통일된다. 이로써 인도차이나의 소분단체제는 해체된다. 이후 베트남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긴장 국면에 들어가 심지어 전쟁도 치르는 등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나 베트남의 공산화 자체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 첫째, 한국 박정희정권의 안보 불안을 촉발하여 한반도 소분단체제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킨다. 동아시아에 대한 개입주의에서 한 걸음 물러나려던 미국은 동아시아 친미 국가들의 동맹 이탈로 미국 주도 안보질서 자체가 붕괴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개입주의 유지로 돌아서게 된다. 둘째, 베트남전쟁에서의 패배와 베트남의 공산화는 1949년 중국의 공산화로 시작된 미국의 아시아대륙으로부터의 퇴장을 완성시킨다. 이 사태는 1949년 '중국의 상실'이 매카시즘을 위시한 격심한 정치적 반동을 몰고 왔던 것처럼,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 강한 보수적 반동을 초래한다. 그것이 카터행정부 후기의 신냉전주의이며 이 변화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반공 보수주의의 기반이었다.

즉 베트남의 소분단체제는 대분단체제의 타협적 국면 전환의 원동력이었으나, 그 해체의 방식은 특히 미국에게 깊은 정치적 충격을 안겼다. 미국과 함께 일본 내면의 반공 보수주의는 재활성화되고, 동아시아의 다른 소분단체제들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졌다. 이 상황은 미중관계 및 중일관계의 개선을 상당 부분 상쇄하면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내면적 긴장상태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했다.

이 점은 한반도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졌다. 한반도 최초의 핵무기 확산 위기는 1990년대 북한이 아니라 1970년대 중엽 한국 박정희 정권의 핵무장 시도에서 비롯된다. 1972년 한국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제조하기 위한 재처리 시설을 획득하기 위해 프랑스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1974년 한국은 매년 20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재처리 공장의 기술적 디자인을 확보한다. 20킬로그램이면 히로시마급 원폭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었다.<sup>35)</sup>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계획을 파악하고 경각심을 가진 것은 1974년 5월 인도의 핵실험 이후였다. 1974년 11월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워싱턴에 보고한다. 키신저 국무장관은 서울로 비밀전문을 보내 한국의 핵무장이 초래할 엄중한 결과를 경고한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 시도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 그리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로 인해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다. 그것이 주변국가들, 특히 북한과 일본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또한 키신저는 소련과 중국이 한반도 분쟁 발생시 북한에 핵무기 지원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sup>36)</sup>

미국은 1975년 7월 이후 박정희정권의 핵무장 시도를 중단시키려는 다양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한다. 1975년 8월 제임스 슐레진저 국방장관도 방한하여 박정희에게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한다. 1976년 5월에는 슐레진저의 후임이 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박정희정

35)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ading, MA: Addison-Wesley, 1997, p.69.

36) Oberdorfer, 1997, pp.69-70.



부에 대해 한미 경제 및 안보관계 재검토를 강력하게 위협한다. 그 결과 한국은 프랑스와의 핵 프로그램 협정을 취소한다.<sup>37)</sup> 겉으로는 취소했으나 박정희정권의 핵무장 시도는 내밀하게 계속되었을 가능성을 미국은 의심하고 있었다고 돈 오버도퍼는 시사한다. 그는 박정희정권에서 보안사령관을 역임한 강창성의 증언을 들었다. 1978년 9월 강창성에게 박정희는 핵무기 개발이 95퍼센트 완료되었으며 1981년 상반기에는 원폭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sup>38)</sup>

1970년대 한국의 핵무장 소동은 한편으로는 한미 안보동맹 관계에 긴장을 초래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미국은 자신의 안보 공약에 대한 한국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큰 맥락에서는 베트남의 공산화 이후 아시아에서 미국이 겪게 된 이른바 ‘신뢰성 위기’(credibility crisis)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국은 한반도 소분단체제의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 하나가 한반도에 대한 미국 전술핵무기의 존재를 공개하고 북한에 대한 핵무기 위협을 노골화한 것이었다. 1975년 6월 방한한 슐레진저 국방장관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더 많은 지상군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슐레진저의 이 발언이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배치를 미국정부가 공식 확인한 최초의 일이라고 보도했다.<sup>39)</sup> 바로 며칠 뒤 제럴드 포드 대통령도 “미국은 한국에 강력한 억지력(a strong deterrent force)을 갖고 있다”고 밝힌다. 여기서 강력한 억지력은 물론 핵무기를 의미했다. 이 때 한 기자가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포드는 “무엇이 미국의 국익인가를 결정할 때 최대한 융통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답변한다. 이 발언은 북한에 대한 핵선제사용 옵션을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sup>40)</sup>

또한 미국은 같은 시기에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전쟁계획을 노골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반영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한다. 1975년 8월 미국은 주한미군의 제임스 홀링스워스(James Hollingsworth) 소장이 방한한 슐레진저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이른바 ‘9일 전쟁계획’을 언론에 공개했다. 홀링스워스는 “만일 북한이 공격을 개시하면 전쟁은 폭력적이지만 매우 단시간에 끝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적에 대해 포격과 함께 매일 700-800회의 시간차 공습을 실시할 것”이며, “북한이 공격하면 임진강을 건너 적 군사력의 심장부를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슐레진저는 이러한 공격적 전략을 “매우 훌륭한 구상”이라고 격려했다.<sup>41)</sup>

그와 같은 공격적인 전쟁계획을 반영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은 1976년에 시작된 후 훈련에 참가하는 한미 양국 군대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 1986년의 경우 20만 명의 한미 양국 군대가 참가했다. 주한미군 외에 미국 본토와 태평양의 미군기지들로부터 6만 명의 군대가 파견되었다. 미 7함대는 25척의 군함을 참여시켰다. 이 훈련은 일반적으로 모의상륙공격(mock amphibious assaults)과 공중폭격, 그리고 화학 및 핵전쟁 훈련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sup>42)</sup>

37) Oberdorfer, 1997, pp.71-72.

38) Oberdorfer, 1997, pp.73-74.

39) *The New York Times*, June 21, 1975.

40) *The New York Times*, June 26, 1975. 이삼성,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 민족주의』, 한길사, 1993, pp.306-307.

41) Claude A. Bus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Background for Polic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2, pp.145-46; 이삼성, 1993, pp.286-287.

42) Stephen Goose, “The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John Sullivan and Roberta Foss, eds., *Two Koreas-One Future?*,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9, p.79; 이삼성,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북미 핵협상과 한국 통일정책의 비판적 인식』, 한길사, 1994,



인도차이나 사태를 배경으로 한반도에서 박정희정권이 선도한 군비경쟁에는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도 있었다.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도입하여 자체 생산을 시작한 것은 1984년이지만, 남한은 그보다 5년 앞선 1979년에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것이다.<sup>43)</sup> 1990년대에는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국제적 고립에 직면한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소분단체제의 긴장과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긴장 조성의 주체는 다르지만, 그 원형을 우리는 1970년대에서 목도할 수 있다. 이 때 인도차이나의 완전한 공산화를 배경으로 남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선도하고, 한미 양국은 그로 인한 양국 관계의 긴장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소분단체제의 긴장을 심화시켰다. 그로써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내면에도 깊은 연속성의 그늘을 드리웠다.

### (3) 타협적 국면의 냉전기 대분단체제에서 미중관계의 성격

미국은 1970년대에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명예로운 후퇴를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그리고 중소분열을 이용한 소련 견제를 위해 중국과 접근하여 관계정상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 타협과 봉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했다고 보아야 한다. 베트남 통제와 소련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전술·전략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되, 한반도 소분단체제에서 북한의 동맹세력으로서의 중국은 엄연한 견제와 봉쇄의 대상이었다. 미국은 타이완에 관해 한편으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였지만,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권 유지는 미국의 동아태 패권체제의 바로미터의 하나였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미국의 동아태 해상패권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미일동맹, 한미동맹, 미국-타이완 간 실질적 군사동맹관계 견지가 필수적이었다. 이처럼 타이완과 한반도라는 소분단체제의 존재와 대중국 관계의 불안정성 자체로 말미암아 미국의 대중국 협력과 봉쇄의 이중적 성격은 불가피했다.

미국이 중국과 전술적·전략적 협력을 추구한 시기에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기축은 엄연히 미일동맹 제일주의였다. 중국은 국면에 따른 협력의 대상이지만, 어디까지나 이질적인 이념과 정치사회질서로서의 심오한 경계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일본과의 동맹에 바탕을 둔 지정학적 통제 대상이었다.

흔히 1970년대 초 미중 화해 이후의 미국·중국·소련의 삼각관계를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의한 소련 견제”라고 요약한다. 그러나 그보다 정확한 것은 ‘이이제이’(夷以制夷)일 것이다. 미일동맹의 관점에서 중국을 이용해 소련을 견제하고, 소련에 의거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미일동맹에게 이로운 입장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도 소련도 미국과 일본에게 ‘이’(夷)라는 상황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지정학적 긴장의 축이 이원화(二元化)된 것에 다름 아니었다.

pp.257-258.

43)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첫해인 1979년 한국은 미국과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협정을 맺는다. 그 때는 180킬로미터로 제한했다. 2001년에는 300킬로미터로 늘어났다. 2012년에 다시 800킬로미터로 확장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항의도 촉발된다. *Defense Update*, “U.S. and South Korea Agree to Extend Missile Range,” October 8, 2012(<http://defense-update.com/20121008>).

## 7. 1990년대 이래 대분단체제의 변화와 지속: 세 차원의 긴장과 그 현주소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중국 공산주의는 고립되었다. 미국에게 중국은 대소련 견제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중국 공산주의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고립은 중국의 개방과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의 통합 전략 추진의 근본 배경의 하나였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와 시장화를 포함한 경제적 개혁개방 가속화 결정은 그의 창의였고, 왕후이의 지적처럼 현대 중국의 역사적 실천에서 나온 반성과 자기수정이었다고 할 것이다.<sup>44)</sup> 그러나 당시의 전 지구적 조건에서 생산력 초보 단계의 중국에게 시대가 허용한 유일한 선택을 덩샤오핑과 그의 동료들이 수용한 것에 다른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미국과 일본에게 중국은 잠재적 거대 시장이었다. 20세기 전반기 제국체제에서 미일연합의 대전제였던 대중국 경제적 경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변화된 형태로 부활한다. 이 상황은 미일관계의 경쟁과 균열의 요소로도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제국체제에서와 달리 중국은 반식민지가 아니라 정치군사적 통일성과 경제력을 가진 거대한 실체였다. 그런 점에서도 중국은 경제적 통합과 협력의 대상인 동시에 봉쇄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지속된다.

### (1) 지정학적 긴장의 변화와 연속성

냉전체제의 기축이었던 미소 양극질서는 그 한 축인 소련과 공산권의 붕괴로 해체되었고, 그것은 유럽질서에서 냉전구조의 완전한 해체로 이어진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소간의 권력 균형이 소련의 일방적인 붕괴로 인해 미국 중심의 단극적 질서(unipolar moment)의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데 동아시아 대분단 기축의 지정학적 균형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와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이다. 이것은 새뮤얼 헌팅턴이 ‘문명충돌론’을 제기한 역사적 배경의 하나이기도 했다. 미국인들의 지정학적 인식에서 미국·서양과 나머지 세계(the West and the Rest) 사이의 대립의 본질이 미소 대립을 중심에 둔 경제사회질서·이데올로기의 이질성의 문제로부터, 미중관계를 중심에 둔 문명적 차원의 이질성의 문제로 옮겨가는 전환기적 상황에 대한 미국 지식인사회의 예민한 반응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미국이 이제 대결해야 할 근본적인 지정학적 숙제로서 중국이 부상한 것이었다.

유의할 것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긴장의 중심축이 소련과 미일 동맹이었던 것에서 중국과 미일동맹으로 단순 이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소련과 미일동맹 사이에, 그리고 중국대륙과 미일동맹 사이로 지정학적 긴장이 이원화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소련의 퇴장 이후에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의 축이 미일동맹 대 중국으로 단순화되는 동시에, 소련의 퇴장만큼이나 중국의 부상 속도가 빨라서 소련 붕괴로 인해 상당부분 해체되었던 지정학적 긴장이 빠르게 재충전되었던 것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하면서 동아태 지역에서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은 구체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이 현상유지세력이라면, 중국은 기존의 안보질서에서 일정한 수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다. 한 가지 문제는 둘 사이의 세력균형의 변동이 상당히 빨라서 관련 사회들과 국가권력이 평화적으로 관리해낼 수

44) 왕후이 지음, 성근제·김진공·이현정 옮김, 『탈정치시대의 정치』(돌베개, 2014), 「중국 굴기의 경험과 그것이 직면한 도전」, 특히 p.21.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상대적인 쇠퇴를 겪고는 있으나 여전히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과의 동맹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 만큼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구축하고 있는 안보질서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해상 패권은 강력한 실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힘도 누구의 예상보다 급속하게 성장했다. 그것은 거의 자연스럽게 중국의 내면적인 자아 개념, 즉 '자기 정체성'을 확장시켰다. 중국의 '영토적 자기영역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 표현이다.<sup>45)</sup>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일동맹의 기득권인 해상 패권과 직접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접점이 확대되고 있고, 그 접점들에서의 긴장이 심화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추세라고 해야 한다.

탈냉전 후에도 이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지속되고 있다. 첫째,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중국대륙의 통일국가가 갈수록 더 부강해지는 추세 속에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일차적인 요소는 일본과의 동맹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비경쟁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미사일방어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전략핵무기체계 증강과 그 현대화를 촉진하는 쪽을 미국은 이미 선택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중국이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여기고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추구할 때 '자기충족적 예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6)</sup> 즉 미중관계의 갈등여부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케네스 왈츠와 사유엘 헌팅턴, 존 미어쉴리머 같은 많은 현실주의 이론가들과 로스 먼로를 비롯한 신보수주의 집단 등 많은 지식인들은 중국은 어차피 미국 패권에 도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sup>47)</sup> 실제로 중국이 미국패권에 도전하는 행태를 보일지는 미지수이지만, 미국이 중국을 '동급의 경쟁자'(peer competitor)로 간주하는 한 중국의 행태가 그에 상응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더욱이 미중 간에는 둘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을 잠재적 개연성에서 필연성으로 전환시키는 근본적 문제가 하나 있다. 대만 문제가 그것이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영향권 유지에 동아시아 패권자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유지하느냐 상실하느냐의 결정적인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미국에게 대만은 태평양을 미국의 호수로 유지하느냐의 문제의 관건인 것이다. 일본에게도 대만의 독립성 유지를 돕는 것은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억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간주하던 약 20년간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전

45) 이삼성, 「21세기 동아시아의 지정학: 미국의 동아시아지역 해양패권과 중미관계」, 『국가전략』 제13권 1호(2007년 봄), pp.5-32.

46) Zbigniew Brzezinski, "Living With China," *The National Interest*, No.59 (Spring 2000). Owen Harries, ed., *China in The National Interest*,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2003, p.7.

47) 케네스 왈츠는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는 특히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았으며, 미어쉴리머는 중국의 현재와 같은 수준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동북아에서 중국은 잠재적 패권국가(potential hegemon)가 될 것으로 보았다. 중국이 잠재적 패권국가가 될 경우 미국은 동북아에 군사적 현존을 유지하여 이와 대결할 것으로 보았으며, 중국의 성장이 지체될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철수시키고 대신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았다. 헌팅턴은 21세기 미국 패권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중국이 될 것으로 예언했다. 로스 먼로는 신보수주의의 중국 봉쇄론을 주도한 인물이다. Kenneth N. Waltz,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25, No.1 (Summer 2000); John J. Mearsheimer, "The Future of the American Pacifier,"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01, p.47;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pp.232-233; Ross H. Munro, "China: The Challenge of a Rising Power," in Robert Kagan and William Kristol, eds., *Present Dangers: Crisis and Opportunity in American Foreign and Defense Policy*, San Francisco: Encounter Books, 2000.



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을 취했다. 모호성 전략이란 미국이 대만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뜻했다: “미국은 대만의 방위를 도울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공하지는 않는다.”<sup>48)</sup> 그러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해소된 199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료성’(strategic clarity) 정책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 1995-96년의 대만해협의 미사일 위기는 그 추세 속에서 발생했다.

중국에게 대만은 주권적 및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심오한 심리적·정치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동아태에 대한 미국과 일본에 의한 일방적 해상패권 체제를 극복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 하원이 2000년 ‘대만안보향상법’(Taiwan Security Enhancement Act)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클린턴행정부가 이 법안의 상원 상정을 막아서 법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sup>49)</sup> 하지만 이 사건은 미국 권력집단 안에서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정책의 정치적 토대가 약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2001년 미국 ‘4개년 방위전략검토’(2001 QDR)가 대만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연해지역’(East Asian Littoral)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미국의 4대 ‘핵심지역’(critical areas)의 하나로 첨가했다. 21세기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sup>50)</sup> 2005년 3월 중국이 ‘국가분열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만 민진당(民進黨) 정부의 독립지향성과 함께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명료성정책으로의 전환추세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일동맹 사이의 긴장은 잠재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진영의 군사전략과 군비경쟁체제의 한 결정적인 추동력으로 이미 작용하고 있다.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 혹은 ‘핵심지역’(critical areas) 개념과 중국이 말하는 ‘핵심이익’(core interests) 및 중대이익 사이의 긴장이 본격적으로 중첩되기 시작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이 말하는 ‘핵심이익’(core interests)은 영토적 주권(sovcreignty) 영역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간섭의 위협이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대만, 티베트, 남중국해 등이 중국이 명시하는 대표적인 핵심이익 지역이다. 중국이 아직은 전후 세계질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체제의 압박으로부터 수세적 입장에 처해온 사정을 반영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은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영토주권의 경계를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패권적 영역에 관계된 개념이다. 팍스 아메리카나를 지탱하는 세계의 주요 전략적 요충을 가리킨다.

앞서 언급한대로 미국의 세계전략은 2001년 QDR에서부터 동아시아를 동북아와 연해지역으로 구분함으로써, 대만에서 남중국해를 거쳐 벵갈만에 이르는 아시아대륙의 동남해안지대가 미국이 새롭게 주목해야 할 사활적 이익 지역으로 범주화했다. 이러한 미국의 사활적 이익 지역은 중국과 같은 잠재적 패권경쟁 세력의 권력투사는 제한하고 미국의 전 지구적인 패권적 권력투사를 보장하는 세계의 핵심지역들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의 힘이 더욱 성장하여, 국제사회가 중국이 자신의 주권 영역이라고 간주하는 지역에 대해 감히 간섭하는 상황을 벗어나서 팍스 시니카(Pax Sinica)를 구성하는데 성공한다면, 중국 역시 자신의 주권 영역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한 중국의 패권적 권력투사를 보장할 핵심 지역들에 대해 ‘사활적 이익’이라는 개념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자신의 주권

48) Michael O'Hanlon, "Why China Cannot Conquer Taiwan," *International Security*, Vol.25, No.2 (Fall 2000), p.52.

49) Ted Galen Carpenter, "Prospects for the Taiwan Security Enhancement," The Cato Institute, March 15, 2001.

50)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September 30, 2001.

적 영역을 넘어선 지역에서 중국이 구현해야 할 중요한 안보이익이 걸려 있을 때, 그 지역을 ‘중대이익’ 지역이라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한반도를 중대이익 지역의 하나로 간주한다.<sup>51)</sup>

중국의 힘이 성장하여 중국의 ‘자아정체성’이 확장되면서 미일동맹이 동아태지역에서 기존에 누리고 있는 해상패권과의 긴장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자신의 패권 영역의 전략적 요충으로 파악하는 사할적 이익과 중국이 자신의 주권 영역이라고 간주하는 핵심이익 사이의 충돌이 일차적인 충돌 지점이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독립 불가’ 원칙 및 이의 필요시 군사적 관철의 태도와 함께 미국의 대만에 대한 미사일방어망 편입전략이 본격적으로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그 한 측면이다. 남중국해는 미국에게 사할적 이익인데, 중국도 이 지역을 자신의 주권 영역으로 포함시켜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센카쿠·다오위다오 지역은 대만에 매우 가까운 동중국해에서 미일동맹의 패권 영역과 중국의 영토적 주권 개념이 충돌하고 있는 곳이다.

중국의 힘이 성장하면서 중국의 자아정체성이 주권 영역을 넘어 중대이익 지역에 대한 더 깊은 관심, 즉 중대이익 지역을 자신의 지역 전략 혹은 세계전략에서 중국의 자아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전략적 요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한반도이다.

## (2)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 변화와 지속

1980년대에 들어 중국의 개혁·개방이 본격화하면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으로 인한 긴장은 완화된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래 한국·타이완·필리핀 등은 민주화된 반면 텐안문사태로 중국과의 정치체제적 이질성이 재확인된다. 이로써 정치적 권위주의, 즉 국가권력으로부터 개개 인간의 자유와 그에 대한 정치적 억압의 문제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에서 새로운 중요성을 띠면서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의 중심적 차원으로 자리잡게 된다.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질성이 또 다른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결국 대분단체제를 떠받치는 차원의 하나인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은 1989년 6월 4일 천안문에서 벌어진 사태로 인해 자본주의-공산주의 대립으로부터 민주주의-권위주의 대립의 차원으로 치환(置換)되었다.

미국은 중국과 관계정상화를 한 후인 1980년대에도 비공식적이지만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미국인들 일반은 대만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었다. 1989년 텐안문 사태는 미국-대만 관계에 전기를 마련했다. 중국의 억압적 체제와 달리 새롭게 민주주의를 달성한 대만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연대의식이 부활한 것이다.<sup>52)</sup> 이것은 1990년대에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면서 독립을 공개적으로 추구한다. 이로 인한 대만 해협의 갈등은 미중관계를 긴장시키는 배경의 하나가 된다.

보통 현실주의자들은 국내체제의 성격이 그 나라의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내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주로 자유주의적 국제정치이론에서이다. 그러나 교조적인 현실주의자들을 제외하면, 상당수 현실주의자들도 나라들의 국내체제의 성격이 국제관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예컨대, 아론 프리드버그(Aaron

51) 김흥규는 중국의 특히 군부 인사들의 언술에 근거하여 중국에게 한반도가 ‘중대이익’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흥규, 「중국과 한반도 통일」, 미래전략연구원 전문가 토론회의, 2014.12.11.

52) Tucker, 2013, p.40.

Friedberg)는 존 미어쉐이머(John Mearsheimer)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contest for supremacy)은 필연적이라고 보는 현실주의자에 속하지만, 미중간의 국내정치체제의 차이가 또한 미중관계의 미래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한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 나라 사이의 경쟁에 중요한 추가적 동력이 된다는 프리드버그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 그의 주장처럼, 이데올로기적 간극은 “두 나라 사이에 불확실성을 줄여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데 장애물이 되며, 상호 적대의식과 불신의 원천이 된다.”<sup>53)</sup>

물론 이러한 주장은 데이비드 샘버그가 지적하듯이,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 반면,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국가는 서로 싸우기 쉽다고 보는 자유주의 국제정치학 전통의 민주평화론과 상통한다.<sup>54)</sup>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가 중국과 미국에 관련하여 하는 얘기는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국가 사이의 갈등 여부에 관한 민주평화론에서 도출한 것은 아니다. 굳이 민주평화론에 의지할 필요도 없이,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에서 이질적인 사회들 사이에서 정치사회적 및 이데올로기적 긴장이 갈등 촉진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특정한 이론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다.

텐안먼 사태는 대분단 기축관계에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긴장을 초래했지만, 타이완해협의 소분단체제에도 깊은 충격을 주었다. 타이완에서 독립 추진세력이 활성화된 것은 그 결과였다. 양안관계라는 소분단체제는 탈냉전 후에도 심각한 긴장을 겪는다. 이 긴장은 다시 대분단의 기축인 미중관계를 긴장시키게 된다. 마침내 1995-96년의 타이완해협의 미사일 위기가 벌어지는데, 그 원인은 텐안먼 사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1990년대 중엽에 사무엘 헌팅턴은 21세기 세계질서에서의 기본 갈등의 소재를 문명 충돌에서 찾고, 그 중요한 요소로 서양과 이슬람의 대립 못지않게 중국 문명과 서양 문명의 이질성과 그로 인한 긴장의 필연적 발전을 예견했다. 그 때 헌팅턴이 염두에 둔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문명적 이질성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양식 차이는 이미 아니었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문명적 긴장이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sup>55)</sup>

1990년대는 이처럼 서양 중심의 시각에서 중국의 문명적 이질성을 개념화하는 헌팅턴 류의 문명충돌론이 풍미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 지식인사회가 중국 중심의 관점에서 문명담론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 중국 지식인사회는 ‘문명국가’론을 광범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담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구별, 그리고 그에 바탕한 문명과 야만으로의 차별화를 ‘서양적’ 보편주의로 규정하는 경향을 띤다. 이 관점에서는 중국의 국가와 사회가 머물러 있는 권위주의 질서는 야만이 아니다. 다만 기준을 달리하는 ‘대안의 문명’일 뿐이다. 이로써 서양적 보편주의를 무력화하고, 중국의 정치사회질서를 하나의 문명적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문명국가론은 주로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차원에서 과거 공산주의-자본주의 사이의 냉전적 이념 대결을 대체한 문명론적 긴장을 충전시키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중국 지식인들의 문명국가론은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을 포함한 서양 중심의 문명 담론을 반격하면서 새로운 문명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모색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학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천하’ 개념을 중심에 둔 새로운 담론들, 예컨대 자오팅양

53) Aaron L. Friedberg,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30, No.2(Fall 2005), pp.42-43.

54) Shambaugh, 2013, p.12.

55)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pp.219-234; 이삼성, 『세계와 미국』, 한길사, 2001, pp.789-798.



의 ‘천하체계’<sup>56)</sup>과 쉬지린의 ‘신천하주의’<sup>57)</sup> 등도 중국적 문명 담론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민주’와 ‘정의로운 세계질서’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공세적 문제 제기는 더 빈번해질 것이다. 서양적 보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명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에서 비롯되는 긴장을 중국 중심으로 극복하려는 비전도 제시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인간의 기본권 개념에 기초한 서구적 민주주의를 상대화하려 시도할 경우 중국판 ‘근대초극’(近代超克)론으로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중국 지식인들에 의한 이 같은 문명 담론, 특히 문명국가론과 천하 담론은 2000년대 들어 주로 일본이 주도해온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대한 대안 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중국의 문명국가론은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아마코 사토시(天兒慧)는 중국의 문명국가론은 일본이 미국의 참여를 전제로 개진해온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를 대체하여 중국이 주도하는 독자의 아시아 신질서 구상으로 나아가는 논리적 기초로 작용할 것이라고 풀이한다.<sup>58)</sup>

문명국가론이나 천하론은 주로 지식인사회의 문명 담론이다. 더 직접적인 문제는 중국 국가 권력의 정치이념과 미국의 정치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문명적 거리이다. 이 점은 데이빗 샬버그가 잘 포착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관찰자들은 중미관계는 냉전 종식으로 이제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이 마오주의 이념을 폐기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Marxist socialism) 또는 레닌주의적 권위주의(Leninist authoritarianism)를 버리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중국 공산당은 대국주의 이념(the ideology of being a great power)을 버리지 않은 것 또한 분명하다.”<sup>59)</sup> 이것은 미국과 일본을 긴장시키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체성 문제이다. 반면에 베이징 또한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이데올로기적 위협을 인식한다. 샬버그는 후진타오 주석이 2011년 10월 제17차 중앙위원회의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주목한다: “우리는 국제적인 적대 세력들이 중국을 서양화(westernize)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그들의 전략적 음모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들이 장기적으로 침투하려고 하는 주요 무대가 이념과 문화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미국인들은 반공주의를 견지하고 있고, 민주주의, 자유, 개인주의, 그리고 인권에 대한 생래적인 신념들이 미국의 대중국 인식과 정책의 저변을 이룬다.<sup>60)</sup>

샬버그는 결국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적 예외주의와 전통적 동아시아 세계에서 문명과 질서의 중심을 자처해온 중국적 예외주의 사이의 긴장과 정치체제의 차이가 맞물리면서 두 나라 사이에 이데올로기적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두 나라 사이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분열은 항상 존재했지만, 더 큰 전략적 이익을 위해 자주 순화되곤 했다. 그러나 더 큰 전략적 공동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은 이념적 및 정치적 차이들이 뒷전으로부터

56) 자오팅양[趙汀陽] 지음, 노승현 옮김, 『天下體系: 21세기 중국의 세계인식』, 도서출판 길, 2010.

57) 쉬지린(許紀霖), 「다함께 누리는 보편성: 신천하주의(新天下主義)란 무엇인가」,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주최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제국의 개념사(A Conceptual History of 'Empire' from an East Asian Perspective)」,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 춘천(2014.6.13.).

58) 아마코 사토시(天兒慧) 지음, 이용빈 옮김, 『중국과 일본의 대립: 시진핑 시대의 중국 읽기』, 한울, 2014, pp.30-41.

59) David Shambaugh, 2013, p.7.

60) David Shambaugh, 2013, pp.7-8.

미중관계의 전면으로 돌아온 것이다.”<sup>61)</sup>

### (3) 역사심리적 간극의 차원

전후 냉전 시기 대분단체제가 응결시켜 보존했던 동아시아 사회들 간의 역사심리적 간극은 탈냉전과 함께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첨예해진다. 탈냉전과 함께 역사 담론이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더 활성화되고 공론화되었다. 일본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라는 두터운 장벽 안에서 냉전기 내내 역사문제를 망각할 수 있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공산주의 혁명 대 반공산주의가 지배적 담론이었고, 제국 시대의 과거사 문제는 결코 중심에 있지 않았다.

반면 탈냉전과 함께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응결되었던 역사 문제가 해방기를 맞았다. 혁명 대 반공의 담론 체계가 붕괴하고 그 지적 폐허 위에 역사 담론이 지배적 위치에 올랐다. 냉전에 들어 일본 정치사회의 주역이 된 전후세대의 일본인들은 거의 반세기를 망각하며 지냈던 역사문제를 갑자기 맞닥뜨려야 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황당하고 생경한 문제였음에 틀림없었다.<sup>62)</sup>

이 같은 역사인식의 이질성은 과거 냉전시기 이념적 대립을 대체해 일본(미일동맹)과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사이에 무시할 수 없는 마음의 장벽을 드리우게 되었다. 이 역사심리적 차원의 간극은 탈냉전 후의 세계에서 과거 각 사회에서 공산주의와 반공주의를 대신해 새롭게 중요한 정치적 이념 자원으로 떠오른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역사적 기억의 정치는 더 치열해진 것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이라는 업적주의가 한계에 직면할 수 있고, 공산주의가 지냈던 이념적 자원의 역할도 종식된 지 꽤 되었다. 중국 권력엘리트는 대체 이데올로기 개발의 숙제를 안고 있다. 한편 일본은 오랜 경제침체와 저성장사회의 도래로 깊은 불안의식에 시달리고 있다. 전통 시대 이래 일본의 정치 및 문화전통에 자리 잡은 ‘동아시아질서에서의 경계인적 의식’은 유서 깊다. 이러한 요인들은 대분단체제에 이미 내재한 역사심리적 간극의 정치화를 해소하기보다는커녕 더 심화시킬 가능성까지도 안고 있다.

1955년에서 1993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의 일당 지배체제를 구축한 일본 자민당의 주류인 보수세력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의 제국주의 전쟁의 도발, 그리고 타이완과 한국의 식민지화의 역사적 합법성을 주장함은 물론이고, ‘침략전쟁’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1993년 자민당 일당체제의 붕괴, 그리고 탈냉전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의 소통이 시작되면서 보수세력을 포함한 일본 정치권은 역사 반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다. 1993년 8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61) David Shambaugh, 2013, p.8.

62) 일본에서 공부하는 한 중국 유학생이 일본의 대학 강의실에서 체험한 중일 두 나라 청년들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인식의 간극은 그 점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그는 이렇게 증언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일 양국 학생의 지식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학생은 2차 세계대전까지의 중·일간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최근 30년간의 일본의 발전과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반면 일본학생은 과거 100년간의 중·일 마찰, 특히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을 침략한 사실에 대해서 거의 모르며, 중국과 한국 학생이 역사를 중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중·일 양국 국민이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인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국민은 이에 불만을 표하며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 시각의 차이가 학술계와 정부의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양국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며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도, 상대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황시(黃曦), 『조선일보』, 2014년 1월 10일.

의 ‘고노 담화’와<sup>63)</sup>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가 이끄는 사회당정권이 주도해 식민 지배에 대한 역사 반성을 공표한 ‘무라야마 담화’ 등이 그런 움직임을 대표했다.

그러나 일본 보수세력의 역사관을 견제하던 사회당이 1996년 몰락하면서 일본 정치세력은 “총보수화”된다.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히노마루(日の丸)와 기미가요(君が代)는 국기와 국가로 법제화된다. 평화헌법의 개정문제를 다루기 위한 헌법조사회가 국회에 설치된 것도,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으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도 모두 이 무렵이었다. 다른 동아시아 사회들의 역사 담론이 활성화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의 역사 담론은 보수적인 자기방어와 자기합리화의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더 거칠어지기까지 한다. 2000년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역사 문제에 대해 취한 태도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sup>64)</sup> 수상 아베 신조와 그의 정권에서 문부과학상을 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은 1997년 자민당 내 의원연맹이 난징대학살의 역사를 부정하는 책자를 발간했을 때 그 핵심 인물들이기도 했다.<sup>65)</sup> 아베정권은 <sup>66)</sup>

미국 안에는 일본의 역사의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다.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일본과의 연합을 통한 아시아대륙의 통제와 경영에 있다.<sup>67)</sup> 일본의 역사 반성 거부로 인한 동아시아의 국가 간 긴장은 미국에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

63) 고노담화는 2차 세계대전 중의 ‘위안소’가 “일본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되었고, 군이 위안소 설치 관리와 위안부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 없이 교훈으로 직시”하겠으며, “역사 연구와 교육을 통해 같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64) 진창수,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도시환·박진우·서현주·장세운·진창수·최운도·하종문 지음,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2013.

65) 1982년 일본정부는 중국과 한국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아시아의 이웃나라들과 관련된 역사교과서검정기준의 하나로 “국제적 이해와 협력”의 정신을 고려하도록 하는 이른바 “아시아 이웃나라 조항”(‘Asian neighbors’ clause)을 규정했다. 그러나 2005년 3월 당시 문부과학성 고위관료로 있던 하쿠분 시모무라는 “이 조항이 규정된 이후 학교들은 더욱 마르크스-레닌주의적으로 되어 일본역사에 대한 자학적(메조키스트적) 관점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당시 나가무라 나리아키 문부과학성 장관은 “일본 제국군대의 성노예와 강제징용이라는 용어들이 학교 역사교과서에 자주 언급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른바 “아시아이웃나라 조항”을 부정한 것이었다 (Editorial, "Asian neighbors clause," asahi.com, March 10, 2005).

66) 제1차 아베 내각(2006.9-2007.8)은 2007년 내각회의에서 “고노담화 발표 전에는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 일본군이나 관헌에 의한 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기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정했다. 제2차 아베내각(2012.12-현재)에서 아베 총리는 2012년 선거 과정에서 고노담화 수정을 언급했다. 2013년 2월에는 국회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다”고 발언했다. 결국 아베 내각은 2014년 6월 20일 고노담화 검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노 담화 발표 이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500건 이상의 자료가 새로 발견된 바 있으나 이 검증보고서는 모두 무시한 것으로 평가된다(차학봉·안준용, 『日 ‘고노담화’ 검증 논란: 日, 고노담화 계승한다면서 곳곳서 ‘위안부 강제동원’否認: 국제적 전쟁범죄 ‘위안부’ 韓·日만의 문제로 축소·왜곡, 日정부가 제공한 문서만 조사, 일본軍 관여 물증 철저히 외면,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해온 극우파 학자가 검증 주도… 나머지 법조인·앵커 출신』, 『조선일보』, 2014.6.21). 한편 도쓰카 에쓰로(戸塚悦郎) 일본 류코쿠대학(龍谷大學) 법학과 교수는 1930년대 일본 법원의 ‘성노예’에 대한 형사범죄 판결만으로도 일본이 한 노예금지협약 등 국제법 위반을 추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1936년 나가사키 법원은 일본 여성들을 속여 상하이 위안소에 보낸 인신매매범 10명에게 유죄 판결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군의 명예를 위해 인신매매범들에게 군과의 관련성을 부인해달라고 명령한 공고문을 냈다. 손제민, 『미, 위안부 등 전쟁책임 안 물어…일본은 보편적인 인권의식 결여』, 『경향신문』, 2014.12.19.].

67) 미국정부 고위 관리들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일본과의 동맹이 기축이라는 명제를 일상적으로 표명해왔다. 최근의 한 예로 미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는 2012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일동맹은 무엇보다도 지난 5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cornerstone)이었다”(Deputy Secretary of Defense Ashton B. Carter, “The U.S. Strategic Rebalance to Asia: A Defense Perspective,” New York City, NY, Wednesday, August 01, 2012, <http://www.defense.gov>).



나 기실 1990년대 후반부터 미일동맹체제 안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추구하고, 일본의 방위역할 강화와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일본 보수세력의 평화헌법 개정 내지 실질적인 ‘해석개헌’을 국제사회에서 정당화하고 뒷받침해 온 것이 미국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미일연합에 기초한 아시아 대륙 경영이라는 더 유서 깊고 근본적인 미국의 지정학적 대전략에서는 일본의 역사 반성 거부로 인한 중일 간의 긴장 유지 자체도 반드시 불편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역사인식의 재경직화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대한 미국의 희망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내부의 다차원적 긴장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점이다. 이 시기는 한반도의 소분단체제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긴장된 시점이었으며, 타이완 독립문제로 타이완해협에서 중국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미국 해군이 중국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미일동맹과 중국대륙의 지정학적 긴장이 부각되는 시기였는데, 이 무렵 일본의 역사인식이 미국의 원격지원을 받으며 보수적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8. 동아시아 대분단선(大分斷線)과 그 현재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대분단’은 뚜렷한 지리적 형상을 띠고 있다. 중국대륙의 동해안을 따라 상하로 그어지는 기다란 선이 그것이다. 중국의 영역과 미일동맹의 패권 영역이 부딪치는 선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동아시아 대분단선’이라 부를 수 있다. 베트남의 분단선이었던 북위 17도선이 1975년 이래 정치적 의미를 상실한 후, 대분단선은 남중국해에서 타이완과 오키나와 해협을 거쳐 한반도 서해상을 가로질러 한반도의 휴전선으로 이어진다. 대분단선에 접한 타이완, 남중국해, 오키나와, 그리고 한반도 서해상(및 휴전선)은 대분단체제의 긴장의 요충을 구성하면서, 그 체제적 긴장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에서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확보하고 있는 기득권의 실체를 동아태지역 해양패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 해양패권의 요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중국 본토 이외의 동아태 지역 전반에 대한 중국의 권력투사능력을 제한하고 봉쇄할 수 있는 군사정치적 능력이다. 그 군사정치적 능력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중국 이외의 동아시아 국가들을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체제에 포섭하여 유지하고, 중국에 인접한 이들 국가들의 영토들을 군사 기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군사적, 정치외교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힘을 포괄한다. 둘째는 중국의 전략적 무기체계의 효력을 제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군사력이다. 이것은 전략핵, 미사일방어체제, 재래식 첨단무력에서 중국에 대한 월등한 상대적 우월성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동아태 해양패권의 표징 및 바로미터는 중국의 권력투사능력을 봉쇄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들에 대한 확고하고 지속적인 장악이다. 타이완, 남중국해, 오키나와 열도 해역, 그리고 한반도 서해상이 그 결정적인 지정학적 요충들이다.

중국의 국력팽창에 따라 중국의 자기정체성과 국익 개념이 팽창하고 있다. 기존의 미국 패권에 의해 제한되고 절제되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확장함에 따라, 기존 미국의 해양 패권은 중국의 자기 정체성 의식과 근원적으로 상충한다. 이 점을 주목하여 필자는 2007년에 쓴 글에서,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외교적 노력이 없이는 내재적인 상충의 요인들로 인해 특히 한국

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긴장의 구조를 발전시킬” 운명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68)</sup> 2010년 이래 수년 간 대분단체제의 기축관계를 긴장시켜온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은 그것이 현실적인 위기로 발전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

### (1) 타이완해협에서

대만은 미국의 세계전략상 ‘핵심지역’ 개념과 중국의 영토적 주권 개념상의 ‘핵심이역’ 개념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를테면 ‘패권의 전략적 요충지’(strategic key area for hegemony)인 것이다. 1990년대 이래 감지되기 시작한 중국의 부상과 함께 대만을 둘러싼 미일 동맹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빠르게 축적되기 시작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2000년대에 들어 미국의 타이완 정책은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다 뚜렷하게 보였다. 첫째, 2001년 미국의 4개년 방위검토(「QDR 2001」)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4개 핵심지역의 하나로 “동아시아 연해지대”라는 범주를 추가했다. 이 문서는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으로서 “세계의 핵심 지역들을 적대적인 세력이 지배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를 명확히 한 가운데, 과거부터 이미 핵심지역으로 정의된 ‘유럽,’ ‘동북아시아,’ ‘중동 및 서남아시아’ 범주에 덧붙여 ‘동아시아 연해지대’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QDR 2001」은 ‘동아시아 연안지대’의 범주로 “일본 남부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를 거쳐 벵갈 만에 이르는 지역”이라고 정의했다. 마이클 맥더빗(Michael McDevitt)은 동아시아를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 연해지대’라는 두 부분으로 분류한 것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여기서 동북아시아란 일본과 한국을 말하며, ‘동아시아 연해지대’란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파푸아 뉴기니아, 말레이시아,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남중국해와 그 외의 핵심적인 인도네시아의 국제 해협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sup>69)</sup>

미국이 새로 구성한 ‘동아시아 연해지대’의 안보 개념은 구체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미 해군은 ‘연해지대 전투함’(Littoral Combat Ships: LCS)이라는 범주의 해군력을 건설하고 2008년부터 이 군함들을 함정들을 배치하였다. 2012년의 연설에서 당시 미 국방차관 애슈턴 카터는 이들 군함들을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에 배치한다고 밝혔다.<sup>70)</sup> 타이완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지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연해지대 전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능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2000년대 들어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무기 판매 횟수가 늘었다. 1990~1999년 기간에 타이완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 규모가 15억 달러를 넘은 것은 1992년의 77억 달러, 1993년의 약 21억 달러 두 차례였다. 반면에 2000-2010년 기간 15억 달러 이상의 무기 판매는 2000년의 18억 달러, 2002년의 15억 달러, 2004년의 17억 달러, 2007년의 34억 달러, 2008년 10월의 약 65억 달러, 2010년의 64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2011년에도 58억 달러를 기록했다.<sup>71)</sup>

68) 이삼성(2007), 「21세기 동아시아의 지정학」, p.11. 타이완과 오키나와를 둘러싼 동아시아적 담론의 현황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백영서,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본다』(창비, 2013).

69) Michael McDevitt,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East Asia," CSIS, Pacific Forum, *PacNewsletter*, October 26, 2001.

70) Deputy Secretary of Defense Ashton B. Carter, "The U.S. Strategic Rebalance to Asia: A Defense Perspective," New York City, NY, Wednesday, August 01, 2012. (<http://www.defense.gov>)

2008년 말 이후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첨단무기체계가 대폭 증가한 것은 2008년 4월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정권이 집권과 함께 중국과의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안관계가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된 것과 대조되는 것이었다.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비경쟁이 동시에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은 또한 2013-15년에 걸쳐 10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들을 타이완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중국 언론은 파악했다. 30대의 아파치공격헬기(AH-64 Apache attack helicopters), 60대의 블랙호크(UH-60 Black Hawk utility helicopters), 미사일방어 시스템인 PAC-3(Patriot Advanced Capability-3 missile batteries) 등이 포함된다.<sup>72)</sup> 런민대(人民大)의 진칸링(Jin Canrong) 교수가 지적했듯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무기 판매는 중국이 각종 무기체계 실험을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한다.<sup>73)</sup> 결과적으로 미국-타이완 무기 거래 역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안에서 소분단체제를 매개로 해서 대분단의 기축 관계 전반에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패턴을 여실히 보여준다.

셋째, 2000년 2월 미 하원이 공화당의 주도하에 통과시킨 「타이완안보향상법」(Taiwan Security Enhancement Act)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타이완 군부 사이의 관계를 공식화한 법안이었다. 타이완이 요구하는 무기는 무엇이든 미국정부가 긍정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을 우려한 클린턴행정부가 이 법안의 상원 상정을 만류하여 통과는 보류되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하원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했던 사실은 2000년대 부상하는 중국을 의식한 미국의 타이완 인식의 추이, 즉 전략적 명확성으로 이동하는 추이를 상기시켜 준 것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은 2000년대 들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영토적 존엄성' 관념을 강화해왔다. 2005년 3월 중국 제10 전인대 3차 회의는 「국가분열방지법」(反分裂国家法; Taiwan Anti-secession Law)을 통과시켰다. 타이완이 독립을 추구할 경우 무력(non-peaceful means)을 사용할 수 있다는 중국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이 '타이완관계법'을 근거로 미중 공동성명의 취지를 위배해왔다면, 중국은 이제 「국가분열방지법」을 근거로 '타이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미중 공동성명의 취지를 무력화할 국내법적 준비를 갖춘 것이다.

## (2) 남중국해에서

난사군도(Spratly Islands)를 담고 있는 남중국해는 미국의 항해자유 및 '연해시대' 개념과 중국의 영토주권의식 사이에 긴장과 대립이 발전하고 있는 곳이다. 1992년 중국은 「영해와 인근지역에 관한 법」(Law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을 발표한다.

71) Shirley A. Kan, "Taiwan: Major U.S. Arms Sales Since 1990,"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Library of Congress, August 29, 2014, "Table 2. Major U.S. Arms Sales as Notified to Congress," pp.56-59. 타이완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는 2008년 5월 집권 이후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안보 분야에서 미국-타이완 간 무기거래는 오히려 대폭 증가한 셈이다.

72) Xiao An, "US' arms sales to Taiwan impede Sino-US relationship," China.org.cn, January 17, 2013. 2014년 현재 미국의 무기 판매에 힘입어 본격화하고 있는 타이완의 군사력 현대화 상황은 다음을 참조, *Defense Industry Daily*, "Taiwan's Force Modernization: The American Side," by Defense Industry staff (<http://www.defenseindustrydaily.com>), Oct 20, 2014.

73) Tania Branigan and Paul Harris, "China fumes at US arms sale to Taiwan: Tensions rise as Beijing halts military exchange with Washington," *The Observer*, Saturday 30 January 2010.



이후 영토주권 문제에 관해 원칙적으로 비타협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 법은 중국의 영토를 정의했다. 본토와 그 해안 도서, 타이완 및 그 부속 도서로 자신의 영토를 정의한 가운데, 다이오유 군도, 팽호열도, 동사군도, 지샤군도, 난사군도(Spratly Islands)를 포함해 열거하였다.<sup>74)</sup>

이에 대응해 미국은 1995년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어긋나는 해양 관련 주장이나 해양활동에 대한 제한은 그 어떤 것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바라볼 것”이라고 밝힌다.<sup>75)</sup> 1995년 8월 미 국무장관 워런 크리스토퍼는 필리핀에서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근본이익(fundamental interest)”이라고 선언한다.<sup>76)</sup> 남중국해의 여러 섬들은 중국에게는 영토주권의 대상이지만, 미국에게는 이 지역에서 항해의 자유 확보에 필수적인 요충지들이다.

이후 미국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하였고, 이 국가들과 공동군사훈련을 시작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호주와는 새 안보조약을 체결한다. 미국은 동남아 지역 해상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중국이 난사군도에 영토적 기반을 확립할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협정들을 체결했다.<sup>77)</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 2001년 미국 안보이익의 핵심 지역으로 ‘동아시아 연해지대’를 명시한 것은 타이완과 함께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개입 정책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오키나와 열도

오키나와는 산호초로 형성된 참으로 아름다운 섬이다. 하지만 동중국해와 태평양의 분수령을 이루는 이 열도의 근현대사는 끊어지지 않는 고난과 깊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이 명확한 상황에서 천황제 국가로서의 일본의 ‘국체’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히 희생된 오키나와는 전후 질서에서는 미일동맹체제의 물질적 토대의 주요 축으로서 그 군사적 질곡의 태반을 떠안았다.<sup>78)</sup> 동아시아 대분단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 열도(沖繩諸島: Okinawa Islands)는 일찍이 1948년 당시 미 국무부 기획국장 조지 케난에 의해서 “서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공격적 타격력의 중심”으로 정의되었다. 그 때 케난은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대륙의 동부 중앙이나 동북아시아의 어떤 항구로부터든 상륙

74) Avery Goldstein,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p.110.

75) Felix Soh, "US Warns against Restrictions in South China Sea, Blcoc Press Tour to Spratlys," *Straits Times* (Singapore), May 12, 1995, p.1; Goldstein, 2005, 110-111.

76) Greg Torode, "Philippines Offered US Jets; Manila Warns over Continued Chinese Construction Work on Mischief Reef," *South China Morning Post*, August 2, 1995; Goldstein, 2005, 111.

77) Lu Jianren, "Yatai Daguo Zai Dongnan Yazhou Diqu De Liyi"[Asia-Pacific great powers' interests in Southeast Asia], *Shijie Jingji yu Zhengzhi*, no.2, 2000, pp.41-45; Goldstein, 2005, 110-111.

78) 아라사키 모리테루(新崎盛暉) 지음, 백영서·이한결 옮김, 『오키나와, 구조적 차별과 저항의 현장』(창비, 2013); 메도루마 슌(目取間 俊) 지음, 안행순 옮김, 『오키나와의 눈물』(논형, 2013); 정근식·전경수·이지원 편저, 『기지의 섬, 오키나와: 현실과 운동』(논형, 2008); 가와미츠 신이치(川滿信一) 지음, 이지원 옮김, 『오키나와에서 말한다: 복귀운동 후 40년의 궤적과 동아시아』(이담, 2014); Gavan McCormack and Satoko Oka Norimatsu, *Resistant Islands: Okinawa Confront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Rowman & Littlefield, 2012; Chalmers Johnson, *Blowback: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American Empire*, Holt Paperbacks, 2004; 이지원·장영신·김민환·주은우·진필수 지음, 『오키나와로 가는 길』(소화, 2014).

해오는 군대의 집결과 출격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오키나와에 기지를 둔 공군력과 전진배치된 해군력을 이용할 수 있다.”<sup>79)</sup> 같은 시기 맥아더도 같은 취지의 견해를 분명히 했다.<sup>80)</sup> 냉전 초기에 케난과 맥아더가 밝힌, 미국에 있어서 오키나와 열도의 군사전략적 의의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유사시 동아태지역에 대한 중국의 권력투사능력을 봉쇄하는데 있어서 미일 해양패권의 핵심 라인이다.

갈수록 통합되어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구상들은 대만 유사시 오키나와가 어떤 군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 「교토뉴스」가 2004년 5월 획득한 일본 자위대 비밀문서는 중국이 일본영토를 공격할 것을 가정한 군사력 배치 계획을 담고 있다.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군사작전을 전개하려 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중국은 오키나와 현의 남단 섬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이 문서는 가정한다. 이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는 오키나와의 남단 섬들에 7,200명의 육상 자위대를 배치할 것을 기획한다는 내용을 그 문서는 담고 있었다.<sup>81)</sup>

센카쿠(다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중국이 도전하는 것은 미일동맹에 의한 동아태 해양패권의 요충지로서 타이완과 오키나와열도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현실화한 것을 뜻한다.<sup>82)</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와 인접구역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그 안에 다오위다오 등의 도서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센카쿠 문제를 공식 분쟁화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의 역사적 배경으로 마고사키 우케루(孫崎享) 교수는 1989년 톈안먼 사건과 함께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붕괴로 더 이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국민통치가 불가능해진 조건에서 당시 실각한 자오지양(趙紫陽)을 대신해 집권한 장쩌민(江澤民) 서기가 애국주의를 내세운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분석한다.<sup>83)</sup>

1990년대 초의 중국의 움직임이 중국 안의 내부 사정과 중국 밖에서의 세계질서 변동이라는 자극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했다면, 2010년 9월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한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의 본격화는 중국의 실질적 국력 팽창에 따른 중국의 자기정체성 확장과 영토적 개념의 확장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미일의 해양패권에 대해 중국이 실력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2010년 9월의 사태는 2000년대 들어 중국의 타이완침공 가능성을 명분으로 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오키나와와 타이완 해역에서 중국을 가상적으로 한 미일동맹의 군사적 활동이 본격화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물론 그 구체적인 원인의 기점은 타이완 이등휘 정권의 독립선언 소동으로 중국이 타이완해협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 군함이 출동한 1995년 7월에서 1996년 3월에 걸쳐 벌어진 미사일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 5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하와이 근해에서 미국은 환태평양 국가들과 영국까지 참여시킨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주도했다. 림팩(RimPac)훈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일본 자위

79) Gaddis, 1987, pp.73-74.

80) Gaddis, 1987, 73-74.

81) 이 문서는 중국을 “X”로, 대만을 “D”로 표시하고 있다. 중국이 일본영토를 공격할 것을 가정한 일본 자위대 내부 문서가 발견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한다(*The Japan Times*, "Defense paper assumes China invasion of Japan," May 15, 2004). 오키나와의 섬들인 미야코섬, 이시가키섬, 요나구니섬 등에 항공자위대의 레이더기지과 주요 군사용이 가능한 공항들이 위치해있다.

82)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의 역사적 연원, 1978년 중일국교회복시 이 문제의 처리, 그리고 1992년 이후 갈등의 전개 및 2010년의 절정에 대해서는 마고사키 우케루(孫崎享) 저, 양기호 옮김, 김충식 해제, 『일본의 영토분쟁: 독도·센카쿠·북방영토』, 메디치미디어, 2012, pp.68-106.

83) 마고사키 우케루, 2012, p.96.

대와 한국군, 그리고 호주, 캐나다, 칠레, 영국의 군대들이 참가했다.

2004년 타이완은 2006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것을 가상한 컴퓨터 전쟁게임을 실시한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타이완해협 침공을 대비하는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중국을 상대로 한 군사훈련들이 타이완과 미일동맹 간에 동시에 실시된 것인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이 무렵 타이완 군 관계자는 향후 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타이완을 참가시키기 위한 포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센카쿠·다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 강화는 오키나와 해역 및 타이완해협에서 미일동맹의 군사활동이 강화되어온 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중국해에서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꾸준히 증가해온 2000년대에 한국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이러한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볼 때 제주해군기지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주요 충돌지점의 하나인 동중국해에 한국이 미일동맹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가진 해양 전초기지를 추가하는 의미를 갖는다. 제주도 남방의 이어도 문제에 중국이 민감해져 온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무관하지 않다.

2013년에 들어서 중국의 학계와 군부 및 사회 일각에서는 센카쿠·다오위다오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적 주권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의 국력 팽창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자기 정체성 의식이 센카쿠를 넘어 오키나와 열도 자체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반에서 더 광범한 긴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점이다.<sup>84)</sup>

이처럼 미국의 해양패권체제는 전후의 역사에서나 현재의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적 위상에 있어서나 오키나와를 핵심적 요충으로 삼은 가운데 구성되어 있다. 이 사실은 오키나와가 대만을 포함하여 중국의 목을 직접 겨누고 있는 전략적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과 결부되면서 중국에게는 미국의 대중국 해양패권구조가 군사적 차원을 넘어선 역사심리적인 차원의 간극을 획득하게 만든다.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동아시아 지역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식 한 가운데에는 동아태 해상패권에 대한 미국의 독점이 과거 역사적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동맹에 굳건히 근거하고 있다는 심리적 적의도 자리해 있는 것이다.

오키나와는 중국에게 미국의 동아태 해양패권이 그러한 역사적 불의를 내포한 일본과의 동맹에 기초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오키나와는 미일군사동맹과 그것에 기초하여 중국의

84) 2013년 6월 『뉴욕타임스』의 보도에서처럼, 중국과 일본은 우선 오키나와의 역사적인 영토적 귀속성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보스턴대학의 토마스 버거(Thomas U. Berger)는 일본이 1609년에 오키나와를 정벌했으며 단지 1655년 이래 오키나와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허용했을 뿐이라는 일본 측 주장을 언급한다. 반면에 중국의 국영 방송에서 중국군 삼성 장군 루오 유안은 오키나와는 1372년부터 이미 중국에 조공을 바쳤으며, 1872년에야 비로소 일본이 오키나와를 복속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마스 버거도 1943년 카이로선언(Cairo Declaration of 1943)은 중국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 선언은 일본이 무력으로 빼앗은 영토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버거는 연합국이 반환을 약속한 영토들은 역사상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지만 일본이 19세기 말부터 침략적인 팽창주의의 길을 걸으면서 강제로 빼앗은 영토들을 말하며, 오키나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버거는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기 전까지 미국은 오키나와를 미국이 점령하는 것을 미국이 동아태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능력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등 세 대통령은 오키나와가 일본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래서 1972년 닉슨행정부가가 이 열도를 일본에 반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토마스 버거의 말을 빌어 이렇게 결론지었다: “지정학상 오키나와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핵심적인 요충이며, 미일동맹의 존립기반(the bedrock on which our alliance with Japan is founded)이다.” Jane Perlez, “Calls Grow in China to Press Claim for Okinawa,” *The New York Times*, June 13, 2013.



목을 겨누고 있는 미국 해상패권의 구체적인 상징이다. 미국 군사기지로서 오키나와의 역할이 대만 해협의 유사시를 포함하여 중국에 대한 미일동맹의 칼날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져갈수록, 오키나와는 난징의 강간에 이어 중국인들의 미래 역사인식에서 중국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비수로 더욱 날카롭게 의식될 것이다.

#### (4) 한반도 서해상에서

한반도 서해상은 역사적으로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정치적 패권의 관문이었다. 역으로 일본이나 미국에게는 중국과 한반도를 포함한 여타 동아시아 지역 사이의 정치적, 전략적 관계를 통제하는 데 핵심적인 요충이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한반도 침략에서, 그리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 일본의 대륙침략에서 한반도 서해상에 대한 해상패권은 결정적이었다. 반면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야망이 좌절된 것은 조선과 명의 연합세력이 한반도 서해상에 대한 해상패권을 견지했기 때문이었다.

전후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중국 남부에 집중되어 있던 장개석 군대를 요동반도로 옮겨 그들의 만주장악을 도운 미국의 해군작전에서도 한반도 서해상이 그 요충이었다. 뒤이어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한반도의 북한군을 두동강 내어 전쟁의 분수령을 이룬 것 역시 한반도 서해상이었다.

오키나와해협이나 타이완해협,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와 같이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에 해상패권을 둘러싼 긴장이 발전할 경우 한반도 서해상에 대한 미국의 해상패권은 중국에게 더욱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평택은 한반도 서해상의 군사기지이며, 베이징이라는 중국의 정치적 심장부를 근접하게 겨누고 있는 비수와 같은 위치에 있다. 이곳에 미국의 한반도 서해상 군사기지가 정비되면서 미군이 구사하게 될 ‘전략적 유연성’은 그런 점에서 중국의 더 각별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2010년 3월에 벌어진 ‘천안함 침몰’ 사건과 그 처리과정, 그리고 이를 명분으로 한 미국 조지 워싱턴 항모의 서해상 진입 시도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그 안에서 미국의 해상패권의 한 요충지로서 한반도 서해상이 함축한 긴장을 표면화시킨 바 있다.

1990년대 초 이래 한반도는 대분단의 기축관계와 긴밀히 상호작용하면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건재를 여실히 드러내온 핵심 지점이었다. 북한 핵문제는 1990년대 초에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1994년 5-6월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군사적 해결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결국 그것을 포기했는데, 그 결정적 원인의 하나는 중국의 존재와 견제였다.<sup>85)</sup> 그것은 1950년 6월 한국전쟁의 발발, 그리고 그 해 10월 미군과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전역 점령(통일)을 좌절시킨 결정적 변수의 하나가 중국이었던 것과 유사하다. 전 주한 미대사 스티븐 보스워스의 지적처럼, 중국은 한편으로 핵무장한 북한을 원하지 않지만, 어떤 원인으로든 북한이 붕괴하여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남한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상태는 더욱 원하지 않는다.<sup>86)</sup>

85) 1994년 6월의 전쟁위기가 해소된 배경으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김일성과 회담한 것을 든다. 그러나 카터의 역할을 가능하게 한 더 큰 맥락으로서의 중국의 존재와 역할은 흔히 간과된다(이삼성,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한길사, 1994).

86)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 Seminar on “North Korea, Nuclear Diplomacy, and Reg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Speakers: Stephen W. Bosworth(U.S. Ambassador to South Korea, 1997-2001;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U.S. Department of State) and Han Sung-joo(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북한 핵문제의 지속과 미국의 협상과 타협, 2000년대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핵문제 대책의 비타협적이지만 무기력함은 대분단체제의 기축과 소분단체제 사이의 상호유지적 상호작용 패턴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는 사태였다. 2006년 북한의 궁극적인 핵실험 강행과 그 성공 또한 대분단체제 기축관계인 미일동맹과 중국의 긴장이라는 조건 속에서만 가능했다. 북한 핵무기개발과 핵보유가 초래하는 소분단체제 내적 긴장은 대분단체제 기축관계(미일동맹-중국관계)의 긴장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지속한다.

## 9. 대분단체제로부터 어떻게 출구를 개척할 것인가

### (1) 경제적 상호의존에 가린 긴장의 누적, 그리고 알 수 없는 임계점

21세기 동아시아에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일깨우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1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교훈의 핵심은 다극질서 속의 양극화(a bipolarization in multipolarity)가 초래하는 위험성이다.<sup>87)</sup> 다수의 열강이 병립한 질서가 두 개의 적대적인 군사동맹체제로 양극화할 때, 이 질서에서는 양 진영의 접점에 있는 약소국들은 물론이고 질서의 주변부에 있는 사회들까지 모두 양극화된 군사동맹체제에 편입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씨도 전 지구적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1차 대전 직전의 유럽과 발칸반도의 상황이 그러한 위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지금의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어쩌면 그와 정반대이다. 히틀러의 파시즘 국가가 다른 사회들을 침략해 제국의 팽창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다른 열강들은 그것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시의적절하게 구성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구조에서는 갈등의 접점에 있는 약소국들은 무방비 상태에 방치된다. 유럽 대륙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고립주의, 그리고 파시즘보다는 러시아 공산주의의 위협을 더 중시했던 미국과 영국의 태도가 중요한 배경이었다.

말하자면 20세기 전반기에 거의 전 인류의 삶을 전화(戰火)로 황폐화시킨 양차 대전은 매우 상반된 위험성의 양 극단, 적대적 동맹체제로의 양극화 혹은 시의적절한 국제적 연대의 지체를 각각 예증했다. 21세기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그 두 위험성 중에서 1차 대전을 초래한 유럽질서의 유형, 즉 적대적으로 양극화되는 군사동맹체제와 그것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군비경쟁 상황을 연상시킨다.

어떤 질서에서든 전쟁과 같은 폭력적인 재난은 다양한 긴장들이 축적되어 어떤 시점 어떤 지점에서 총체적인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점화됨으로써 발생한다. 그 지점을 물리학에서의 ‘복잡계’ 이론에 비유하면 ‘임계점’(臨界點, the critical point)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질서가

Korea), with Richard C. Bush III(Director, Center for East Asia Policy Studies, and Senior Fellow,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Brookings Institution) as the president, April 24, 2014.

87) 크리스토퍼 클라크는 이것을 “유럽의 지정학 체제의 양극화”(polarization of Europe’s geopolitical system)라고 개념화했고, 헨리 키신저는 “두 개의 세력권으로 화석화된 양극적 투쟁”(a bipolar struggle that led to petrification into two power blocs)의 질서라고 불렀다 (Christopher Clark, *The Sleepwalkers: How Europe Went to War in 1914*, New York: HarperCollins, 2013, p.123; Henry Kissinger,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1994, p.168).

견딜 수 있는 긴장에 과부하(過負荷)가 걸리는 시점이다. 문제는 그 임계점을 질서를 구성하는 사회들 각자의 관점에서는 인지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저마다 자기 사회 혹은 국가가 느끼는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그 결과 군비증강은 지속된다.

1990년대 이래 한국은 분단 상황을 명분으로, 그리고 고도 경제성장의 자연스런 결과로 재래식 군비를 대폭 확충한다. 미국은 탈냉전과 함께 유일 초강대국이 되면서 거의 자유롭게 세계 곳곳에서 첨단전쟁을 벌인다. 일본 역시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면서, 그리고 전후 지속된 고도 경제성장의 자연스런 결과로 군비를 크게 확충했다. 북한은 자신의 에너지난을 명분으로 의심스런 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미국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장 확충에 대한 비대칭적 대응을 모색한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상황은 중국에게도 부국강병 노선을 가속하게 이끈다. 더욱이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해 국력이 팽창한 중국 역시 자연스럽게 군비가 가속화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대양 해군을 지향해 해군력 확충에 힘쓰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 핵문제와 중국의 군비증강을 명분으로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의 동아태 해상패권을 견지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부추기고, 미국 스스로 해군력의 60퍼센트 이상을 동아태 지역에 배치하는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공식화하였다.

사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기원은 최근의 공식화 이전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지속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로써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안에서 긴장은 때로는 서서히 때로는 빠르게 쌓여왔다. 그럼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 폭발의 임계점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낀다. 중국의 세계의 공장이 되고, 이제는 더 나아가 세계의 시장의 역할도 하기 시작하면서 동아시아 사회들이 미국과 더불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통합되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조건에서는 누적되어가는 군사적 긴장은 보이지 않게 된다. 적어도 평화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언제까지나 통제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환상에 불과할 수도 있는 평화와 안정의 이미지가 지배한다. 심화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제적 상호의존에 의해 긴장은 가려지는 것이다.

1차 대전 직전까지도 유럽의 주식 시장은 전쟁을 예측하지 않았다. 당시 세계를 지배한 이른바 제1차 세계화의 효과로 세계의 주요 열강들은 깊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었다. 그런 만큼 주요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은 다른 한편에서 누적되어가고 있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전쟁은 마침내 일어나고 말았다. 1929년과 1987년의 주식 시장 대폭락이 글자 그대로 ‘대폭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폭락사태가 갑작스럽게 왔기 때문이다. 그것이 갑작스러웠던 것은 아무도 그 폭락 사태를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주식 거품은 그것이 임계점에 달해 폭발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유발하지 않으며, 그만큼 그 안의 긴장은 눈에 띄지 않게 축적된다는 것을 뜻한다.

더욱이 오랜 평화는 사회들이 저마다 힘쓰고 있는 군비증강의 파괴적 결과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든다. 군비증강의 지속과 평화는 언제까지나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군비증강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투자로 아주 쉽게 정당화되는 풍토에 젖는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군사적 긴장의 축적도 사람들의 경계심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속될 수 있다. 사회들의 행동은 서로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축적하는 방향인데,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키워가는 평화 이미지의 거품도 커진다. 평화 이미지의 거품은 군사적 긴장 축적의 실체를 계속 가린다. 어느 시점에서 정치군사적 긴장은 임계점에 도달하고, 그 순간 평화 이미지의 거품은 터진다. 평화의 환상은 부서지고, 사회들이 투자를 집중한 것은 오로지 경제적 번영과 경제통합에 있었을 뿐, 정치군사적 긴장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는 데는 거의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뒤늦게야 깨닫게 될 수 있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속에서 작동하는 사회들의 행동 패턴은 그러한 비극적 조건에서 얼마나 비껴나 있는가. 중국의 확장되는 자아정체성과 미일동맹의 해상패권의 기득권 사이에 긴장이 축적되고 저마다 열을 올리고 있는 군비증강이 그 긴장의 축적을 실체화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반도는 또한 언제라도 발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질서에서 긴장 폭발의 임계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긴장이 임계점에 더 가까이 가기 전에 대분단체제의 틀을 넘어서 공동안보(共同安保, common security)로 나아갈 출구는 없는가. 있다면 어떤 방향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결코 쉽지 않은 구조적인 난제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구해야 할 변화 방향에 대한 일정한 개념을 모색해야 한다. 이 모든 시도의 전제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복합적 긴장 구조와 중층적 분단의 구조를 내포한 만큼, 그 해체 역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는 동시적 과정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 (2) 대분단체제의 기축 관계에서 지정학적·군사적 긴장을 넘어

먼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가 내포한 양극화된 적대적 군사동맹체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은 오늘의 동아시아 사회들에게 그 위험성을 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맹체제의 점진적 탈군사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각 군사동맹이 핵심 명분이 되는 위협을 함께 해소하고, 그 해소와 함께 군사동맹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간주함을 뜻한다. 군사동맹의 존재이유인 군사적 위협의 평화적 해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그 위협이 해소되면 해당 동맹은 해체 혹은 탈군사화를 추구한다는 얘기이다.

한미동맹의 경우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사명을 다하고 해체하거나 탈군사화된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미일군사동맹은 애당초 한국전쟁으로 구체화된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런 만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함께 미일동맹도 탈군사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미일동맹의 해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동북아 4대 강국과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공동안보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오로지 그런 조건에서만 미일동맹 해소가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으로 나아가는 사태를 막게 될 것이다.

한편 2차 세계대전의 경험도 유의해야 한다.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이 무력에 의한 팽창을 추구하는 위협에 직면했음에도, 팽창주의 국가의 주변에 있는 상대적인 약소국들에 대한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국제적 연대가 구성되지 않을 때 위기는 발생한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중국 이외의 국가들이 공유하는 불안은 중국이 기존의 질서를 일방적인 무력으로 수정하려 할 경우에 관한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세력균형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2차 대전 이전의 독일과 같이 무력 팽창을 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을 군사적인 공동의 가상적으로 삼아 대중국 봉쇄를 위한 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방치와 봉쇄형 군사동맹체제라는 양 극단을 지양하고, 그 중용을 추구해야 한다. 그럼 그 중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중용은 첫째, 중국과 미일동맹의 잠재적 갈등의 접점에 있는 지역들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다자적인 제도적 투자에 있다. 동아시아 대분단선을 따라 존재하는 군

사적 전초기지들을 ‘평화지대’화하는 노력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타이완해협의 양안, 오키나와, 제주도의 남방해역과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모색이다.<sup>88)</sup> 또한 한반도의 서해 NLL지역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포괄적 해법을 통해 실현한다.

평화지대화는 그 지대에 속한 땅에 대한 주권을 이웃나라 혹은 추상적인 공동체에 헌납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대에 속한 땅과 영해와 영공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제한하는 공동안보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지역의 탈군사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동아시아 대분단선 위에 놓여 있는 지역들은 그 성격상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눌 수 있다. 남중국해가 하나이고, 타이완해협의 양안과 센카쿠·다오위다오를 포함하는 오키나와 열도가 한 묶음이 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어도 해역을 포함하여 동중국해역과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수역이 만나고 방공식별구역들이 겹치는 곳이다. 한반도 서해상은 중국과 한국의 심장부들의 전략적 접점이다.

남중국해역은 중국과 타이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평화지대를 구성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타이완해협의 양안과 오키나와는 각각 중국과 미국 및 일본에 의해서 과잉하게 군사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타이완해협의 양안의 일정한 범위를 비무장화하는 것을 중국이 주도하고, 센카쿠·다오위다오를 포함하는 오키나와 해역을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여 일정하게 비무장화 혹은 비군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혹은 제주도 남방해역)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삼국이 이 해역을 평화지대화하는 비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비전의 한 가운데에서 제주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서해상에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궁극적으로 서해(황해)의 과잉 군사화를 예방하는 평화지대화의 비전 개발 또한 요청된다.

이 해역들은 모두 미일동맹의 해상 기득권과 중국의 확장하는 자아가 맞부딪치고 있는 곳이다. 그로 인한 긴장은 세월이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지역들에서의 평화지대화 문제는 이상주의자들의 몽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요청으로 다가올 날이 있을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대분단의 기축 관계에 작동하고 있는 군비경쟁에 효과적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구체적인 군비통제 어젠다를 개발해야 한다.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연결되어 있는 미사일방어망 구축이 당면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군비경쟁의 핵심 문제이다. 핵무기의 위협과 미사일방어체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일차적인 제도적 장치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한 한반도와 일본을 비핵무기지대로 만들고, 그 주변 3대 핵보유국이 이 지대에서의 핵 활동과 핵 위협을 배제하고 소극적 혹은 포괄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국제법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sup>89)</sup> 이 지역의 비핵무기지대화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대한 군비통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함께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성의 전제이지만,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성을 위

88) Samsung Lee, "Beyond the East Asian Grand Division: Imagining an East Asian Peace Belt of Jeju-Okinawa-Taiwan Islands," Nam-Kook Kim, ed., *Globaliz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and Asia*, Farnham, England: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9, pp.161~179.

89)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제안의 가장 타당한 형식은 우메바야시 히로미치(梅林宏道) 博士가 1996년 이래 주장해온 3+3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梅林宏道, 『非核兵器地帯: 核なき世界への道筋』(東京: 岩波書店, 2011); 李三星·梅林宏道 外, 『東北아시아 非核地帯』(살림, 2005);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지음, 김마리아 옮김, 『비핵무기지대: 핵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서해문집, 2014.

한 한국 및 일본과 핵보유 3개국의 공동 노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0 핵정책 검토』(NPR 2010)에서 비핵국가에 대한 핵선제사용을 배제하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동시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에서 벗어난 나라들, 특히 북한은 예외로 특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도 역으로 더욱 강조한 결과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서는 중국의 핵무기 정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강화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핵무기가 수적으로는 작지만 중국이 핵무기체계의 질적 양적 현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핵무기 관련 전략과 독트린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sup>90)</sup> 중국의 핵무기정책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축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은 동아시아에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핵무기 선제사용 옵션(nuclear first-strike option)을 견지하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미사일 방어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91)</sup>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의 미사일방어 구축은 북한의 핵무장과 함께 동북아시아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차대한 숙제로 부상해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구축 의지는 일본과 한국 뿐 아니라, 최근 타이완에 대한 미사일방어시스템 판매 노력으로 연결되고 있어서, 미중 사이의 군비경쟁과도 직결되고 있다. 오늘날 대분단의 기축관계와 소분단체제 모두에서 긴장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 그리고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군비통제의 동시적인 모색이 긴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결국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전반의 출구 모색은 일차적 숙제인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로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로 직결된다. 2003년 미국이 제안해서 시작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2002년 북미대화를 폐기한 미국이 9.11 이후 러시아와 중국까지 동참을 선언한 미국 주도의 전 지구적 대테러 연합을 배경으로, 북한에 대한 다자적 압박외교를 위한 틀로서 마련한 장치였다. 하지만 미국의 대테러전쟁의 응집력 약화와 함께 6자회담은 미국 외교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어느새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로 변했고, 그 틈바구니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강행될 수 있었다. 어쨌든 이렇게 성립한 6자회담은 미국 일방의 독주가 아닌, 미일동맹과 중국의 의견조율 장치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이것은 이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공동안보체제의 구성을 위한 제도적 자원으로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향후 6자회담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지정학적 긴장을 해소하고 장차 이 지역에 공동안보의 제도적 원형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회담의 틀이 보다 제도화될 때 6자회담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6자회담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 협정에 6개국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인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위한 노력을 4개 협정 당사국이 협정 안에서 약속할 수 있도록 6자회담을 통해 지원한다.

둘째, 동북아 공동안보체제의 첫걸음으로서,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약속한 동북아 비핵무기 지대화의 약속을 6자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협상하고 성사시킨다. 이와 함께 동북아 공동안보체제의 제도화와 공동안보기구의 설치를 추진한다. 이 기구의 설치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함께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90) Secretary of Defense, *2010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April 6, 2010, p.v.

91) ‘NPR 2010’은 미국이 여전히 전술핵무기도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NPR 2010, p.xiii).



셋째, 아세안과의 연계를 통해서 동아시아 공동안보체제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남중국해의 평화지대화 문제 등을 이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3)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긴장은 ‘민주주의 문명’의 근본적 표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을 포함한다. 이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민주적 자본주의’의 관점을 대변한 것이 1990년대 새뮤얼 헌팅턴과 후랜시스 후쿠야마의 논리라면, 비슷한 시기 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제기되었던 ‘아시아적 가치’에 관한 논의가 중국 국가권력의 관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본다. 첫째 중국의 국가권력이 시사하듯이 민주주의적 가치와 정치적 권위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민주주의 문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부국강병의 업적을 바탕으로 일정한 정치적 권위의 획득과 유지는 물론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 권위가 곧 민주주의의 가치와 부합한다고는 할 수 없다. 표현과 언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국적 경로’(中國的 經路)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적 민주주의’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한국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는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국가의 부강과 민중의 복지가 우선이고 언론의 자유는 부차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권위주의적 복지국가의 이념은 될 수 있어도 민주주의는 아니다. 중국의 민중과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치발전의 목적지도 민주주의일 것이다. 그것이 정치사회적 차원에서의 대분단체제 극복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미국, 중국과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체제의 차이를 ‘문명적 차원의 이질성’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중국을 타자화하는 담론도 경계해야 한다. 20세기 중국의 역사는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를 향한 역동적인 역사적 실천의 과정이었다. 중국의 20세기는 어떤 사회보다도 역동적이고 심오한 사회정치적 변동의 기록이었다. 1911년 공화주의 혁명을 했다. 1949년엔 공산주의 혁명을 관철했다. 1980-90년대의 중국은 사회경제 질서에서 자본주의 경제혁명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구현했다. 이로써 중국의 20세기는 지구상의 어떤 사회보다 크고 복잡한 사회이면서도 세 가지의 전혀 성격이 다른 혁명들을 거대한 스케일로 실천에 옮긴 사회이다. 여기에 1989년 천안문의 유혈로 억눌려지고 말았지만 그 이전 약 10년에 걸쳐 피어올랐던 자유주의적 반란(a liberal rebellion)을 미완의 혁명으로 부를 수 있다면, 중국은 거의 단 하나의 세기 안에 네 차례의 혁명을 실천 혹은 실험한 사회이다. 그야말로 격동의 역사였다. 중국 사회는 혁명의 전시장이며, 중국인들은 혁명의 전문가들인 것이다. 장기적 시야에서 볼 때 그 사실이 웅변하는 것은 중국 사회의 동태적(動態的) 성격이다. 인간 사회의 복잡성과 함께 그 역동성을 20세기 중국사회 만큼 여실히 보여주는 사회를 찾기 어렵다.

그것이 곧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민주주의로 직행하는 역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거대 중국 사회가 ‘민주’를 향해 나아가는 고뇌와 고투의 역정이었던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에 있어서 시간적 지체와 굴곡을 수반하는 ‘역사적 우회(歷史的 迂回)’라고 할 수 있어도, 헌팅턴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문명적 이질성을 확인하는 역정은 결코 아니다.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에 도달한 것은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지극히 최근의 일에 불과하다.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에서 중국과 그 나머지 사이에 현재 존재하는 차이를 문명적 차이로 규정하는 '문명의 형이상학'과<sup>92)</sup> 그러한 정치적 문명론에 기초해 상대방을 타자화하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논리에 포로가 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깊이 경계해야 할 점이다.

#### (4) 대분단체제의 역사심리적 간극의 해소: 동아시아 역사 대화 방식의 전환

어떤 사회에도 자기성찰적 역사인식을 거부하는 세력은 있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정치사회적 주류를 형성하는 것은 보수세력이다. 보수세력이 공유하는 특징의 하나는 다른 사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적 태도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독일도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독일의 경우 전후처리(戰後處理) 방식과 전후 유럽질서는 독일에서 역사에 대한 몰반성적(沒反省的) 세력이 주류(主流)로 되는 것을 막았다. 역사의 단절이 밖으로부터 강제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달랐다. 태평양전쟁에도 불구하고 전후 미소 냉전과 중국의 공산화, 그리고 한국전쟁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를 신속하게 구성했고, 미국은 아시아 대륙 경영을 위해 맺었던 전전(戰前)의 일본과의 지정학적 연합을 재빨리 복원했다. 이번에는 냉전주의적 반공 동맹이 미일연합의 기반이었다. 이렇게 전후 동아시아 질서는 대분단체제로 귀결되면서, 전후 일본 지도층은 패전의 결과는 수용하면서도 역사인식의 혁신은 거부할 수 있었다. 상징의 형식으로나마 존속한 천황제와 천황의 전범 면책(免責)은 일본의 역사인식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대분단체제 안에서 일본 지도층은 역사인식의 철저한 수정을 기획하거나 실행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일본의 전후 세대는 자국의 역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일본의 전후 세대는 다른 동아시아 사회들과 소통하는 능력에서 중대한 핸디캡을 안고 성장한 결과가 되었다. 일본은 중국 등 아시아의 이웃나라들에게 사죄의 관념보다는 과거 제국 체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시아에 대한 또 하나의 '문명-야만'의 틀로 차별하고 적대하고 증오하도록 교육받았다. 미일동맹의 메커니즘을 통해 일본은 역사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고, 반성할 필요도 없었다. 일본의 전후 세대에게는 자기성찰적 교육이 필요했지만, 그들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의 전후 세대에 대해서 독일인들에게 유럽인들이 요구했던 수준의 반성적 역사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리일 수밖에 없다.

결국 동아시아인들은 역사심리적 간극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근원적인 딜레마 안에 갇힌 채 살아왔다. 첫째는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기원과 책임에 관련된 딜레마이다. '반성하지 않는 일본사회'는 좁게 보면 일본이라는 특정 사회의 역사적 자기성찰의 미숙, 즉 정신적 미성숙의 문제이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보면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구조적 속성'이다.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구성 과정과 그 안에서 일본의 위상은 전후 유럽 질서의 구성과 그 안에서 독일의 위치와 달랐다. 그 결과 유럽인들이 독일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었던 반성적 역사의식의 기준을 일본에게 기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일본의 전전 세대는 이 질서 속에서 반성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냉전적 대결의 구도 속에서 일본은 '자유세계'라는 새로운 문명 표준의 동아시아적 보루이자 모델로 간주되었다. 즉 반성하지 않는 일본은 일본의 책임인 동시에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논리적 귀결이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일본의 전후 세대는 자기 성찰적 역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그들은 역사 인식에서

92) 이삼성, 『세계와 미국』(2001), 제10장 「문명의 형이상학과 패권의 지정학」 참조.

동아시아의 다른 사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기회를 박탈당한 꼴이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의 다른 사회들이 일본의 전후 세대에게 역사 반성을 요구할 때는 필연적으로 두 번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대분단체제 지속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일본이 더 성숙한 반성적 역사의식을 획득하지 않으면 대분단체제의 장기지속 가능성과 잠재적 파괴력이 커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주변 사회들은 일본에게 역사 반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첫 번째 딜레마의 핵심으로 제기한대로 동아시아 질서의 맥락에서 일본의 전후 세대는 그런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대분단체제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지속시키는 장치로 기능한다. ‘반성적 역사의식이 미숙한 사회’에 그것을 강요하는 역사 논의는 대분단체제의 악순환의 한 고리로 역기능하는 것이다.

요컨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일본의 역사 반성이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동아시아의 역사 담론은 대분단체제의 지속성을 더 심화시키는 역기능이 크다. 이 상황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 점을 직시하지 않으면 동아시아의 역사 담론은 이 지역의 대분단체제의 해소가 아니라 그것을 지속시키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동아시아 역사 반성 딜레마’의 본질이며, 대분단체제가 내장(內藏)하고 있는 정신적 폐쇄회로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할 출구는 대분단체제의 악화가 아닌 점진적 해체에 기여하는 방식의 역사 대화를 개발하는 것에 있다. 문제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일 것이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선 동아시아에서 역사 대화 방식의 전환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 그 사유의 전제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책임의 인정과 보상의 요구는 반드시 동아시아 사회들 간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려운 일이라 해도 가해자 사회의 국민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가해자 사회와 국가가 진심과 자발성을 갖고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기까지 정치외교적 압박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 대화와 반성의 문제를 각 사회의 국가권력이 주도하는 상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역사 담론이 국가권력의 정치적·민족주의적 동원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역사 대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의 진실 규명과 화해를 모색하는 방법에 관한 보다 보편적인 담론의 구조가 필요하다. 역사 반성이 특정한 국가와 특정한 사안들에 집중적으로 강요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해당 사회는 그것을 편파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반성을 거부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즉, 특정한 침략전쟁과 특정한 전쟁범죄에 집중하기보다 20세기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모든 침략전쟁과 모든 전쟁범죄에 대한 보편적 비판의 규범 안에서 역사 대화가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사 대화 방식을 모색할 것인가. 지금까지 동아시아 사회들은 이 문제를 다루는 주체로서 각국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시민사회에 맡겨왔다. 이제 「역사의 반성과 화해를 위한 동아시아 진실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실위원회’가 아니고 ‘진실연구위원회’이다. 특정한 국가가 진실을 규명하여 판정하는 ‘진실위원회’와 달리, 동아시아의 많은 관련 사회들의 정부와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연구하고 화해를 모색하는 다자간 포럼이라는 의미에서 ‘진실연구위원회’라고 함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공동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참가국들이 정부 차원에서 다른 정부들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한다. 참가국에는 일본, 중국, 남북한, 필리핀,<sup>93)</sup>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태평양전쟁에 관계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한국전쟁에 관계된 러시아도 일정한 형태로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위원회의 활동 영역은 불특정 기간에 걸친 첫 단계에서는 학술적 역사 대화로 한정한다. 학자에게만 한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도 학술적 발표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20세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에 관련된 모든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연례적인 학술회의의 주관을 주요 임무로 한다. 학술회의의 참가자격은 특정한 동아시아 국가 혹은 특정한 NGO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국적을 불문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참여하도록 한다. 동아시아인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인일 수도, 유럽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위원회의 위원들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의 내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되, 각국 학자들로 구성된 「학술회의 발표신청논문 예비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 논문의 객관성 최소요건을 심사하도록 한다. 또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출간(出刊) 대상은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것에 한정하도록 한다. 이 진실연구위원회는 또한 산하에 독립성을 갖는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소위원회」를 두되, 역시 순수한 학술적 의견종합 기능을 갖게 하고, 일정한 합의가 가능한 한에서 연구성과의 대체적인 종합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학술적 종합은 물론 '합리적 종합'을 의미하며 만장일치를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학술회의는 여러 분과별로 진행하되,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에 관한 보편적 개념과 규범을 논의하는 분과, 난징학살에 관한 진실 규명과 화해 문제를 다루는 분과, 전시 여성의 성노예화에 관한 진실 규명과 화해를 다루는 분과, 한국전쟁 혹은 베트남전쟁을 다루는 분과 등을 우선 생각해볼 수 있겠다. 분과의 개설은 위원회 위원 과반수 혹은 3분의 2의 동의에 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위원회의 사무국의 위치는 홍콩, 오키나와, 제주도, 혹은 인도차이나의 한 도시 가운데서 선정하고, 학술회의 개최 장소는 이 네 곳을 순회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위원회의 공동운명을 통해서 동아시아 사회들은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의 문제들에 대한 진실 규명과 화해를 모색하는 방법에 관한 보편적인 담론의 구조를 만들어간다. 둘째, 전쟁범죄 담론이 국가권력의 정치적 수단으로서 혹은 민족주의의 정치화 수단으로서 동원될 여지를 줄인다. 셋째, 전쟁과 범죄에 관한 책임인정과 화해의 방식에 관한 보다 보편적 설득력을 지닌 동아시아 공동의 인식과 담론의 구조를 형성해 감으로써, 미래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의 인식론적 기초를 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진실연구위원회」는 학술적 진실 규명과 연구성과의 학술적 종합에만 전념한다. 진실연구위원회가 축적한 연구성과를 동아시아 국가 정부들의 역사반성과 화해 조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다분히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것은 별도의 정부간(政府間, inter-governmental)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역사반성과 화해를 위한 동아시아 정부간 협의회」는 학술적 접근 중심의 진실연구위원회와 달리 정부간 기구로 구성한다. 이 기구는 동아시아 사회들의 정부간 협의체이며, 이 협의체 안에서

93) 만주와 상하이-난징을 비롯한 중국의 많은 지역과 타이완,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침략전쟁 혹은 군사적 점령 및 식민주의적 지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전쟁범죄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도 태평양전쟁 기간 전쟁과 전쟁범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 중의 하나인 '바타칸 죽음의 행진'은 1942년 4월 9일에서 약 3개월에 걸쳐 일본군이 약 8만 명의 필리핀 민간인과 미군 포로를 약 100킬로미터 강제 이동시킨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약 1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각 국은 진실연구위원회의 연구 및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역사반성과 화해를 위한 정부차원의 행동과 조치를 논의한다. 이 협의체는 어떤 역사반성의 안건에 관해서 만장일치의 결정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 진실연구위원회에 의해 연구의 ‘합리적 종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정부는 그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하여 다른 정부 대표에게 화해를 위해 요망하는 역사반성의 행동과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권고하되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정부간 협의체의 사무국은 진실연구위원회의 사무국과 같은 장소에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역사 반성과 화해를 위한 진실연구위원회」와 「역사의 반성과 화해를 위한 동아시아 정부간 협의회」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첫째, 역사 반성 문제를 관련된 국가권력들 사이의 직접적인 정치적 대립의 문제로부터 한 걸음 분리시킨다. 역사 반성을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정치외교적 문제로서 접근하기보다, 동아시아 사회들 사이의 공동의 역사적 성찰과 그에 기초한 역사인식의 소통의 문제로 전환시킨다. 둘째,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에 관련하여 동아시아 사회들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그 역사와 미래지향적 규범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공동체적 접근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적 범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모의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의 참여와 그 역사적 범죄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제안하면,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일본 우익의 논리일 수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우익의 그런 말과 우리가 하는 말은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누가 말하느냐의 차이이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의 전쟁 모의, 두 가지 모두에 의한 피해자이다. 둘째, 자기중심적인 편파적 관점인가, 아니면 침략전쟁과 전쟁범죄 모두에 대한 보편적 비판에 입각한 관점인가의 차이이다. 일본 우익은 ‘난징대도살’과 전시 여성의 국가권력에 의한 성노예화 문제에 대해 그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부정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국전쟁 책임은 비판한다. 자기성찰은 삭제해버린 타자 비판에만 열중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는 두 차례 모두에 의해, 즉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는 약 40년에 걸친 식민지배의 고통을, 그리고 한국전쟁에 의해서는 수백만의 인명이 희생을 당했다. 우리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그것이 수반한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비판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역사 대화의 방식의 전환에 대한 이 같은 제안을 동아시아의 국가권력들이 제기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영에 가깝다. 처음의 제안은 동아시아의 진보적 시민사회들이 담당할 몫이다. 동아시아 시민사회들 사이에서 역사의 반성과 화해를 위한 역사 대화의 대안적 방식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동아시아의 정부들이 공감하고 실천에 나설 조건이 성립할 것이다. 동아시아 시민사회들 중에서도 최초의 제안은 아마도 한국의 진보적 시민사회가 적합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제국주의적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사회에서 먼저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안적 역사 대화의 방식을 논의한 것 자체가 가해자의 논리로 왜곡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이 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한국 혹은 중국의 시민사회와 학계가 먼저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시민사회는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의 경계가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는 시민사회에 앞서 학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진보적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이에 대해 중국 학계와 일본의 시민사회 및 학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시민사회와 학계가 공동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을 움

직여 역사 반성과 화해를 위한 대안적 역사 대화를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추동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9. 대분단체제 안에서 한국의 위치와 선택

### (1) 대분단체제 안에서 한국의 위치: 중간자적 존재로서의 한국

대분단체제 안에서 한국은 중간자적 존재라는 점을 자각하고 인정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한반도는 역사의식을 포함한 가치의 영역과 지정학적 견지에서 모두 "중간자"적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한반도가 항상 동아시아의 긴장과 위기의 중심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선택과 역할이 동아시아의 미래에 갖는 중요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연합 사이의 지정학적 패권경쟁에서 중간자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해양연합세력과 대륙세력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태 지역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은 크게 세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균형 지속의 국면이다. 1945년 8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반도의 분단, 전쟁, 그리고 분단의 공고화에서 21세기 초의 북한의 핵무장 사태에 이르기까지 두 세력의 권력이 기본적으로 균형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둘째는 대륙세력 우위의 국면이다. 해양세력이 퇴조하거나 해양동맹이 와해되는 반면에 대륙세력이 남중국해와 대만,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국면이다. 미일동맹이 확보해온 동아태 해상패권이 무너지고 이를테면 팍스 시니카(Pax Sinica)로 이행하는 상황이다.

셋째는 균형의 국면과 대륙세력 우위 국면 사이의 과도기적 국면이다.

이 세 국면 가운데서 현재는 균형 지속의 국면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균형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그 후에도 대륙세력 우위가 당장 오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수십 년간의 과도기적 국면이 있을 수 있다. 균형 국면과 과도기적 국면을 합해서 반세기가 될 수도 있고 한 세기가 될 수도 있다.

반세기 혹은 한 세기 후에 대륙세력 우위가 완전해진 조건이 된다면, 한반도의 국가는 대륙 중심의 질서에 어떤 형식으로든 편입되게 될 것이다. 대륙세력 우위의 조건이라는 것도 그 때 중국의 정치체제와 이념이 어떤 성격의 것이 될 것인가에 의해서 큰 폭의 차이가 있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해양세력과 경쟁에서 지정학적·문명적으로 안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단순한 부국강병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에서 또 하나의 질적 도약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또 하나의 질적 변화가 없이 단순한 부국강병의 진전만으로 중국이 해양연합세력을 압도하는 팍스 시니카를 이루는 일은 상상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

문제는 앞으로 반세기가 될지 한 세기가 될지 알 수 없는 '균형 국면과 과도기적 국면을 포함한 장기 미래'에서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조건이다. 한반도가 동아시아 질서의 중간자적 존재라는 것은 이 장기 미래 전체에 걸쳐 적용될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 (2) 미일동맹과 중국 간 세력균형 이동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의 변동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형성과 구조에서 중국의 내적 정체성의 구성(혹은 재구성)은 처음부터 결정적 변수. 미소관계는 중국 사회의 내적 자기결정이라는 결정적 계기를 통해서만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결정에 투영될 수 있었다. 신중국 성립 이후의 중국에게 한반도의 향배는 신생국가(중화인민공화국)로서 극단적 위협을 꾀하는 것을 의미한 전쟁(미국과의 군사적 충돌)도 불사할 만큼의 핵심이익의 영역이었다. 한국전쟁의 발발 자체가 그러한 중국의 한반도 인식과 그에 바탕한 중국의 선택의 결과이며, 이 전쟁은 다시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결정적 공고화에 책임이 있다. 냉전시기 내내, 그 전반기에는 비타협적 형태로, 그 후반기에는 타협적 형태로 중국대륙과 미일동맹 사이에 지정학적, 정치적, 역사심리적 긴장의 구조가 존재했다.

소련방 붕괴 후 유라시아대륙과 해양연합 사이의 긴장이 중국 대 미일동맹의 대립으로 단순화되고, 북한의 생존과 안보의 열쇠 역시 중국의 '책임 영역'으로 단순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국력 팽창과 함께 중국의 '자아정체성'이 확장되면서, 미일동맹의 동아태지역 해상패권이라는 기득권과 중국의 확장되는 영토적 자기의식 사이의 긴장이 축적되어 왔다.<sup>94)</sup>

남중국해, 대만해협, 오키나와 해역 포함한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서해상에서 중국의 영토의식 확장 혹은 재구성과 미일동맹의 해상 기득권 사이의 긴장이 발전해 왔다. 중국의 입장에서 현재와 미래의 동아시아에서 '대전략'적 핵심이익 지역은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 그리고 대러시아 관계라고 대별할 수 있다. 남중국해는 아세안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서, 대만은 경제통합을 통한 장기적 통일전략을 통해서, 그리고 러시아는 SCO를 통한 유라시아대륙연합의 구성을 통해서 일정하게 평화적 변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에게 가장 난해한 요소이면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한반도이다. 중국대륙과 해양연합이 대치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에서 한반도는 중국의 심장부에 대한 결정적인 비수 아니면 최선의 보호막이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대만이 중국의 동아태 해양진출 여부의 열쇠를 쥐는 관문이라면, 한반도는 중국대륙의 심장부로 직결되는 관문이다. 중국의 국력 팽창에 따라 확장되는 영토적 자기의식, 자아정체성의 확장에 따라 한반도가 갖는 그러한 전략적 의의는 중국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

그 만큼 중국이 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전략적 인식이 심화, 확장, 구체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북한을 완충지대로 보는 것이 20세기 말까지의 중국의 한반도 의식이었다면, 오늘날 중국의 한반도 의식은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 전략'으로 진화, 확장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3)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체성의 재구성을 향한 중국의 요구와 노력의 구체화 · 본격화

그런 만큼 한반도 전체의 '최소한 중립지대화'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욕구가 본격화될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미국의 상대적 쇠퇴로 인해서 미일동맹 안에서 미국의 역할의 상대적 축소와 일본의 역할의 상대적인 확대의 추이가 분명해질 수록, 중국에게는 한반도의 중립지대화를 촉구할 명분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자아정체성의 확장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체성의 재구성에 대한 중국의 기대치가 높아진다.

94) 이삼성, 「21세기 동아시아의 지정학: 미국의 동아태지역 해양패권과 중미관계」, 2007, pp.5~32.

그것은 중국이 한편으로 한반도에서의 중국 안보의 파트너를 북한을 단위로 보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시야에 넣고 사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단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통일된 한반도를 포용할 수 있다는 자세로의 전환을 내포한다. 그것은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한국인들에게 한편으로 심각한 도전인 동시에, 깊이 고려해야 할 하나의 기회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중국 견제 혹은 포위용으로 비쳐지는 미일동맹의 하위 요소로서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되는 것에 대한 이클테면 “포용적 불용”을 내포한다. 중단기적으로 포용하되, 원칙적 및 장기적으로 절대 불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사유의 변화는 한국을 자신의 영향권 혹은 적어도 중립지대로 전환해낼 자신의 특히 비군사적 영역들에서의 장기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포한 것일 수도 있다.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는 향후 수십 년간 중국대륙과 미일동맹 사이에 평화공존의 양극화 질서(polarized but relatively peaceful bipolar regional system) 혹은 현재와 같은 적대적 양극화 질서(confrontational polarized regional system)의 기로에서 요동할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중국에게 최악의 구조의 한 요소는 대결적(적대적) 양극화 구조에서 한반도가 미일동맹의 군사적 전초기지로 지속되는 상황이다. 그럴수록 중국의 군사안보의 대전략에서 향후 최주요 요소의 하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체성의 중립지대화에 두어진다.

#### (4) 동아시아 질서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미래는 몇 가지의 모델을 가상해 볼 수 있다.

- ① 중국패권 체제 (Pax Sinica)
- ② 혼돈의 다극질서 (chaotic multipolarity)
- ③ 평화적 양극질서 (peaceful bipolarity between China & the US-Japan alliance)
- ④ 대립적 양극질서 (confrontational bipolarity between China & the US-Japan alliance)
- ⑤ 다자적 제도들이 기능하는 평화적 다극 체제 (relatively peaceful multipolarity: peaceful coexistence of great powers and smaller states under a set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이들 가능한 질서 유형들 가운데서 첫 번째 중국패권의 체제는 오늘날 중국의 국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적어도 장기적인 미래 전망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장차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평화적이든, 대립적이든 미·일 동맹과 중국을 두 축으로 하는 양극체제(bipolarity)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될 것이다. 중국에 의한 일원적 패권체제(Chinese unipolar moment)는 결코 가까이 있는 현실이 아니다. '중국 천하 체계'의 복원을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성급한 논의이다. 다만 동아시아에서 미국 패권체제를 제한하는 중국의 힘은 1950년 11월에,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1994년 6월에 입증되었듯이,<sup>95)</sup> 한반도에 언제나 실재해왔다는 것 또한 인식해야 한다.

적어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지배하는 팍스 시니카 체제가 되리라는 전망은 중국이 지난

95) 1994년 6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해결 시도를 잠재우는데 중국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는 이삼성,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북미 핵협상과 한국 통일정책의 비판적 인식』(한길사, 1994).

30년과 같은 고속성장이 앞으로도 장기 지속하리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역사의 역동성을 생각할 때, 그러한 전제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중국의 성장 지속이 중단되면 통일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그 경우 혼돈의 다극질서라는, 위의 두 번째 시나리오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수십 년에 걸쳐 동아시아를 지배할 보다 현실적인 질서 형태는 중국대륙 혹은 유라시아 대륙연합을 한편으로 하고, 미일동맹이라는 해양세력연합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극질서가 될 것이다. 양극화된 질서가 지속적인 평화공존을 영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평화적인 양극질서'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모순을 내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의 판단으로는 위의 다섯 가지 미래상들 중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형은 이처럼 다자적 제도들이 기능하는 평화적 다극질서라고 생각한다. 이 평화적 다극 체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세안, 인도, 유럽,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다자적 제도들의 틀 안에서 다면적으로 소통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질서를 가리킨다. 이러한 평화적 다극질서의 핵심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상호적대적인 동맹체제들에 편입되지 않고, 동맹의 정치로부터 자유롭다는 데에 있다. 문제는 여러 강대국들과 우리들 자신이 체계적이고 치열한 노력을 전개하지 않고는 기존의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논리가 관철되는 '대립적 양극질서'가 현실화되는 현재의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동시에 원한다면 가상적을 상징하는 적대적인 군사동맹들을 단위로 구성된 양극화된 동아시아 질서의 충직한 구성요소로 머물러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 질서의 틀이 더욱 고착하기 전에 제3자로서의 전략적 행위자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비전과 능력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동아시아 질서가 평화공존하는 비군사화된 양자적 우호협력관계들과 다자적 공동안보의 제도들로 구성된 대체적으로 평화적인 다극질서로 재구성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중심에 서기 위해 분투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극복에 한반도가 기여할 바의 일차적인 근본 전제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창조하고 경영하는 일이다. 그러한 가능성은 한국이 대립적 양극질서(confrontational bipolarity)의 발전을 방조하고 그 안에서 일방적인 '가치동맹'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기대 난망이다. 그런데 "미국과의 가치동맹"에 대한 대안이 "중국과의 가치동맹"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기존의 우호관계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원교근친"(遠交近親), 즉 "가치의 균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동맹의 논리"와 "자주적 근린외교"가 근본적으로 모순을 일으키는 순간이 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동맹외교는 어디까지나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한도에서라는 '전략적 절제'가 그 전제로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한국이 이 원칙을 넘어서 중국에 대한 비수가 되기를 요구하는 동맹은 근본적으로 위험하다. 미국의 군산학복합체는 동맹에 대한 한국의 로열티(Loyalty)를 압박한다.<sup>96)</sup> 그러나 한국의 동맹외교가 추구할 일차적인 임무의 하나는 그 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평화적 통일에 대한 기여라는 "동맹의 근본적이고 제한적인 취지"를 동맹국에게 인식시키고, 동맹을 그 목적에 부합하게 경영하는 노력이다. 그것이 한국인과 그 동맹국이 함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이며, 동시에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전략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만이 위험하다면, 대분단체제의 구조 안에서 어느 일방의 하수인이 되어 다른 일방의 코앞에서

96) 한 예를 들면, Victor Cha, "Korea's Mistake on China's ADIZ Controversy," CSIS, Korea Chair Platform, December 2, 2013.



그 눈동자를 찌를 수 있는 흉기로 보이는 것은 더욱 위험한 선택이다.

그것은 당장 한미동맹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의 지정학적, 전략적 의미와 기능의 절제를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의 개발을 요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맹의 비군사화도 우리의 미래전략적 사유에 포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유는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급진적으로 보이지만,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본 조건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미래로서 한국인과 중국 뿐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도 진지한 논의와 선택의 대상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사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의한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 즉 최선의 가능성은 그러한 전제와 인식을 한국사회가 포용할 때만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가 그러한 포용적 선택에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 10. 글을 맺으며

탈냉전과 함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된 이후의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이를테면 '이어도'(離於島)와 같은 것이다. 거대한 암초(暗礁)로 된 이 섬은<sup>97)</sup> 기후가 온건한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다. 심한 파도가 쳐야만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기에 그 별명이 '파랑도'(波浪島)이다. 마치 그와 같이 세계질서 혹은 동아시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분단의 골격도 그 실체를 드러내 그것이 내포한 잠재적 위험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함께 그 실체가 모호해 보일 수 있는 대분단체제의 존재형태는 물에 잠긴 암초라고 해도 되겠다. 암초는 드러나게 보이지 않을 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어도로서의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지난 수년간 강풍을 맞으면서 비교적 뚜렷한 실루엣을 드러냈다. 앞으로 이 실루엣은 때때로 경제적 상호의존과 '경제공동체' 논의에 묻혀 시야에서 거의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수심이 깊은 곳이라면 거대한 암초도 잘 보이지 않기 마련이다. 이 거대한 암초가 어느 순간 강풍에 떠밀리는 동아시아의 일견 평화스러운 일상을 깨뜨리기 전에 새 아시아를 위한 비전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간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은 지나치게 경제공동체 중심의 기능주의적 논의로 흘러왔다. 공동안보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뒷전에 있었고, 그만큼 공동안보를 위한 구체적인 어젠다 역시 사실상 부재하다시피 하였다.<sup>98)</sup> 경제공동체 중심의 논의는 경제협력과 교류의 확대가 곧 안보

97) 한국 국제해양법학회 명예회장 김찬규의 설명에 따르면, 이어도는 국제해양법상 섬이 아닌 '수중(水中) 돌기물'이다. 그래서 이어도 해역은 국제법상 '해양경계획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저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치할 수 있다. 실제 한중 양국은 EEZ를 선포한 상태에 있다. 한국은 1995년에 착공해 2003년 6월 완공한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운영을 통해 그곳에 대한 "실효적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해진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81해리(149km), 제일 가까운 중국 섬 동다오(董島)에서 133해리(247km) 되는 곳에 있어 중간선 원칙에 따른 경계획정을 하게 되면 한국 쪽에 속한다. 그러나 중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사국들의 권리주장이 겹치는 곳"으로 간주된다.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석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선 관련 당사국들은 해당 해역의 현상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이 이어도에 설치한 종합해양과학기지가 "해당 해역의 현상을 손상"시키는 것인가가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은 언제라도 그런 주장을 제기하여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김찬규, 「KADIZ 확대 꼭 필요했다」, 『국민일보』, 2013.12.17.)(2013.12.17).

98) 이삼성,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공동체 사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제2호, 2006, pp.33-38.

영역의 공동체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가정을 전제한다. 그러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확대가 안보영역에서의 협력 확대로 직결되는 것이 아님은 멀게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가깝게는 2010년 이후 동북아 국제관계가 웅변해주고 있다.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일, 한미, 한중 사이에는 긴밀한 FTA 혹은 다른 형태로 사실상의 경제공동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단계에 있다. 이와 달리 남북한 관계와 같이 경제공동체적 협력과 상호의존이 거의 없다시피 한 관계에서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은 다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체 형성이 지체되고 있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는 안보 문제에서 공동안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체 형성의 핵심은 경제공동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안보의 문제로 귀결된다. 공동안보의 문제는 경제영역에서의 협력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안보 영역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노력에 달려 있으며, 그 노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안에서 대분단의 기축과 소분단체제 사이의 상호유지적 상호작용 패턴의 한 가운데 있는 한반도는 그러한 노력이 가장 절실한 곳이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아시아 비핵무기시대 구상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의 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그것은 동아시아 공동안보 모색의 긴요하고 적절한 출발점이라고 믿는다. 특히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로 표상되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하루속히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에도, 그리고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한반도 분단 상황의 지속을 예방하는 데에도,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제주, 세계 평화의 섬 10년, 워크숍

동북아, 한반도 그리고 제주의 10년,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남을 것인가

## 제주 세계 평화의 섬 10주년 평가와 과제

고창훈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평가와 전망  
-제주4.3의 사회적 치유 한미공동위원단구성 32개  
항의 청원문과 세계평화의 섬 2050 전망 세우기 -

2015.1.27

고 창 훈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I. 서론 : 섬자치 관점에서 제주4.3치유 한미공동위원단 구성 청원문의 32개항의 의미를 반추하고 세계평화섬 2050 비전을 전망한다.

필자는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평가와 전망의 발제 부탁을 받고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전망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우선 필자는 1982년 제주대 교수 생활 1년 후인 1983년부터 제주4.3치유의 문제 제기와 해결 과제에 대한 고민을 받아 들여 금년으로 33년간 생각하게 되었다. 강산이 세 번 변하고 이제 네 번째의 변화 속에 살고 있다.

2005년 1월 한국정부가 제주도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은 섬 문명 the Island Civilization의 제주형 섬 자치 모델 Island Governance Model을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는 준외교적 역할과 제주4.3진상규명의 노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중심지로 만들어 보겠다는 융합 비전을 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높이 평가했다. 현대사회에서 섬 문명이라 할 때 서양의 영국과 동양의 일본 등 국가가 이루어 낸 섬 제국주의형 문명과 21세기 영세중립국으로서 평화와 환경의 융합한 중남미의 코스타리카의 평화공존형 문명모델이 있다. 제주도는 인구 60만이 되지 않는 지방정부의 지위의 섬으로서 제국주의적 모델은 아예 불가능한 반면, 코스타리카 모델의 평화와 환경 융합을 모색하는 세계평화의 섬 모형을 상정하기를 바랐다. 앞의 두 나라는 20세기 제국주의 섬 국가 모형으로서 인근 나라와 침략 합병하는 침략주의적 성격의 모습을 드러내서 세계평화에는 기여하지 못하여 주변국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일들이 있었다면 21세기 형의 코스타리카 모형은 작은 나라이지만 중남미 평화협정을 통해 인근 나라와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평화의 섬으로서 섬자치모형의 문명 모델로서 2021년까지 나라 전체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환경국가 모델로 나아가려는 국가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헌법 등을 통해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조치와 이를 후원하는 국제기구의 유치 등의 국제적 역할을 후원하는 국가 정책적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공화국처럼 중남미 평화협정에 의해 영세 중립국의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없게 되고 -, 제주 세계평화의 섬은 지방정부의 제한적인 역할 수행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와 국내외적인 지원의 제한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지위라서 코스타리카 모델을 실현하려는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세계평화의 섬 1년 후 중앙정부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하여 제주도의 지위를 일정정도 상승시키려 하였다고 평가하지만 세계평화섬의 지위를 헌법으로 보장받아 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1국 2체제



의 수준의 권한까지 부여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와의 평화문화를 교류하는 비무장 세계평화의 섬 비전을 수용할 수는 없었다. 노무현정부가 세계평화의 섬 비전에 대한 확보한 의지가 결여되어 코스타리카 같은 비무장 평화섬 역할의 비전을 정책목표로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정의 민군복합항 기지 건설이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가 있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 하면서 세계평화의 섬에 무장 해군기지가 있는, 그래서 무력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해군기지를 가진 제한된 의미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수용하였다. 이에 대해 강정 주민들, 환경운동가나 평화운동가나 제주도민들 다수는 제주도는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이미 채택하였으므로 제주도에 평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비무장 평화의 섬 정책을 추진하여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공화국 사례 처럼 비무장 세계평화의 섬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으므로 강정에 해군기지 건설을 완강히 반대한다. 그리고 그 결정과정에서 한국정부는 화순, 위미, 강정으로의 입지선정을 바꾸면서 최종적으로는 강정마을의 소수 그룹만 참여한 마을회의를 통해 비민주적 결의로 결정함에 따라 대다수 강정 마을 사람들은 이의 절차적 부당성을 주요 이유로 하여 오늘 현재까지도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해군기지의 건설로 태평양의 보급로를 확보하고 크루즈 관광과 연계할 수 있고 절차적 정당성을 나름 갖추었다는 긍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강정주민들은 강정해군기지 건설이 강정주민 전체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한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갈등에 대한 우려는 물론 UNESCO 생물권보존지역의 파괴와 강정평화마을의 평화 공동체 자체의 붕괴까지 우려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우려한다. 원희룡 도정은 2014년 강정마을의 문제해결을 위해 강정민군복합항 건설의 진상규명을 시작한다고 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기지건설은 육상 70% 해상 40% 진행 2015년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군사적 지배의 논리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제주도는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관광객의 급증과 중국 자본의 제주도 투자 집중으로 인한 중국 자본 지배력이 커져 제주도의 관광을 결정하는 힘으로 드러나면서 제주관광 중심의 경제가 중국의 자본의 논리에 예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제주도민들이 제주올레를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의 방향잡기가 도민과 관광객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 속에서 받으며 브랜드화를 이루어내고 다른 한편으로 크루즈관광시대의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준비하는 노력 역시 꾸준하게 진행하면서 여행을 통한 평화교류의 가능성을 준비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환경분야에서 UNESCO 세계자연유산의 3개분야 등재와 람사르 습지 지정과 세계환경올림픽의 개최를 통해 제주도가 세계환경허브로서

의 국제적 가능성을 꾸준히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시기라고도 평가들 받는 한편 하논분하구 복원 사업을 중앙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진행시키는 세계적인 시범사업 a World Case Project로 실행하는 정책적 계기를 마련하는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영어교육도시의 건설을 통한 외국계 고등학교와 한국의 고등학교의 집중지 육성을 통해 국제고교 중심의 경쟁력을 배양하는 가능성을 잡아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사립 고교에 대한 너무 과다한 투자로 인한 낭비와 특권화라는 비판 역시 공존한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10년간의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섬 자치의 Island Governance의 관점에서 반추하면서 동시에 향후 10년간 이루어 나갈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 평화교육과 정의를 통한 제주4.3 사회적 치유”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우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치유 한미공동위원단 32개항을 적용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강정평화마을의 복원 문제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지역의 관점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의 제주포럼과 UNITAR의 제주국제연수센터가 제주평화추구의 전통 정립에 기여할뿐더러 제주도가 세계평화를 기여하는 방향을 제시해 나가길 기대한다. 지역의 거점대학인 제주대학교의 연구소인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나 민간학회인 세계섬학회 등도 국제저널 World Environment and Island Studies나 Peace Island Magazine의 발간을 통해 세계평화의 섬 이론화와 평화섬 트라우마 치유사업에 기여하고 세계평화의 섬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하여 : 제주4.3 비극의 추념에서 제주4.3 치유의 관용성 철학과 32개항의 청원문의 “평화교육과 정의를 통한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의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완전해결 시대를 전망한다.

1. 미국하와이대 법전원 교수, 변호사 그리고 평화연구소 연구원들이 “평화 시대 제주4.3대학살에 대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책임- 현재의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를 통한 화해를 살리는 일”을 2014년 9월 24일 하와이법전원의 컨퍼런스에 공식화하고 2015년 3월 민간주도의 한미일 공동의 “ 평화교육과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 국제공동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미국의 하와이대 스파크 마츠자가 평화연구소와 미국 하와이대 법전원은 국

제평화의 날과 헌법의 날 기념 행사로 2014년 9월 24일 평화시대 제주4.3대 학살에 대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책임 - 현재의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를 통한 화해를 살리는 일 (U.S. and South Korea Responsibility for the "Peacetime" Jeju April 3rd Grand Massacre- Revitalizing Reconciliation by Present day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을 개최하여 미국시민들 스스로 제주4.3에 대한 미국이 책임이 있고 이를 해결하여야한다는 독자적인 최초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미국 하와이 법전원과 평화연구소가 공식적으로 제주4.3 대학살에 미국정부의 책임과 이의 해결을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구성 청원운동에의 참여를 요구한 일은 미국시민 스스로 실행한 최초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하와이 법전원은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일본 홋카이도대 법전원이 참여하는 2015년 3월 “ 평화교육과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 국제공동회의”를 개최 하여 제주4.3평화재단이 2013년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의 미국설명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한 미국 의회에 의 “ 제주4.3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구성의 청원문”을 공식 청원하는 일을 제안하였다.

자료 1 : 하와이대 평화연구소와 법전원의 공동 4.3 국제컨퍼런스 행사 팸플렛 (2014.9.24)



Spark M. Matsunaga Institute  
for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www.peaceinstitute.hawaii.edu](http://www.peaceinstitute.hawaii.edu)

## Upcoming Event

**Peace Day & Constitution Day**  
*U.S. and South Korea Responsibility for the  
 "Peacetime" Jeju April 3rd Grand Massacre  
 — Revitalizing Reconciliation by Present-  
 Day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

**September 24, 2014 • 4 – 5:30 pm**  
**Law School, Classroom 2**

**Peace Day Keynote by Professor Eric Yamamoto  
 (Fred T.Korematsu Professor of Law and Social  
 Justice), assisted by Law Student Scholar  
 Advocates, Miyoko Pettit, Katherine Vessels, Maria  
 Amparo Vanaclocha, Nathan Shimodoi, and  
 Janna Wehi A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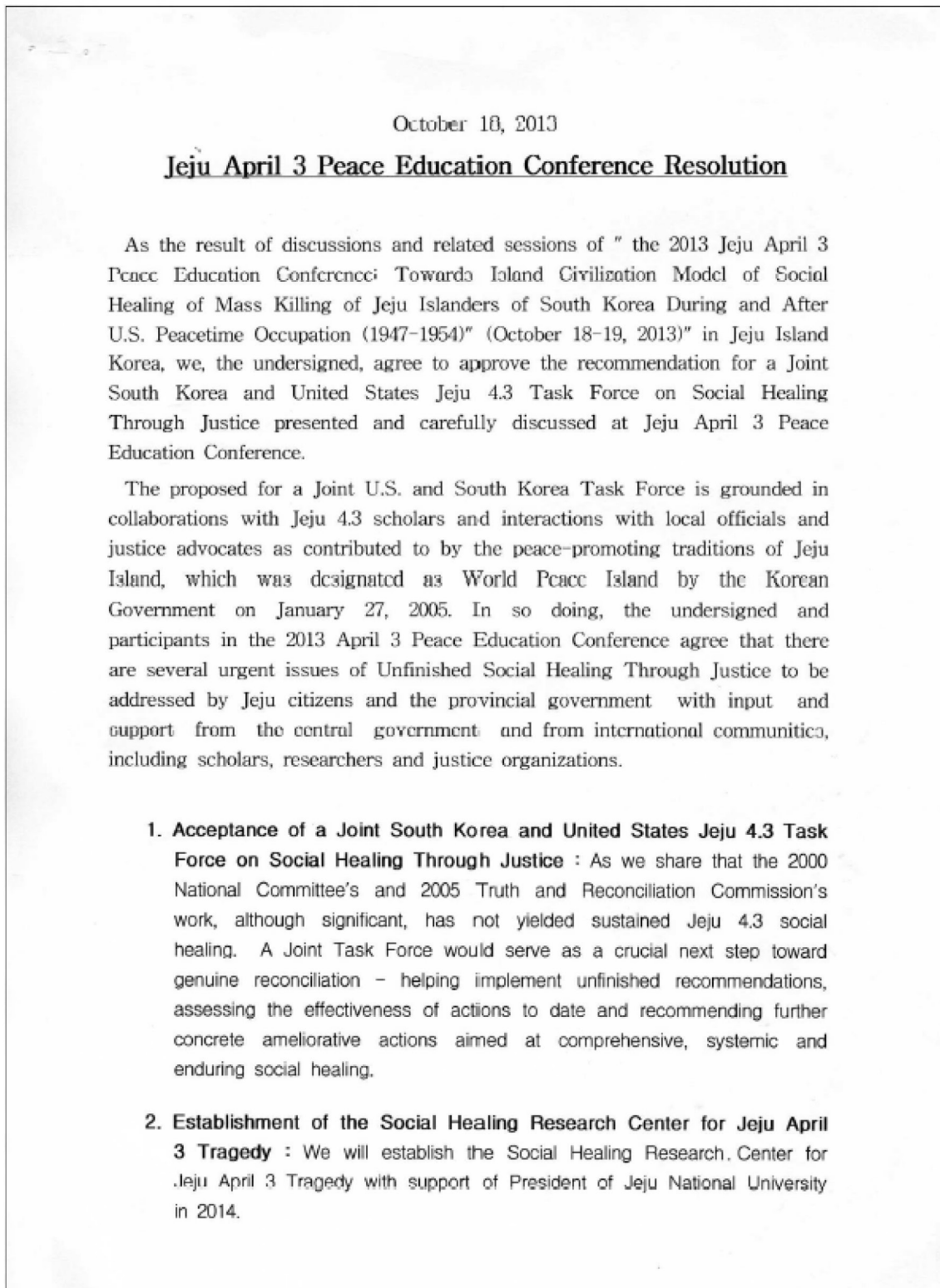


이러한 하와이대 법전원의 제의는 2012년 12월 새누리당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공약에 대한 미국시민사회의 긍정적 반응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의 일 단계 정책으로 2014년 3월 4.3희생자 추념일 지정하여 제주4.3치유의 국내적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조처가 제주4.3치유의 국제적 해결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여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어 내는 미국 시민사회가 미국의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해결책을 미국 정부차원에 요청하는 일이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필자와 국내외 연구진의 자문을 바탕으로 공동 집필한 제주4.3 치유의 국제적 해결방안 연구용역은 우선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의 틀을 “평화교육과 정의를 통한 사회치유 Social Healing Through Peace Education and Justice 에서 찾아나갈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 첫 번째 사업인 “ • 제주4•3치유의 국제컨퍼런스 개최와 미국의회에 제주 4•3치유 공동위원단 구성 청원문 제출”을 민간사회 주도로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청원문의 22조에는 “ 화해가 정제된 또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미국이 배상 정의의 모든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았거나 아예 빠져있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에게 배상과정에 참여하여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에 대하여 미국 대학의 교수, 변호사 연구원들이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책임을 제기하고 제주4.3치유의 전 과정에 참여를 요청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미국 하와이대학교 법전원 교수 에릭 야마모토, 연구원 미요꼬 뿌띠뜨, 연구원 사라 리는 “ 끝나지 않은 과업: 정부 권고안을 심도있게 이행하고 정의를 통한 완전하고 지속적인 사회 치유를 촉진하기 위한 제주4.3 비극 치유 한미 공동위원단 구성과 운영”의 공동논문은 을 2014년 4월 아시아 태평양 법학 및 정책 저널에 발표한다. 이 논문은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연구소의 운영위원원으로 참여하는 정치외교학과 김진호 교수팀이 에릭야마모토 교수의 출판 허가를 받아 2015년 한국에서 이를 출판할 예정이기도 하다.

자료 2 : 제주4.3평화교육 국제컨퍼런스 결의안 (2013.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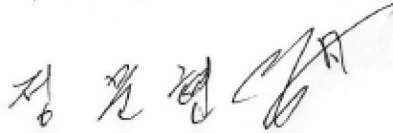


**3. Balanced Implementation of short term action plan upon long term vision of social healing of Jeju April 3 tragedy** : We agree that we make an efforts to practice some shorter term action plans such as institutionalization of Jeju April 3rd Peace Education Conference, Peace Island International Leadership Project and Jeju Peace Film and Art Festival in 2014 as linking-pin programs in the processes of social healing toward establishment of a World Peace Island .

We, on behalf of all participants in 2013 April 3 Peace Education, the undersigned, do hereby support the recommendations outlined above and look forward to actualizing these ideas into a reality of Jeju, World Peace Island.

Representatives

Moon Hyun Jung



Chair person, Jeju April 3rd Victims' Family Association, Korea



Chang Hoon Ko

Director of World Environment and Island Institute,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Eric Yamamoto

Fred T. Korematsu Professor of Law and Social Justice,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University of Hawai'i. US.



Kunihiko Yoshida

Professor of Hokkaido University Law School, Japan



이 공동 논문은 한국 제주의 4.3사건 치유를 위한 한미공동위원장 청원운동을 공식적 차원에서 이론적,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글로서 2014년 4월 9일 “아시아 태평양 법과 정책 저널 Asia Pacific Law and Policy Journal”에 게재 승인을 받아 출간된다. 필자들은 이 논문이 2013년 10월 18일, 제주대학교의 제주4.3평화교육컨퍼런스에 제출되었던 발표문을 발전시킨 글이라고 밝힌다. 이 발표문의 주요내용은 이미 제주4.3치유의 한미공동위원장 구성 청원문에도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This article excerpt explains the structure of and rationale for a Joint Task Force. (It is in final editing form now). Its analysis and suggestions are based upon the work and insights of scholars and organizations in Jeju. The article was first presented at the 4.3 Peace Education Forum at Jeju National University in Fall 2013. Social healing scholars and advocates

in Jeju crafted the Petition in part drawing upon this article ( Eric Yamamoto: 2014.4.9)."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의 “ 정의를 통한 사회치유법학회” 학자들은 제주4.3비극의 사회치유를 위한 한미공동위원장 구성의 청원운동을 미국의 법 학계와 법조계의 참여하에 공식적인 지원을 할 뿐더러 제주4.3 청원운동 학자 들과 관련조직들과 함께 2015년 미국의 의회에 청원문 전달과 이를 지지하는 국제컨퍼런스에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적극 후원한다. 이들은 미국 정 부가 평화점령기인 미군정시대에 제주사람과 사회에4.3비극이라는 엄청난 피 해를 주었던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하였으므로 미국정부는 이와 유사한 다른 사 건에 대해 피해 배상했던 사례 (2차대전 전후의 일본계 미국인 강제구금 사례, 하와이 불법전복과 원주민 학살사례 등)와 동일하게 미국정부가 미국의 인권존 중의 헌법적 가치에 입각하여 책임있게 유족들에게 배상하고, 파괴된 공동체를 재건하는 사회 치유에 참여함으로써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제주4.3사건의 치유 를 위해 불완전한 처리를 했던 부분(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전면 보완하여 희생자 가족에게 개별적 경제적 배상과 함께 공동체적 보상이라는 정당한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려는 결의를 표명한다. 좀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한다.

1) 서론 : 2013년 발간된 제주4.3비극에 대한 정부 진상보고서의 영문판은 3만여명의 사망자와 4만 가구의 소실과 고문 등을 조명한 것으로서 미국에 의 해 한국 평화점령기에 발생한 한국역사의 처절한 비극적 모습을 영어권 독자들 에게 드러내 주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제주4.3사건에

대한 과거 개인들과 공동체에 입힌 손해의 책임과 현재의 사회적 치유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4.3비극의 사회적 치유는 “아직 끝나지 않는 과업”이며, 이 과업의 해결을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구성은 당연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이 논문은 제주4.3사건에 대한 기록과 자료연구와 4.3사건희생자 가족들의 인터뷰, 4.3연구 학자와 4.3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인터뷰와 진상규명 노력 등 3년간의 공동 연구결과물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국정부가 평화시대의 점령기에 발생한 제주 4.3비극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책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미국정부의 책임이 명백하므로 제주4.3의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의 한미공동위원단 구성과 이를 통한 공평한 해결(비극의 인식, 비극에 대한 책임, 비극으로 인한 공동체와 마을의 복구와 재건이라는 공동체 보상, 비극으로 인한 개인적 배상과 진정한 사과)을 이루어 나가는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제주4.3사건의 사회적 치유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국제적으로 조명을 받는 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4.3과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국제적으로 요청한 “평화섬 운동”과 제주특별자치도가 UNESCO 자연과학분야 삼관왕의 선정 지역으로서 “세계환경수도의 모델 운동”의 국제적 성과에 의해 국제적인 조명을 받는 측면이 강한 만큼 제주4.3의 사회적 치유에 이러한 국제적 관점의 “평화섬”과 “지속가능한 환경수도”의 정책이 한반도 정책에도 반영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2) 페루의 1980년대 반정부군의 인권탄압 사회적 치유의 불완전한 사례

페루정부가 1980년 대 반정부군의 저항으로 6만명이 강제 격리되거나 사살되고, 7만명의 행방불명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인권탄압사태가 있었다. 1993년 페루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 이 사건 처리에 관한 사회치유법안을 만들고 처리과정을 밟았다. 하지만 2011년 희생자가족들에 대한 개인적 배상과 공동체 보상이라는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가 천명되어 정책집행이 이루어졌지만 개인적 배상을 1인당 10만원 정도로 하여 “너무 적은 금액과 너무 늦은 조치”라는 당사자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정책적 갈등만 초래하여 전반적인 정책변경이 요구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제주4.3의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의 공동위원단을 구성하는 일 :

가.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위원회)가 미국 정부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만큼 새로운 진상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위원회의 미

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적 정의에 입각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미국이 1988년 시민자유법에 의거하여 아시아계 미국인의 강제구금 피해자에 대해 개인당 미화 2만불 (한화 2천만원)을 배상했던 사례처럼, 희생자 가족에게 배상하고, 파괴된 공동체를 복구, 재건하는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 제주4.3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책임을 확고히하여 양국의 민주주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써 희생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적 정의의 실천을 촉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결론 :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 제주 4.3치유의 한미공동위원단 구성과 아직 끝나지 않는 과업의 실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사건에 책임이 있는 미국정부가 사회적 치유에 참여하여 희생자 가족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사과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제주4.3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구성 청원은 제주민의 당연한 요구이자 미국인, 미국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다.

① 청원문과 청원서명은 제주4.3정부보고서 영문판과 함께 미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주4.3의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 한미공동위원단 구성에 대한 미국의회와 정부, 한국정부, 지방정부 등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야 한다.

③ 제주4.3의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 한미공동위원단 구성과 제주4.3치유 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④ 제주4.3의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 (미국정부의 인식, 책임, 재건, 배상의 완전한 해결)를 실행한다.

⑤ 제주4.3의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를 통해 “ 평화의 섬”이면서 “ 세계화 경수도의 모델”로서의 제주를 정책적으로 미국정부 등이 지지함으로서 한국과 미국민주주의와 안보를 강화하는 일이다.

2. 미국 시민사회가 미국정부에 요청하는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는 미국의 헌법적 인권가치에 입각하여 미군정 점령 평화시대의 부정의한 인권침해 상황 발생과 그 이후 대량학살에 대한 사건의 인식 Recognition,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 Responsibility, 국가에 의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Reconstruction, 국가의 피해를 본 개별 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상 Reparation의 실행”을 의미하므로 ( 청원문 28조 제주4.3치유의



4단계 과정), 한국시민사회가 한국정부나 미국정부에 요청하는 사회적 치유의 내용과 형식이 한국정부의 완전한 해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한국시민사회나 4.3희생자유족회가 이해하기 바란다.

제주4.3의 사회적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는데 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4.3 희생자들에 대한 개별적 배상이 이루어지는 해결이라야 가능한 일이다. 4.3의 공동체적 해결로 제주4.3평화공원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4.3으로 인한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배상을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미국 하와이대에서 2014년 9월 24일 미국 평화주간에 발표한 제주4.3 대학살에서의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책임에서 말한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는 미군정 점령 평화시대의 부정의한 인권침해 상황발생과 그 이후 대량학살에 대한 사건의 인식 Recognition,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 Responsibility, 국가에 의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Reconstruction, 국가의 피해를 본 개별 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상 Reparation의 실행”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하와이대 평화연구소와 법전문 교수와 연구원 변호사들을 제주4.3정부보고서의 영문판 보고서 소개를 위한 버지니아 컨퍼런스와 미국 상원의원을 통한 미국 의회의 청원을 골자로 하는 한미공동위원단 구성의 공동 노력을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 제주 4.3희생자 유족회 등에 공식 제안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제주4.3연구소와 제주 4.3도민회 및 제주민예총의 동의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해 2015년 3월 버지니아 “평화교육과 정의를 통한 제주4.3의 사회적 치유” 국제회의 지원을 제주대학교에 실행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였다. 이미 2014년 4월 “제주도지사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제주4.3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항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고, 2014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자위는 “행자위차원에서 이 사업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과 참여를 약속한 만큼” 최소한의 지원이 제주대학교에 실행하여서 제주4.3의 사회적 치유의 국제적 해결의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청원문 제7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공동위원단은 배상 정의 ( 배상을 하는 약속과 행동)을 촉진하고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공동위원단은 [제주 4.3의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춘] 2000년 국가위원회가 했던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보다 공동위원단의 다섯 가지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정보를 수정하고 미비한 부분을 채움으로써 ( 미국의 협조가 없이 몇 년

전에 종결된) 국가위원회 조사를 강화하고

2) 특별히 새로운 정보와 수정된 정보에 비추어 국가정보위원회 권고안의 완결성을 평가하고

3) 이미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지속적인 피행을 복구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4) 위의 1, 2,3번 관점에서 국가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다음 단계 조치를 제안하고, 완전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사회치유를 이루어내기 위한 더 크고 통합된 사회정의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후 단계를 감독하고,

5) 이러한 일을 수행함으로써 제주 주민을 이롭게 하고, 책임성을 보장하고, 한미 양국의 민주주의 정통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서 배상정의를 촉구한다.

Ⅲ. 평화교육을 통한 사회적 치유 Social Healing Through Peace Education and Justice는 사회적 치유는 제주인의 관용성 철학을 반영하는 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와 Global Peace Bultuk Assembly 등 4.3평화교육의 제도화, 제주4·3치유센터의 설립과 운영, • 제주4·3유적지의 UNESCO 세계문화유산 ( 또는 제주4·3관련 기록물의 UNESCO 특문화유산 등재신청, • 제주4·3평화상의 국제적 실행, 4·3미술제, 4·3영상제, 4·3평화문화국제해설사의 교육 과정 등을 실행해야 한다.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는 제주 섬 트라우마 치유의 국제지원사업 지원 규정의 개정 ( 2014.2.4)에 근거하여 제주4.3의 사회적치유의 국제적 해결 연구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용역 2014.7)을 수행하였다. 연구 용역팀은 지난 5년간 실행한 제주4.3의 세계화사업과 2015년부터 실행을 희망하는 전망 및 정책과제를 표 1: 제주 4·3의 세계화와 사회적 치유의 국제적 해결 전망 및 정책 과제 (1) 제주4·3비극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국제적 해결방안 영역 (2) 제주4·3평화회의 학술과 교육 (Peace Island Leadership Project)의 영역 (3) 4·3예술의 영역 (4) 평화관광의 영역으로 제기하였다.

표 1 : 제주 4·3의 세계화와 사회적 치유의 국제적 해결 전망 및 정책 과제

시 간 영역	세계화 사업 (2010 - 2014)	전망 및 정책과제 (2015-미래)
제주4·3비극 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국제적 해결방안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추모제의 희생자 추념일 거행 (2014)</li> <li>• 제주4·3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청원문 참배식</li> <li>• 4·3 행불자를 위한 진혼제 거행</li> <li>• 4·3 치유센터 공청회 및 관련 용역예산 확보</li> <li>• 제주4·3유적지의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정책 제안 또는 제주4·3관련 기록물의 UNESCO 기록문화유산 토론회 개최</li> <li>• 4·3평화상 제정 제안과 실행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4·3치유의 국제컨퍼런스 개최와 미국의회의 제주 4·3치유 공동위원단 구성 청원문 제출</li> <li>• 제주4·3희생자 진료비의 현실화와 제주4·3치유센터의 설립과 운영</li> <li>• 제주4·3유적지의 UNESCO 세계문화유산 ( 또는 제주4·3관련 기록물의 UNESCO 기록문화유산 등재신청</li> <li>• 제주4·3평화상의 국제적 실행</li> </ul>
제주4·3평화 회의 학술과 교육 (Peace Island Leadership Project)의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ace Island Forum의 4·3평화교육 국제컨퍼런스 연속적 개최</li> <li>• 제주4·3과 그리스 내전 비교연구/ 제주4·3의 다크 투어리즘 연구/제주4·3과 여성에 관한 학문체계의 연구/ 제주 4·3과 동아시아 평화, 식민주의와 문학 국제회의</li> <li>• 미국의 한라산의 학살 등 영문저서 발간</li> <li>• 제주대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 World Environment and Island Studies(WEII) 발간</li> <li>• 제주대 4·3의 이해 E learning/ 제주대 4·3과 세계평화론 개설/ 제주4·3평화 국제연수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ace Island Forum 세계섬지역의 인권포럼으로 육성</li> <li>• 4·3평화교육학과의 설립과 4·3평화교육의 제도화(부록3)</li> <li>• WEII 논문과 4·3 저술의 영문책자 번역발간 사업의 지원</li> <li>• 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의 제도화와 Global Peace Bultuk Assembly의 제주4·3발표의 제도화</li> </ul>



4·3예술의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국제문학제</li> <li>• 4·3예술제</li> <li>• 4·3미술제</li> <li>• 4·3영상제</li> <li>• 4·3문학상</li> <li>• 4·3사진전</li> <li>• 평화음악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예술제를 아태 평화예술제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지원</li> <li>• 4·3미술제 국제미술제로 발전</li> <li>• 4·3영화제로의 육성(부록2)</li> <li>• 4·3국제문학제 정착과 4·3문학상 영어번역판 발간 추진</li> <li>• 제주국제평화사진 비엔날레로의 육성(부록5)</li> </ul>
평화관광의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4·3평화공원을 중심으로 한 다크투어리즘 제안</li> <li>• 제주4·3평화공원을 중심으로 한 4·3문학기행, 4·3예술기행, 4·3평화국제투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평화투어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시함.</li> <li>• 4·3평화문화국제해설사의 육성 제주4·3평화공원을 중심으로 한 4·3문학기행, 4·3예술기행, 4·3평화국제투어</li> </ul>

출처 : 제주4.3 치유의 국제적 해결방안 연구용역 (고 창훈 교수와 8인 공동, 제주특별자치도 : 2014.7. pp. 102-103)

제주4.3치유를 위한 한미공동구성을 위한 사업은 2012년 3월부터 한미일 공동워크숍 (2012.3.29)을 시작으로 하와이4.3 평화문화 콜로키움 ( 2012.11.7), 제주대 4.3평화교육 국제컨퍼런스(2013.10.18)과 일본 홋카이도대와 제주대 세계환경과 섬연구소 세계평화불턱회의( 2013.11.21), 제주4.3치유를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청원발대식 (2014.3.27), 하와이대 국제평화와 헌법 주간 제주 4.3에서의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책임에 관한 컨퍼런스(2014.9.24)와 제주대의 제14차 평화섬포럼 (2014.9.24), 홋카이도대-제주대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 세계평화불턱회의 (2014.11.7) 등 8회의 국제컨퍼런스가 실행되었다.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  
THE MASS KILLING OF KOREA JEJU ISLANDERS  
DURING U.S. PEACETIME OCCUPATION"

**Colloquium Speakers:**

\*Opening Ceremony: Jihee Kim & Yongbum Kim



Professor Ko Changhoon  
Jeju University



Professor Tae-Ung Baik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Professor Eric K. Yamamoto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Introduction by Sara Lee (WSRSL 3L) \*Discussants: Dongyun Yang & Hochun Kim

Professor Ko Changhoon is a scholar who has been on the frontlines advocating for justice for the Jeju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Professor Tae-Ung Baik is a renowned human rights scholar and advocate. Professor Eric Yamamoto is the Fred T. Korematsu Professor of Law and Social Justice.

During its peacetime occupation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initiated and later oversaw the Korean military's and national police's actions resulting in the mass killing and detention of 30,000 citizens residing in the picturesque Korea Jeju Island. The story of the Jeju 4.3 (April 3, 1948) tragedy was hidden from public view for decades until democracy movement-spurred truth commissions investigated and revealed aspects of the harsh reality and the persisting wounds. Since the mid-2000s the national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ward social healing. But those efforts are perceived as incomplete. What's next for South Korea and the Jeju Islanders? For U.S. involvement? For initiatives worldwide aimed at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

**Date:** Wednesday - November 7<sup>th</sup>, 2012

**Time:** 2:00pm - 3:30pm

**Place:** Japanese Cultural Center  
Mānoa Grand Ballroom

2454 South Beretania Street Honolulu, HI 96826

All law students, faculty and staff, and the general public are invited.

Sponsored by the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and the Fred T. Korematsu Professor of Law and Social Justice Endowment and by the World Association for Island Studies and World Environment and Island Institute, Jeju National University.

자료 4 : 홋카이도대-제주대 세계평화불턱회의 Global Peace Bultuk Assembly  
참가 기념 사진 (2014.11.7.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하와이대와 홋카이도대는 2015년 3월 미국 상원의원의 소개를 받아 미국의 회에 청원하고 Barack Obama 대통령 행정부가 2016년 중 한미공동구성위원단 청원문 결의 법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2014년 5월 제주대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에 공식 제안 한다. 이를 위해 2015년 3월 버지니아 카톨릭 성당에서 한미일 학자들의 “ 평화교육과 정의를 통한 제주4.3비극의 사회적 치유” 한미일 3개국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자는 미국 하와이 법전원의 교수와 변호사 일본 홋카이도 법전원 교수들의 제안을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와 천주교 제주교구청 등이 수용하여 실행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구용역의 제주4.3치유의 국제적 해결방안 연구용역의 실행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제주대학교를 통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다.

이 행사 이후에는 2014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제주대와 파리 어메리칸대학교의 4.3치유의 국제 워크숍은 UNESCO NGO 그룹 등과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 워크숍과 과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4.3평화문화와 제주해녀의 해양문화의 지속가능성의 방향을 유럽 국가들과 공유하고 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줌으로써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획하고 있다.



2001년 제주4.3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찾기 위해 시작한 Peace Island Forum은 2015년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세계섬 지역의 인권 평화 포럼으로서의 국제적 방향을 잡아 나가고자 한다. 2015년 평화섬포럼은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으로 2014년 9월 2일 사모아 아피아에서 개최된 UN의 작은섬 발전도상국 지속가능한 국제회의에서 세계섬지도자회의 An Islands-20 Initiative의 제주 유치를 이루어냄으로써 G-20 섬지역과 UNSIDS의 연결 컨퍼런스로서 세계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 4•3평화교육학과의 설립과 4•3평화교육의 제도화 사업은 제주대학교의 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의 제도화와 Global Peace Bultuk Assembly의 제주4•3발표의 제도화시킴으로써 평화대학원 설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WEIS 논문과 4•3 저술의 영문책자 번역발간 사업의 지원함으로써 제주평화학 Jeju Peace Studies의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제주4.3을 중심으로 한 미술제는 아태 미술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 MBC는 4.3평화영상제를 2008년 8월의 제1회 세계섬영화제의 취지와 제주4.3 치유의 국제적 해결책을 융합시켜 2015년 7월 세계섬지도회의의 부대행사로 제2회 제주국제 프레 영상제로 개최하면서 2016년 3월 제3회 대회는 제주국제평화영화제로 출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주4.3의 치유문제와 제주섬의 여신의 UNESCO 유산화를 융합시키는 섬 영화제를 국제대학원의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융합적으로 결합시켜 제주국제평화영화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서귀포시에서 모색할 수 있다면 이는 서귀포시의 예술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지할 필요가 있다.

제주4.3의 경우 다크투어리즘을 통해 세계평화와외의 교류를 권장하는 노력들이 나타난다. 2010년대 제주 4.3연관 박사학위 논문 두 편이 호주의 퀸스랜드와 제주대에서 발간되었는데 둘 다 4.3평화공원의 활성화와 연관을 둔 다크 투어리즘 관련이다. 국제적으로 IIPT (International Institute of Peace Through Tourism)같은 조직이 여행을 통한 평화문화의 공유과 창출에 기여하는 국제기구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넓히고 있는 만큼 제주4.3의 경우도 제주4.3 평화공원을 중심에 둔 다크 투어리즘을 체계화시키고, 휴전선이나 광주, 남경, 오키나와, 히로시마 등 평화문화 도시와 연계한 아시아 평화투어의 개발과 국제적 교육 역시 필요하다.

세계섬학회는 2010년 7월 30일-31일 세계평화불턱회의 Global Peace Bultuk Assembly를 한국 제주대 세계환경과 섬연구소와 일본 홋카이도대 법전원 행사를 후원시작한다. 이 아이디어는 불턱으로 상징되는 해녀문화와 세계 평화의 섬의 평화를 결합시킨 국제청년발표회의로 시작하였다. 그간 제주대, 가파도, 우도 등지에서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두 대학교 중심으로 5회대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 7월 6자회담국의 6개 대학을 초청하는 행사로 확대 실시하여 세계평화의 섬 청년 평화발표회의로 브랜드화한다.

IV. 미국의 하와이 법전원 연구팀은 “4.3의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를 통해 “ 평화의 섬”이면서 “ 세계환경수도의 모델”로서의 제주를 정책적으로 미국정부 등이 이를 지지함으로써 한국과 미국민주주의와 안보를 강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청원문 23조에. “제주를 “평화의 섬”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모델로서 부각되도록 만든 최근의 민초들의 4.3 의 정의를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들은 국제적인 연구를 불러일으켰으며 다시 한 번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 31조에서 ‘... 공동위원단 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의 섬”으로 제주도를 국제적으로 도약시키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 그것이다.

강정마을의 평화를 말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제2의 4.3이라 말한다. 그만큼 강정문제 해결에 국가가 개입하고 탄압했던 부정의 Injustice한 상황이 재현되고, 강정마을은 무참하게 무시당하고 탄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일 것이다. 그 결정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민군복합항을 만들어 가고 있다. 민군 복합항이라고 말하지만 “민”은 없고 “군”만 있다는 강정마을 사람들의 한탄과 저항의 흐름이 이를 반영한다. 2012년 9월 세계환경올림픽에 미국 중심의 NGO 환경단체들이 “강정마을의 사람, 자연 유산을 보호하자는 소위 말하는 강정의제 181 (Protection of the People, Nature, Culture and Heritage of Gangjeong Village) 을 제안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강정마을의 대표와 해외 NGO 단체들과 한국 정부 측, 해군측, 삼성건설, 대림건설 찬성 측 간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9월 15일 의제 결정 투표에서 세계의 NGO 대표들은 의제 채택을 찬성하였지만 세계지방정부의 대표들은 반대가 많아 결국 부결되고 만다. 2014년 지방선거이후 원희룡 도정은 강정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내세워 김태환 도정이나 우근민 도정

과 달리 진상을 규명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해상공정 70% 육상 40%의 공정을 끝낸 강정 민군복합항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강정 마을 사람들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강정마을 사람들이 바라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진정한 의미의 민군복합항이라고 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항으로의 전환까지 염두에 두는 국가정책의 변경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정부가 코스타리카의 영구중립국처럼 제주도가 세계평화와 환경의 선진 국가가 되는 모델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방안을 헌법에 명시하고 6자회담국의 보장을 받는 획기적인 정책적 전환을 포함하는 제주세계평화의 섬 협약 같은 것을 추구하는 정책적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아직까지 갖고 있다. 핀란드령 올란드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규정한 올란드 협약이나,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 협약처럼 북극의 영토 보호를 위해 국가주권의 금지를 규명하는 스피츠베르겐 협약처럼 6자회담국들이 제주도를 6자회담국의 평화완충지역으로 규정하는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제안하여 논의하고 체결하지는 논리라고 볼 수 있다. 최소한 강정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전망을 가능할 수 있게 강정평화마을의 전통을 세계환경 교육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국제협력형 강정국제환경대학원 대학교의 설립을 6자회담국가들의 동의를 받아 설립하고 6자회담국 국가가 참여 대학원을 설립 운영하고 예산은 한국정부가 부담하되 UN의 UNEP과 같은 지위를 갖는 UN 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는 방안을 제안하여 UN에 건의하고 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9년간 강정평화마을 지켜온 강정평화운동을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6자회담국 국가가 대학운영에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강정문제의 진상규명 못지 않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자 강정 평화마을 사람들의 사회적 치유 전략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여 이를 제안한다.

“평화의 섬”이면서 “세계환경수도의 모델”이 될 수 있게 강정마을에 국제협력형 강정국제환경대학원 대학을 강정 마을에 세우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제주도, 강정마을, 한국 정부 등에 건의해 보는 의견을 갖고 있다. 2012년 9월 세계환경올림픽에 미국 중심의 NGO 환경단체들이 “강정마을의 사람, 자연 유산을 보호하자”는 소위 말하는 강정의제 181 (Protection of the People, Nature, Culture and Heritage of Gangjeong Village)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취지를 국제협력형 강정국제환경대학원 대학의 설립을 하고 이를 UNEP과 같은 UN 기구화 건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추구하여야 한다.

2012. 9. 세계환경올림픽에서 제주도가 세계환경 허브가 되기 위한 세계환경



허브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중요한 토론의 과제는 환경과 평화의 융합이었다. 실제 발제를 받았던 제주대학교 정대연 명예교수나 플로리다 대학교 무추사미 꾸마란 교수들의 결론도 “환경과 평화”를 융합시킨 세계환경허브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제안들이 많았었다. 그러한 논의는 강정마을에 평화와 환경을 융합하는 강정국제환경대학원을 국제협력적으로 설립하고 이를 UN기구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그것이 최소한의 대안일 수 있다는 것이 제주4.3의 사회적 치유의 관점에서 강정문제에 제시하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제2의 4.3으로 인식되는 강정평화마을의 비극의 인식과 강정평화마을 살리기에 “평화교육과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가 적용하여 갈등해결의 매듭을 푸는 정책이 나올 수 있고, 그게 긍정적이라면 서로 주체들끼리 논의해 보봐도 좋다고 생각한다. 2011년 11월 제1회 제주4.3국제컨퍼런스의 사회자였던 제주대 조성윤 교수는 제주4.3의 치유를 이야기하면서 제주 4.3이 강정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고, 이에 대해 참여자들 상호간에 논의를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생각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본다.

V. 청원문 32항은 “공동위원단에 공동 참여하는 일은 한미 양국정부와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공동위원단 구성을 촉구하는 이 청원은 그동안의 잘못을 힐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과거 행위에 대한 배상 정의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대응이자 한미 양국의 민주주의 정통성을 증진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책임있는 경제개발에 관한 상호 이해를 넓히는 미래지향의 길”을 여는 것이다.

공동위원단 구성 제안에 미국 시민과 학자 변호사들이 지지하고 참여하고 뜻을 같이하는 취지는 제주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하는 제주평화연구원의 평화포럼 같은 역할을 지지하려는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이 개최한 제주4.3국제포럼에 참여한 아시아재단 한국지부의 피터 벅씨는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해야하는 데 제주평화포럼이 제주포럼으로 바뀌면서 평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취지의 논리를 (The Search for Peace in East Asia Peter M. Beck, Jeju-do, 21 November 2014. “Peace in East Asia is growing more

elusive due to China's increasingly aggressive behavior, North Korea's serial provocations, Japan's historical amnesia and America's distractions. It is vital for Seoul to take the lead in pursuing peace in the region. For starters, let's put "Peace" back in the name of the Jeju Forum! Seoul should also take a more proactive stance toward North Korea“ 아시아 재단의 피터 백씨가 제기하였다. 아울러 그는 제주도가 한중일 정상회의 사무국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일에 다시금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주도가 연안경비협력, 자연재해에 대한 초기 경보체계의 협력, 사막화 대응 협력, 국립박물관 교류사업, 문화축제의 운영도 제안하였다. (Recommendations : “Seoul (and Jeju-do!) should more actively support the Trilateral (C-J-K) Secretariat and pursue negotiations in areas that have little controversy and great need for cooperation: Coast Guard cooperation, a natural disaster early warning system and response, desertification, national museum exchanges, cultural festivals, etc”).

이에 대해 진 행 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우선 제주포럼에 대한 피터 백 선생님의 언급에 대해서 간단히 해명하고자 한다. 제주포럼의 정식 명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다. 즉, 평화가 빠진 것이 아니다. 사실 제주포럼의 60여개 세션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평화에 관한 것이다. 2001년에 출범한 제주포럼은 격년제로 열리다가 2011년부터 연례 개최로 바뀌면서 다보스포럼을 모델로 해서 평화 이외에도 경제, 환경, 여성 등으로 주제의 외연을 넓혀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종합포럼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터 백 선생님의 지적처럼 앞으로 평화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진 연구원은 제주평화연구원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정마을 사람들은 제주포럼이 강정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항의를 한 적도 있을 만큼 제주포럼의 강정문제 갈등에 대한 해결책도 기대한다고 하였다. 제주평화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제주4.3 전문기관인 제주4.3평화재단, UNITAR 국제연수원,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세계섬학회나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연구소 등도 제주4.3의 치유와 제주4.3의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노력을 제도화해 나가길 기대하지만, 여기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어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2014년 5월 28일 제주포럼의 제주대학교 세손에서 그란트 맥칼 제주대학교 석좌교수 (호주 시드니대학교 인류학 교수) 는 제주도가 제주4.3을 극복하면서 7개국문화제 (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호주의 대학교 1개씩 참

여)를 개최하자는 제안은 피터 백의 국제축제 개발 제안과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실행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제안은 2006년 하와이 세계비폭력센터장인 글렌 페이지 교수가 “6자 문화회담 6 Culture Minster Talks”의 제주 개최를 통해 6자회담국의 성공과 세계평화의 섬 정책의 융합을 제시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것을 8년 후 수정 제안한 것이며, 서울대학교 출판부는 글렌페이지 박사와 안청시 박사의 “6자회담국 평화문화 Six Culture Exploration”을 2012년 출간하였다. 7개국 문화제를 출범하고 제주지역은 지역 방송국과 제주대학교가 그 중심에 서서 축제를 진행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제주 MBC가 제주대학교 연구소와 세계섬학회 공동으로 2015년 7월 세계섬지도회의의 부대행사로 제2회 제주국제 프레 영상제로 개최하면서 2016년 3월 제3회 대회는 제주국제평화영화제로 서귀포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다면 이는 서귀포시의 예술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도 높여주고 평화섬 관련 영상인력의 양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9월 3일 세계섬학회는 세계섬 지도자회의의 An Islands-20 Initiative (I-20)를 제주도에 유치하여 민간외교 전략으로서 이를 통해 제주도의 준외교적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 대회는 제주도 4.3이 제주도의 특정지역의 제주도민 (소수집단)에 대한 세계적인 인권침해사태였는데, 이 대회는 UN 작은 섬 발전도상국 39개국과 G-20국가의 섬지역을 연결하는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소수집단의 작은 섬 국가의 권리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려는 대회로 개최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민간외교 차원에서 실행하는 데 제주도도 공식적인 관심을 가져나갈 것을 기대한다. 왜냐하면 G-20 국가의 주요 섬지역의 민간기구가 이 대회를 UNSIDS와 공동으로 주재하면서 G-20 국가에 I-20 대회의 인준을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제1회 대회의 기본 계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 Conference to Find a Voice for Small Island Economies in a Sea of Indifference and Neglect**

무관심과 소홀의 바다에서 작은 섬 경제의 목소리를 찾는 컨퍼런스  
( Seogwipo KAL Hotel, Jeju Island, Korea July 10- 12, 2015  
2015년 7월 10일-12일)

**Conference Rationale:**

The three “E”s of energy security, economic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acceptability are an uncomfortable reality for small islands around the globe. This special conference seeks to celebrate



and extend the importance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Year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by:

에너지 안보,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환경적 수용성으로 대변되는 세가지 “E”는 지구 곳곳에 위치한 작은 섬들의 불편한 현실이다. 이 특별한 회의는 아래와 같은 일을 실행함으로써 작은 섬들 UN이 정한 2014년 작은 섬발전도상국 이해의 해의 중요성을 기념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

- evaluating the consequences of the International Year for the SIDS and other small island economies; 작은 섬나라 발전도상국의 국제기념의 해의 성과를 평가하고
  - assessing the new development related research needed to implement the S.A.M.O.A Pathway (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and 사모아 해법 (작은섬발전도상국의 가속화하는 실천의 양상)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발전관련 연구를 평가하며,
  - exploring options for the SIDS to access the policy agenda of the regional and global economic forums. 작은섬발전도상국이 지역적이며 지구적 경제포럼의 정책 에이젠다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을 탐구하고

Throughout this agenda there is a special emphasis on meeting the challenge of the three “E”s for small islands. 이러한 에이젠다를 통하여 작은 섬들의 세가지 “E”의 도전에 상응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조한다.

The contemporary energy insecurity of SIDS as identified during the International Year of SIDS cannot be redress sole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incapacity. The G-20, APEC and similar market-based forums make essentially economically rationalist decisions regarding their own collective energy security. They do not grant the SIDS parity of esteem or of influence in pursuing this agenda. Indeed even during the International Year of SIDS, the 2014 G-20 meeting in Brisbane did not find a place for an I-20. There was a B-20 for business and a L-20 for labour but no direct consideration of SIDS needs.

국제기념의 해 기간에 명시된 작은섬발전도상국의 에너지 불완전성의

무기력한 역량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상황은 교정될 수가 없다. G-20, 에이펙, 그리고 비슷한 시장 중심의 국제회의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집단적 에너지 안보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주의적 결정을 한다. 그들은 이러한 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 작은섬발전도상국에 존경이나 또는 영향력의 등가적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실제 UN이 작은 발전도상국의 해라고 강조한 2014년에 개최된 호주 브리스베인의 G-20 정상회의에서도 섬-20의 입장을 고려하는 배려는 전혀 없었다. 사업을 위한 사업-20, 노동을 위한 노동-20은 있었지만 작은 섬 발전도상국의 필요에 대한 직접적인 고려는 없었다.

Of the 39 countries that have been rated “extreme risk” on the 2010 Maplecroft Index with regard to energy security, 33 are small island nations, with Singapore, Nauru, American Samoa, Guam and Netherlands Antilles considered most vulnerable. The International Year of SIDS is over but it should not end. Jeju’s I-20 Initiative is needed as a global “de-brief” – a serious and focused assessment – on what the International Year has meant for meeting the energy security needs of the world’s most vulnerable, at-risk small islands.

2010년 에너지 안보를 측정하는 메이플 지수에 의하면 39개의 섬나라 중 33개의 섬 나라가 “극도로 위험한” 수준에 있다. 싱가포르, 나루, 미국령 사모아 괌과 네델란드 안틸레스 섬 역시 취약 지역으로 노출되어 있다. 작은섬발전도상국 이해의 해인 2014년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세계의 작은 섬들의 에너지 안보에 노출된 위험에 대한 심각하고도 집중적인 평가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국제적으로 요약하고 지구적으로 대응하는 섬-20의 주도적 창설이 필요하다.

Jeju’s I-20 Initiative embraces this challenge through a special conference to follow on from the International Year of SIDS and to keep the momentum vibrantly alive. This conference will provide a forum with the SIDS and small island economies at the centre of three-sided dialogue including Government, Industry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Special effort will be made to engage with G-20 states to promote the case for an appropriate mechanism for an I-20 parallel input into the 2015 G-20 meeting.

제주의 섬-20 이니셔티브는 작은 섬나라 연합의 사모아국 애피아 회의에서의 이슈를 포괄하는 도전을 특별회의에 반영 개최함으로써 2014년 작

은 발전도상국 이해의 해에 대한 마련된 국제적 계기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과제로 부각시켜 나가려는 데에 있다. 그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산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제기구의 입장을 포함하는 대화에서 작은 섬 발전 도상국의 에너지 안보의 3차원적 분석과 진단을 하려는 데 있다. 우리들의 특별한 노력은 G-20 국가들이 2015년 G-20 회의에서 작은 섬국가들과 G-20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다루는 섬-20 I-20을 창설하여 이를 제도화시키는 적절한 메커니즘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실천해나갈 것을 G-20 국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이 대회의 사이드 이벤트로 진행될 제15차 Peace Island Forum은 학술적인 차원에서 제주도 하논이중분하구 Hanon Maar Crater 세계적 시범사업 a World Case Project로 출범 제안 지지, 제주국제전기자동차 EXPO 사례의 지원, 제주해녀의 UNESCO 등재 지원, 제주4.3의 사회적 치유 등의 지원을 포함한다.



자료 5 : 2015년 7월 10일 -7월 12일 개최 할

제주의 제1회 세계지도자회의 (The Jeju Islands-20 Initiative) 홍보물

**ISLAND VOIC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IS**

**20 Initiative for both Island Provinces of G-20 and SID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hrough Genuine and Durable Partnership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작은섬 발전도상국의 섬-20 이니셔티브의 2015년 3월 제주 개최를 준비합니다. (G-20 10개 섬지역과 작은섬 발전도상국의 9개국 및 바레인 왕국의 참여를 추진합니다.)

**The 1st Islands- 20 Initiative I-20**

**WAIS**

**Date** March 11<sup>th</sup> - March 14 (Sat), 2015  
**Venne** Seogwipo Korean Airliner Hotel  
**Hosted** World Association for Island Studies (WAIS)  
**Organized** Islands- 20 Initiative(I-20)Organizing Committee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 VI. 결론 세계평화의 섬 2050

오늘의 첫 번째 논의는 제주4.3의 사회적 치유 한미공동위원단구성 32개항의 청원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청원문을 미국 상원의원의 소개를 받아 미국 의회에 청원하여 제주4.3치유의 한미공동위원단을 구성 국제적 해결의 근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2012년 하와이 4.3컨퍼런스-2013년 제주4.3사건정부보고서 영문판 발간과 제주4.3평화교육 국제컨퍼런스-2014년 4.3치유의 한미공동위원단 구성 청원문 32개항 작성과 2014년 9월 하와이대, 제주대의 제주4.3국제컨퍼런스 개최, 2014.11. 홋카이도대 제주대 세계평화불턱회의 개최와 제주4.3평화재단과 탐라문화연구원의 제주4.3국제컨퍼런스를 거치면서 2015년 3월 미국 버지니아의 한 미 일 3개국 4.3 컨퍼런스와 미국 의회에 청원문 제출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사되어 제주4.3치유의 국제적 해결방안이 되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제2의 4.3이라고 말해지는 강정평화마을의 민군복합항 건설 갈등에 대한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의 대안으로 강정마을의 평화를 보호하고 계승하는 가치 강정평화국제대학원을 강정마을에 설립하고 강정마을과 제주대학교 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주도와 중앙정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주도가 강정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하려는 노력은 지난 김태환 도정이나 우근민 도정과 비교할 때 진일보한 대안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진상규명 이상으로 2012년 세계환경올림픽 참여자들이 제안했던 강정의제 181 (Protection of the People, Nature, Culture and Heritage of Gangjeong Village)에 대안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코스타리카 모형처럼 인근 나라와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평화의 섬으로서 섬자치모형의 문명 모델을 받아 들여 코스타리카처럼 제주도 전체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환경국가 모델로 나아갈 수 있는 장기적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제주도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헌법 등을 통해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조치와 이를 후원하는 국제기구의 유치 등이 후원하는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공화국처럼 중남미 평화협정에 의해 영세 중립국의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없게 되고 -, 제주 세계평화의 섬은 지방정부의 제한적인 역할 수행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이고 국내 외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어 코스타리카 모델의 실현하는 일에는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제주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1년 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지만 평화섬 정책의 지위를 헌법으로 보장하여 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1국 2체제의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여 세계평화문화를 교류하는 비무장 세계평화의 섬 비전을 아직 한국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한국정부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그 수용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0년과 2006년 쓰알의 소리 및 2002년 제주특별자치도가 통일 한국시대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국제적 지위를 헌법에 보장하면서 6자 회담국의 동의를 받는 방향에서 통일한국 3개국 연합 ( United Three States of Korea : North Korea, South Korea and Jeju Island Korea)을 제시한바 있다. 통일 대박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2015년 세계평화의 섬 10주년에 이러한 제안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노무현정부가 세계평화의 섬 비전에 대한 확보한 의지가 있고 코스타리카 같은 비무장 평화섬 역할을 비전을 정책목표로 설정할 수 있었다면 강정의 민군복합항 기지 건설이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가 있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 하면서 세계평화의 섬에 무장 해군기지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한다는 정책 논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비전이 없었고 “해군기지를 가진 제한된 의미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강정 주민들, 환경운동가나 평화운동가나 제주도민들 다수는 제주도는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공화국처럼 비무장 세계평화의 섬으로 정책을 국가가 추진하면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강정에 해군기지 건설을 완강히 반대한다. 그 결정과정에서 한국정부는 화순, 위미, 강정으로의 입지선정을 바꾸면서 최종적으로는 강정마을의 소수 그룹만 참여한 마을회의 비민주적 결의로 결정함에 대다수 마을 사람들은 이의 절차적 부당성을 주요 이유로 오늘 현재까지도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해군기지의 건설로 태평양의 보급로를 확보하고 크루즈 관광과 연계할 수 있고 절차적 정당성을 나름 갖추었다는 긍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강정주민들은 강정해군기지 건설이 강정주민 전체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한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 대한 우려는 물론 UNESCO 생물권보존지역의 파괴와 강정평화마을의 평화 공동체 자체의 붕괴까지 우려하는 부정성을 제기한다. 원희룡 도정은 2014년 강정마을의 문제해결을 위해 강정민군복합한 건설의 진상규명을 시작한다고 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기지건설은 육상 70% 해상 40% 진행 2015년말 완공될 예정이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2012년 세계환경올림픽 세계환경 NGO 참여자들이 제안했던 강정의제 181 (Protection of the People, Nature, Culture and Heritage of Gangjeong Village)의 대안을 일부분이라도 반영한

다는 차원에서 강정평화대학원 대학교를 강정마을에 세우고 이 대학교를 UNEP과 같은 UN환경기구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환경과 평화”를 융합해 나갈 수 있도록 강정마을회, 중앙정부,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 민주연합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